

제429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정기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1일(월)

장 소 제2회의장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 부별심사: 비경제부처

상정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3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3
 - 부별심사: 비경제부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허성무 위원 의사진행발언.....

○고민정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고민정 위원님 먼저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배준영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예.

○고민정 위원 오늘 금거북이로 매관매직을 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출석해야 될 날임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뿌리가 어디까지 썩었는지 놀라울 지경입니다.

서희건설 회장은 600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건네줘서 총리 비서실장을 사고, 이번에는 장관급 인사입니다. 국가교육위원장, 7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금거북이 말고 무슨 뇌물을 더 바쳤는지, 교육자로서 양심의 가책은 받고 있는지를 따져 물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예결위원장님께서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불출석을 허

용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도 지난주에는 불참했었지요. 국교위, 본인이 출근해야 되는 회사에도 무단결근했습니다. 이는 증거인멸을 시도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당연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의 대가는 결국은 법원에서 치러질 테지만 본인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최소한 국민들 앞에 나와서 석고대죄를 하고 국가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 책임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는 모습 정도는 보였어야 되고, 예결위 위원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향후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장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병도** 배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준영 **위원** 배준영 위원입니다.

저도 출석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황을 보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세 분 하루종일 한 분도 안 나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대통령 일정 보좌라고 돼 있는데, 대통령 돌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돌아오셨지요? 그리고 미국에 가셨을 때는 국가안보라든지 국내 업무라든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비서실장까지 가서서, 세 분 다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상적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지금 예결위가 열리는데 비서실장님, 안보실장님, 정책실장님 모두 다 안 나오셨어요. 이것은 국회를 좀 깔보는 처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사회수석님, 미래수석님, 홍보소통수석님 다 훌륭하신 분들이라서 다 답변은 잘하시겠지만 저희가 좀 궁금한 것은, 이번에 대통령께서 방미를 성공적으로 순방을 마치셨다 그러니까, 또 관련된 무용담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관련해서 여쭙보고, 3500억 그리고 추가적인 1500억 그리고 LNG를 사는 1000억 원 포함해 갖고 과연 어떤 수준의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우리 국민에게는 어떤 부담이 돌아오는지 그리고 관련된 팩트 시트도 없고 공동 기자회견도 없고, 대통령께서 오셔서 저는 기자회견 정도는 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너무 캄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세 분이 모두 가셨으니까 그중에 한 분 정도라도…… 물론 여기 양해 여부에는 동그라미가 돼 있어서 안 나오신다고 돼 있는데 위원장님, 세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나오셔서 방미 성과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성무 위원님.

○허성무 **위원** 저는 조현 외교부장관님께 ODA 사업 등에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속개 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첫째, 2000년에서 2004년 연도별…… 24년입니다. 2020년에서 2024년 연도별 ODA 사업별 이·전용 및 불용 현황을 주시고요. 부서장 전결, 이사장 승인, 외교부 승인, 기재부 승인을 구분하여 제출해 주시고요. 이·전용, 불용을 제외한 집행률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둘째는 윤석열 정부 재임 기간 중에 임용된 KOICA 상임이사 관련해서 임용공

고문, 서류·면접 단계별 후보자별·면접자별 점수 사본 그다음에 상임이사 선발 단계별 관련 근거 규정, 최종 후보자별 제출 서류상 이력 그리고 또 최근 10년간 역대 KOICA 상임이사 최종 후보 추천 수, 최종 선정자 순위 현황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1981년 8월 24일 자 외교부 ‘통일교의 남미 진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은옥 교육부차관님께 자료 요청드립니다.

사학연금 가입자의 산재 휴업급여 제도 부재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제출된 민원 상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통령실 세 실장님 출석 관련해서는 양당 간 사님들이 한번 논의를 더 해 주셔서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배용 국가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고 오늘 부별심사에 무단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국회 예결위가 결산을 통해서 각 정부기관에서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 살펴보는 것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물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각 기관장 또한 국회에 출석하여 국민의 질문에 답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배용 위원장은 본인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자 돌연 휴가를 내고 오늘 예결위도 자진출석 대상이라는 이유로 국민 앞에 서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은 공직자로서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서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무단 불출석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가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배용 위원장은 조속히 예결위에 출석하여 국회의 결산심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소영 간사, 박형수 간사, 두 분 간사께서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향후 예정된 결산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 부별심사: 비경제부처

(10시10분)

○위원장 한병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시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질의 답변 포함 10분, 보충질의는 답변 포함 5분입니다.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간단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 산회 시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 접수를 마감하오니 마감 시한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상 위원** 서울 금천구 출신 최기상 위원입니다.

지난주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재명 정부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무엇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결정하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정책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크게 세 가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범죄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난, 빈곤입니다. 세 번째는 불평등과 차별입니다.

먼저 오늘은 범죄에 관해서 그리고 그중에서도 교제폭력 관해서 경찰청과 행안부, 법무부 등에 질의하려고 합니다.

경찰청 기획조정관님 어디 계십니까?

○**경찰청기획조정관 도준수** 예, 나와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교제폭력 관해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관해서 예산과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가요?

○**경찰청기획조정관 도준수** 현장에서 넉넉할 정도의 수준까지는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아니지요. 올해 화성에서 있었던 납치 살해사건의 주요 타임라인입니다. 아홉 번에 걸친 경찰 신고, 고소장 제출, 변호사의 고소보충이유서 그리고 사안이 중대하니 신속히 수사해 달라는 의견 등을 제출하였으나 결국은 숨어 지내는 상황에서도 가해자에게 납치되어 살해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건이 통계를 보니까 2024년만 하더라도 친밀한 관계에 의한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최소 181명 그리고 살인미수 등까지 포함하면 55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최소입니다, 언론에 나타난.

혹시 법무부장관님, 이런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생각보다 많은가요, 적은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최기상 위원** 교제라는 아름다운 말 뒤에 폭력이라는 말이 붙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수많은 여성들이 교제하는 것도 불안해하는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법무행정을 책임지시는 법무부장관님과 행안부장관님, 경찰청 그리고 저희 국회에서 긴급하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고민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통계를 모두 기억을 해 주십시오. 최소 이틀에 한 명의 여성이 살해당합니다. 15.8 시간마다 한 명의 여성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합니다. 이런 유의 기사는 머나먼

후진국에서나 나오는 기사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법무부장관님, 이 문제 바로 즉시 해결해야 되겠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빨리 범정부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기상 위원**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피해자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하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법무부나 경찰청의 국정과제는 교제폭력 관련한 피해자 보호도 포함돼 있고 여성가족부에도 통합 지원 그리고 교제폭력을 법제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된다면 피해자의 신속·안전한 일상 복귀의 기대효과가 있다고도 하셨네요.

문제점은 이에 대한 인식이 일선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교제폭력은 강력범죄의 전조라고 합니다. 이 가해자들의 특성이 피해자를 지배하려고 하고 자기 손아귀에 넣고 함부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살인사건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피해자 보호 조치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 대부분 현장 종결되고 검거율도 매우 낮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에서는 경찰청의 현장 대응의 문제가 우선 지적되고 있고요.

법원행정처 처장님도 나오셨겠습니까만 관련한 조치에 대한 법원의 청구에 대한 기각률이 높다는 말씀도 우선 드립니다.

특히 경찰 관련해서는, 물론 기획조정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인력도 부족하고 또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교제폭력 사건의 특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선의 경찰관들이 이 부분을 숙지하신 전문가로 꾸려져야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피해가 누적되어야 겨우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신고할 당시에 그다음에 첫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미 많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강력범죄로 나아간다는 예상을 해야 되지요. 특히 심리적 지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잘 못하거나 신고한 이후에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가해자의 말만 듣고 현장에서 종결해 버린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후에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국가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형법과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이 있는데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 법률안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 각 부처에서 반드시 살피보시기를 바라고요.

해결책이라고 논의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피해자 보호조치 관련해서는 실은 전 국민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리고 이웃들이 함께 지켜 주지 않으면 늘 불안함이 가실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후 구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전에 예방이 되어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첫 상황에 대한 초동 대응, 경찰에서 정말 신경 쓰셔야 된다. 말씀드린 대로 보복이 두려워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거나 하는 경우에 상관없이 엄정 수사해야 된다. 초기부터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피해자 공백이 없게 저희가 법 개정을 바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며칠 전에 보니까 경찰청에서, 관계성 범죄라고 하잖아요. 대응하는 범부처 협의체를 만들 거라고 나왔어요. 맞습니까?

○경찰청기획조정관 도준수 예, 그렇습니다.

○최기상 위원 언제 첫 회의 합니까?

○경찰청기획조정관 도준수 지금 현재 스토킹과 관련해서……

○최기상 위원 아직 안 정해졌지요?

○경찰청기획조정관 도준수 예, 그렇습니다.

○최기상 위원 행안부장관님, 법무부장관님, 빨리 회의 시작하시고 대응을 마련해 주십시오. 마냥 정부 부처, 여러 부처 모여서 하듯이 회의하시면 해법 안 생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예산안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안에 이렇게 민생범죄 관련해서 경찰도 충원하고 장비도 확충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관련해서는 여러 시스템도 연계 강화한다고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 우리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성과, 현장 그리고 증명의 정치로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명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생명을 살리셔야지요. 경찰이 현행 법령 안에서 최대한의 적극적인 조치를 바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일부 책임이 물어지는 것도 경찰청 차원에서 그리고 법제화해서 뒷받침해야지 겨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기획조정관께서 짧게 한마디해 주시고 두 분 장관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기획조정관 도준수 현재 교제폭력과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또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점차 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조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말씀 주신 대로 교제폭력에 대한 인력 확충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것이고요. 또 현장 인력들이 교제폭력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기상 위원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정성호 사건이 인지된 그 초기부터 전담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신속하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잠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또 법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경찰청에서는 관련한 제도를 저희 의원실에 와서 꼭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기획조정관 도준수 예, 알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존경하는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웅 위원** 대구 중구남구 국민의힘 김기웅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우선 외교부장관님께, 지금 아주 투명하게 답이 잘 안 나와서 그런데 급거 한일 정상회담 배석하지 않고 미국으로 가셨던 이유, 그러니까 직항도 구하지 못한 채 경유해서 가는 항공편을 타고 21일 날 미국을 가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당초에 한미 간의 협상이 아주 긴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측에서 최종 점검을 같이하자는 의견 제시가 있었고 그래서 당초에는 제가 금요일 날 오전 첫 비행기로 가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주미한국대사관에 있는 직원으로부터 가급적 일찍 와서 상황을 보고받고……

○**김기웅 위원** 그러면 미국 측 요청에 따라 빨리 가게 됐는데 그 전에 한일 정상회담 배석은 안 하고 미국 갈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네요?

○**외교부장관 조현** 저는 당초부터 사실은 일본 수행은 고려치 않고 있었습니다.

○**김기웅 위원** 하여간 일본 수행은 안 하고 미국 갈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런데 두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장관님 일정표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외교부에 떠 있는 장관님 일정표입니다.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항공편을 보니까 제가 항공사의 국적기에 물어봤더니 비즈니스는 상당히 만석이 많지만 퍼스트 클래스는 하루이틀 전에만 얘기해도 한두 자리는 있다. 그건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는데.

그리고 저 일정표가 미국 가시기 전에, 저희가 며칠 동안 계속 보고 있는데 미국 가시기 전에 올라왔다면 21일이든 22일, 말씀하신 대로 22일에라도 방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갔다 오신 다음에도 지금 25·26·27일 미국 출장이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항공편을 사실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미리 준비를 하고 예정을 하고 있었다면 상식적으로 제가 일을 해도 날짜별로 해서 국적기 예약을 하나씩 해 놓고 있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고 조금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걸 준비를 못 하고 갑자기 직항도 못 구하고 갔다면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 즉흥적이고 사실 준비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고 저 일정표를 보시다시피 사전에도 사후에도 저렇게 올라와 있다면 저희가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외교부장관 조현** 우선 저는 일등이나 비즈니스냐를 구분하지 않고……

○**김기웅 위원** 그렇지요. 구분할 필요 없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래서 그동안 일등 탄 것은 한 번인가밖에 없고……

○**김기웅 위원** 아니, 일등 이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기웅 위원** 좌석을 못 구한 이유를 여쭙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등이나 비즈니스냐를 구별하지 않고 되는 대로 가겠다 그게 제 지침입니다.

○김기웅 위원 그런데 표를 못 구하셨다는 거잖아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한두 자리는 있다는데, 하루 전에만 얘기해도.

그리고 미리 미국 갈 계획이고 한일 정상회담 안 가실 거였으면 21·22·23 해서 비행기 표 하나씩 예약해 놓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래서 금요일 오전으로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일찍 오는 게 좋겠다 해서 목요일 저녁으로 해서 가게 됐고요.

○김기웅 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했는데 내 말은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도 해 보지만 날짜별로 하나씩 예약하는 것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장관님 일정, 미국 가는 건데 그것을 그날 아니면 안 된다고 그것만 딱 해 놓고 ‘아이고, 하루 당겨졌네.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준비가 소홀한 것 같고.

저 일정표는 어떻게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 일정표는 저희 비서실에서 업데이트를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늘 가지고 다니는……

○김기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기 전에 올렸다면 22일 날 예정으로 올랐어야 되고 갔다 온 다음에도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저게 뭐라고 할까, 좀 저희가 걱정되는, 일이 저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뭔가 일이 좀 두서가 없는 것 같다 내지는 좀 정신들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대통령님하고 안보실장께서 미국 가시기 전에 했던 발언 좀 올려 주세요.

보시지요. 발언 보시면……

띄워 주세요.

위성락 실장, 대통령께서 이번 방문 목표가 양국 간의 합의를 공고히 하겠다, 정상 간 대화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용 보이시지요?

그러면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방향성이든 추상적이든 기본적인 공동발표나 공동성명, 자세하게는 안 하더라도 뭐 이렇게 하기로 하였다라든가 이번 정상회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실무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라든가 말을 쓰자면 얼마든지 가능한 문구들이 있는데 당초부터 우리가 공동발표나 공동성명을 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하려고 했는데 미국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원만치 않았던 건가요?

○외교부장관 조현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옵션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공동성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진척이 된, 거의 다 합의에 이른 분야도 있고……

○김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율이 잘된 것도 있고 조율이 안 된 것도 있어서 그냥 몇 가지만 하기보다는 실무 협의 끝난 뒤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 주요 쟁점 한번 띄워 주세요.

보시지요.

한미 간에 7월 31일부터 지금까지 죽 있었던 입장 차이입니다. 지금 조율된 것은 됐다고 얘기하시고 조율이 안 된 것은 안 됐다고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쌀,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에 대해서 우리는 안 한다고 얘기했고 저쪽은 일부 개방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저 문제는 조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쌀, 농산물 추가 개방에 대해서는 미측의 요청이 없었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저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아예 언급이 없었다는 거지요, 저 문제는?

○외교부장관 조현 맨 처음에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적극 설명하고 문제점을……

○김기웅 위원 거기에서 반론이 없었나?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렇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투자펀드 수익배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와 미측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것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을까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 문제는 지금 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밝히기가 어렵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김기웅 위원 그러면 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 문제도 이쪽하고 저쪽의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것도 얘기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패키지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정상회담 자체에서 오간 언급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패키지로 덮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밝히기가 어렵다 그 말씀인 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자동차 관세는요?

○외교부장관 조현 자동차 관세는 기본적으로 그전에……

○김기웅 위원 15% 했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런데 지금 25% 물리고 있잖아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것도 이 패키지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언제 15%로 내려서 시행할지는 그것도 패키지에 물려 있다?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면 알래스카 LNG나 미국산 무기 같은 것 새로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측이 답변하신 게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것은 기본 방향에 대해서만 대강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동의했다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기본 방향입니다.

○김기웅 위원 방향이든 어쨌든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미국 측이 얘기한 LNG 참여

나 미국산 무기 대량 구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공감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김기웅 위원 구체적인 것은 협의를 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나눈 것을 보면 정상회담을 해서 아까 처음에는…… 사실 정상회담이 중요한 쟁점을 타결 짓는 계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밑에서 협의해서 잘 안 되는 것을 정상들이 만나서 결단을 내리고 거기서 타결 짓고 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하는 거지 정상들이 만났는데 타결을 못 짓고 실무자들이 얘기해 보라, 그것 정상들이 합의 못 한 것을 실무자들이 합의한다는 것도 저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것을 사전에 조율하다가 조율된 것은 조율된 것대로 공동발표문에 담고 조율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정상들이 만나서 결단을 내고 거기서 뭔가 조율이랄까, 협의를 보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발표를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어느 것 하나 분명한 게 없어요.

원자력협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측이 제기를 했나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제기했습니다.

○김기웅 위원 미측이 뭐라 하던가요?

○외교부장관 조현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김기웅 위원 거기도 공감을 했다 이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진전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대부분 답은 모호해요. 지금은 어떤 것도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실무 협의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 정상회담을 왜 하셨어요?

○외교부장관 조현 저는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간의 첫 정상회담으로서 좋은 첫출발이었고, 특히 반미·친중·반일·친북이라는 터무니없는 프레임이 이재명 정부에 씌워져 있었는데 이번에 그 X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런 우려를 말끔히 해소한 데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이미지를 개선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외교부장관 조현 그래서 정상 간에 신뢰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또 9월 유엔에서의 정상회담……

○김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때 추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부산 사상의 존경하는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김대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현 외교부장관님하고 그리고 임기근 차관님 그리고 시간이 되면 국무조정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 장관님, 미국 다녀오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정상회담은 말의 성찬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네트워크를 활용합니까? 외교부 어떤 네트워크를 활용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외교부·국무부 간의 네트워크가 있고 또 양국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 간에 있고 또 이슈에 따라서는 여러 관련 부처들이 다 직접 소통도 해 왔습니다.

○김대식 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국회 대표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의장님의 특별 부탁도 있었고 그래서 다녀왔는데, 혹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을 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테드 크루즈를 한 번이라도 만나 본 적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멤버 중에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텍사스주 출신인데,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경선에서 맞붙다가 양보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해서 테드 크루즈가 가장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장관들도 계속 추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테드 크루즈를 반드시 한번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감사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다음에 폴라 화이트 목사를 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모릅니다.

○김대식 위원 폴라 화이트 목사는 멜라니아 여사부터 미국의 백악관에서 매주 일요일날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고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님인데, 여성 목사님인데 이분도 꼭 한번 만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시면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김대식 위원 이 두 분이 트럼프의 정신적·정치적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조언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럭키 톱 5를 들라고 하면 이 두 분은 반드시 들어간다 이렇게 때문에, 조현 외교부장관님께서 그동안에 저보다 훨씬 외교 전문가시고 이렇게 때문에 이 두 분은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꼭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김기웅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한미 정상회담 오벌 오피스에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발변수 없이 무난히 잘 마쳤다 이것은 높이 긍정적으로 제가 평가를 합니다.

다만 공동성명이 없이 끝났단 말이지요. 이 공동성명은 양국 정상 간의 굉장히, 합의 사항을 담아서 이렇게 발표하는 건데 이게 하나도 합의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합의가 됐는데 관례대로, 장관님은 발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왜 공동성명이 없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공동성명을 위해서 사실은 막판까지 양측이 치열한 협상을 했습니

다. 일부 분야에서는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앞서 질의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관세 또 투자 이런 분야에서는 숫자가 많이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국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구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대 이것을 집어넣는 것은 안 된 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는 그렇다면…… 저희는 그것도 고려를 했습니다. 여차하면 그런 것만 제외시키고 합의된 것만 발표하는 것도 했는데 미측으로서는 그러면 이것을 협상을 다 완료한 후에 적절한 계기에 발표하자 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보다는 그것이 낫겠다고 해서 공동합의문이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않더라도 트럼프 정부에서 공동발표문을 왕왕 발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결국 진짜 협상은 이제부터 저는 좀 시작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민감한 사항에서 합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동성명이 없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하나도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것도 정상회담 전에도 있었고 또 마지막 수칙에서 조율해야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이번에 76번째 한미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76번째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제가 그 수칙은……

○김대식 위원 76번째인데 인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들은 정상회담이 끝나고 이 발표를, 공동성명을 발표한단 말이지요. 하는데 유독 우리 대통령이 가서, 이게 한미 정상회담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공동성명이 없기 때문에 ‘야, 이것 한미 관계가 제대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국민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물밑 작업을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민감한 사항 이런 부분이 합의에 도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못하는 그런 방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기웅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현안을 가지고, 농산물 문제라든지 LNG 가스 문제라든지 국방 문제라든지 방위비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부터 조금 굉장히 어려운 시절로 들어가 가지고 다시 미국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청구서를 내밀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이것을 실무진에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이번 정상회담은 무엇보다도 한미 정상 간에 큰 신뢰와 우의를 돈독히 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국방 문제라든지 한미 간의 미래협력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미측에서 요구하는 투자 분야에, 작은 것 같지만 저희 정부로서는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에 보고 없이 합의해 낼 수 없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문이 발표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나쁜 합의문보다는 없는 합의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저는 장관님 말씀에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좀 의심이 가는 게, 그러면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이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래도 귀국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알권리가 있으니까 설명해 줄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정당당하게 한미 정상회담 이런 이야기가 있고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간다, 국민 여러분 하여튼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니 까 안심해라.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아무런 그제 없으니까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 큰 청구서가 날아오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외교부장관 조현** 대통령실의 관련 실장들께서 이미 언론 발표, 언론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아마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진행되는 상황을 보아 가면서 국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마지막 질의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녀왔고, 정치·주식·경제 이런 건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오늘 세 실장이 다 가셨으니까 오셔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까지 한미관계는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는데 대통령 수행하고 하신다고 해서 전혀 참석을 안 하니깐 깜깜이 소식밖에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외교부장관님한테 질문하면 기본적인 답변밖에 듣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 위원** 사회정책수석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를 1.48% 올리기로 했습니다. 23년, 24년 2년간 동결됐는데 처음 3년째 올리는 겁니다.

정부는 지역·필수 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고물가·저성장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출을 효율화하려면 건강보험 재정이 어디서 새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수석님, 건강보험 재정이 가장 많이 새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 문진영**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실손보험 같은 경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윤 위원** 제가 지난 예결위 질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손보험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11조가 누수되고 있고 실손보험 자체도 의료기관의 허위 청구와 부당 청구 때문에 약 2.6조 원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11조가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이번 건강보험 인상률 기준으로 하면 8년간 건강보험료를 안 올려도 되는 돈이고요. 실손보험료 역시 최근 4년간 실손보험 인상률 평균으로 하면 2년 동안 실손보험료를 올리지 않아도 되는 막대한 규모의 재정 누수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심사를 연계하는 것입니다. 두 심사를 연계하면 의료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막을 수 있고 허위·부당 청구를 막으면 실손보험과 관련된 남용을 줄임으로써 건강보험·실손보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손과 건강보험 심사 연계에 대해서 수석님,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 문진영**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윤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처음 얘기된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소위 공·사보험 연계라는 이름으로 두 보험의 여러 연계 정책에 대해서 논의가 됐는데 제가 위원으로 참여해 보니 두 부처 모두 실제로 뭔가를 개선할 의지는 없었고 일종의 보여주기 식의 위원회만 계속 했습니다. 부처 이기주의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 문진영** 예, 잘 알았습니다.

○**김윤 위원** 이어서 자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20년 넘게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국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냥 1위가 아니고 평균 대비 2배 넘는 1위의 자살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OECD 국가의 평균을 넘어서서 그래프 밖으로 튀어 나갈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석님, 자살률을 낮추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 문진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 1위라는 민망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실 자살시도자나 또는 그 유족 그리고 감성노동자와 같은 고위험, 특히 채무에 추심을 당하는 사람들과 같은 고위험군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윤 위원** 생명 존중 문화 또는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과 같은 보편적 방법도 있고 학교 또는 독거노인들과 같은 일종의 고위험군을 관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가장 자살 위험이 높은 군은 자살시도자와 유가족입니다.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 문진영** 그렇지요.

○**김윤 위원** 자살시도자는 일반인에 비해서 자살 위험이 25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살시도자와 유가족을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관리하면,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받게 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과 연계해 주면 자살률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살시도자와 같은 고위험군이 잘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방과 경찰이 자살시도자의 신고 전화를 받은 건수 중에서 사후 관리를 할 자살예방센터로 연계된 비율이 소방은 14%, 경찰은 58%에 불과합니다. 합쳐서 계산을 해 보면 자살시도자 중에 최소 약 5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가 방치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자살률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요, 수석님?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 문진영** 예, 저도 동의합니다.

○**김윤 위원** 저희가 계산해 보면 이 자살 고위험군—시도자와 유가족—만 잘 관리해도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최소 30% 이상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 문진영** 예, 맞습니다.

○**김윤 위원** 왜 자살시도자에 대한 자살예방센터로의 연계율이 낮은가를 봤더니 경찰과 소방이 신고를 받으면 그 자살시도자의 정보를 정성스럽게 손으로 공문으로 작성해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연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체계적으로 자살예방센터로 시도자 정보가 연계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면 상당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관리해야 될 자살 고위험군이 많아지니 자살예방센터의 인력도 좀 늘려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4년의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예방 예산이 603억 원이라고 합니다. 21년의 일본의 자살예방 예산이 8300억이었습니다. 7%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자살 문제 해결을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로 설정하셨으니 대통령실에서 인력과 예산에 관한 전폭적인 지원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 문진영**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윤 위원** 보건복지부나 아마 소방이나 경찰도 인력과 예산을 계속 늘리려고 해도 기재부가 잘 늘려 주지 않아서 이제까지 늘려 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장에서의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입니다. 현장의 자살시도자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고요. 또 소방에서는 정보 관리가 기본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찾아보니 구급업무 일지상에 자살시도자라고 하는 분류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시도자가 몇 명인지 몇 명을 연계했는지 지금 소방청에서 주신 정보도 정확하지 않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의대정원 관련해서 수석님께 좀 여쭙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전제조건은 지역의 부족한 의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요.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의대생들이 어디에서 근무하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어디에서 수련받느냐입니다. 지방의대에 있더라도 수도권 병원에서 수련받으면 지역에 남는 비율이 22%밖에 되지 않고요. 지역 병원에서 수련을 받으면 82%가 남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의 의대정원을 늘리고 그렇게 늘어난 대학생 정원이 지역 병원에서 수련받도록 해야 문제가 해결되지요.

그런데 실체는 많은, 적지 않은 수의 병원들이 무늬만 지역 의대입니다. 그러니까 의과대학은 지역에 있는데 주로 학생들이 실습하고 수련하는 병원은 수도권에 있어서 결국은 졸업 후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울산대 의대와 동국대 의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실습을 수도권에서 하고 그 결과 지역 병원, 대학병원에 남는 비율은 채 10%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교육부차관님, 교육부가 이런 무늬만 지역 의대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김윤 위원** 교육부의 대학 운영규정을 살펴보면 의과대학의 실습병원에 관한 규정에

그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 병원에서 실습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맞습니다.

○**김윤 위원** 사실상 무늬만 의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허용하는 원인을 교육부가 제공하고 계신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저희가 일단 지역에 병원이 부족한 이 상황을 감안해야 되고요. 복지부랑 협의해서 지역에서 실습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 위원** 끝으로 수석님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궁극적으로 저희가 의대정원을 늘리는 이유는 지역의 부족한 의사를 양성하고 지역·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의과대학에 정원을 배정할 때 그 의과대학과 대학 병원이 지역·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평가지표로, 의대정원의 배정기준으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 문진영**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윤 위원** 감사합니다.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 문진영**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김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상 위원**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도시나 농어촌에 가면 외국인들 많이 접할 수가 있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위상 위원** 그리고 지방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이나 또는 기능인력들을 확보하려고 해도 굉장히 힘들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위상 위원** 특히나 경기도의 동두천·양주·연천을 지역구로 두신 장관님께서서는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심각합니다.

○**김위상 위원** 반대로 외국인 유학생 입장에서는 졸업 후에도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유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싶다는 응답이 86.5%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고용허가제 쿼터가 늘어났으니까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취업을 시키도록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내 산업에 도움이 되고 고용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반발이 없다면 중

소기업의 외국인 인력을 최대한 많이 늘릴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국내 고용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런 상황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중소기업에 좀 투입시켜 가지고 인력난을 해소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일학습병행 사업이라는 노동부 사업을 이야기 들어 본 적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진행 협의를 했는데 이게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요.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노동부와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김위상 위원** 이 사업이 왜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한국에 와서 공부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고 여기서 공부한 유학생들이 그래도 지방이나 또 지역소멸지역에 정착해 갖고 그들이 한국에서 배운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김위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런 문제가 아니고 법무부가 비자 발급·전환 문제에 있어 가지고 키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사업이 저조한 겁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참 좋은 사업이고 또 중소기업들이나 또는 국민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부분들인데 이 사업이 제대로 지금 진행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와 관련하여 법무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인데, 노동부가 몇 번이나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서로 논의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을 법무부가 풀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법무부에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맞습니다. 8월 중에 그래서 두 번 정도 실무협의를 했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점들 반영돼서 또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 인구소멸지역이나 또는 제조업이나 뿌리산업에 적극적으로 숙련 인력으로 육성시켜서 취업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소멸지역의 중소기업들이, 더더구나 인구소멸이 되기 때문에 산업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김위상 위원** 그리고 작년 계획에 따르면 이 예산이 한 124억이 되었는데 실행행률은 2억 8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일학습병행제 이 사업이. 집행률로 보면 2.3%밖에 되지 않아요. 이래 가지고 이게 무슨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훈련 목표 인원도 1000명이었는데 22명밖에 훈련을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대학교가 4년제가 190개나 있고 전문대학이 150개나 있는데 일학습병행 이 사업의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대학들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개 대학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고 사업 운영이 부진하다 보니까 이 5개 학교에서 수료한 학생들이 22명밖에 안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냐? 4년제 대학이 이렇게 많고 전문대학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이유는 분명히 법무부가 비자 전환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학생 취업비자 전환을 유인으로 설계된 사업이 일학습병행 사업입니다. 그런데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를 고용노동부가 그렇게 힘을 쓰고 전환시키려고 해도 비자 발급에 있어 가지고는 법무부와 이야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또 유학생들이 바로 이런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점을 분명히 알아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를, 향후 계획을 바로 세워 가지고 일학습병행제 비자 전환 문제를 법무부와 노동부가 확실히 논의해 가지고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그리고 고용허가제라 하는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김위상 위원** E-9, 지금 쿼터가 굉장히 확대되었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김위상 위원** 올해 쿼터가 얼마 정도 됩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한……

○**김위상 위원** 올해가 13만입니다. 13만 명인데, 작년에 16만 5000명의 어떤 쿼터에 의해서 한 47%밖에 발급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인원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는 지금 현재 6월까지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가도 한 40% 내외가 될 것 같은데, 연말까지 가면.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쿼터만 확대시켜 놓고 비자 발급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도 당연히 법무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쿼터를 채우지 못할 바에는 지금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 D-2 안 있습니까, D-2를 E-9으로 전환시켜 줄 필요성이 좀 있다. 그리고 일반 연수생들, 훈련 법인에서 훈련받는 일반 연수생들 D-4-6 이런 부분들도 비자 전환을 시켜서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키를 전부 법무부가 갖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고용허가제도 지금 쿼터는 늘려 놓고 인원이 없어서 이렇게 찢찢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D-2 유학생들, 외국인 유학생들을 E-9으로 전환시켜서 투입시키고 또 D-4-6 일반 연수생들, 일반 훈련기관에서 연수받은 사람들은 바로 산업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숙련 기능 인력들입니다. 숙련 기능 인력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E-7-4 숙련 기능 인력들을 바로 우리가 한국에 데리고 와서 중소기업에 투입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거는 왜 중요하냐? 지금 이런 인원들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데가 중소기업들이고 농어촌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난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또 납품기간도 지키지 못하고 이런 현실을 올해, 작년, 한두 해 문제가 아닙니다.

일학습병행제는 노동부에서 좋은 사업으로서 설계를 했던 겁니다. 설계를 했는데 이 부분을 양성을 잘 시켜 가지고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들을 제때 좀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보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고민을 통해서 비자 전환

이 굉장히 시급하니까 이 부분을 하루빨리 매듭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올해도 두 번 노동부하고 만났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위상 위원** 올해 두 번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취임 이후에 보니까 법무부의 비자 정책이 매우 소극적이고 방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를 살리는 비자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서 매우 적극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데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위상 위원** 가뜰이나 경제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고민을 이렇게 외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특례조항을 신설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E-9으로 전환시켜 준다는가 D-4-6 이런 비자 발급을 E-9에 접목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를 다 하셔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을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 오늘 국가교육위원회의 이배용 위원장 대신해서 김태준 상임위원 오셨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예.

○**고민정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태준 위원께서는 정당 추천 몫으로 상임위원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예, 맞습니다.

○**고민정 위원** 국민의힘 추천 몫이셨고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예.

○**고민정 위원** 이배용 위원장하고 평소에도 말씀 많이 나누셨을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평소에도 얘기 많이 하나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못 들었습니다.

○**고민정 위원** 최은순 씨에 대해서는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전혀 못 들었습니다.

○**고민정 위원** 뭐 있어도 얘기하실 거라고 기대는 안 했지만.

오늘 국회 예결위에 나오지 않았습니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저는 위원장께서 연가를 28일 날 내서 29일 날 재가 받은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런데 연가가 결재되기 전에 불출석사유서를 먼저 내셨잖아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예, 그것은 아마 실무진에서 불출석사유서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필요하다……

○고민정 위원 재가를 받기도 전에 불출석사유서를 그렇게 국회에 내는 것은 정상적인가?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일단 실무진 차원에서 국회 출석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국가교육위원회에 지난주 금요일에도 안 나가셨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안 나오셨습니다.

○고민정 위원 오늘은 나왔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위원장……

○고민정 위원 예.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오늘은 저는 바로 여기로 왔기 때문에, 안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지난 국무회의에도 불참하셨고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계속해서 국무회의에도 안 나가고 본인이 가셔야 될 국가교육위원회도 안 오고 국회도 안 오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일단 아마 28일 날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고민정 위원 갑자기 건강상의 이유가 생겼나 보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그건 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연가를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일 날 재가가 나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편지에 당선 축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예.

○고민정 위원 보셨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못 봤습니다, 저는.

○고민정 위원 아니, 뉴스를 보셨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아니, 그 뉴스를 못 봤습니다.

○고민정 위원 방금 ‘예’라고 하셨잖아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어떤 걸요?

○고민정 위원 그 금거북이와 함께 발견된 편지에는 당선 축하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 편지 자체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영부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건넨 선물은 명확하잖아요, 당선 축하를 했으니까. 일반인에게 보낸 선물은 아닙니다. 맞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렇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일단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고민정 위원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다.

제가 법관의 위치에서 상임위원에게 여쭙본 건 아닙니다.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예.

○고민정 위원 원래는 이배용 위원장한테 여쭙 봐야 되는데 안 계시니 같이 몸을 담으셨던 위원으로서……

영부인이 된 사람에게 어떤 분이 금거북이를 건넸다, 그것도 700만 원 상당의. 그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보이는데 본인 생각은 없으신 거군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하여튼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민정 위원 지금까지 이배용 위원장의 그러한 행태들이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 의무), 58조(직장 이탈 금지) 조항, 63조(품위 유지의 의무)도 모두 위반한 걸로 보입니다. 그것도 모른다고 하실 거고요. 국가교육위원회법 4조 3항에 보면 ‘위원장은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도 있습니다.

다 거기신 걸로 보는데 여기에서도 입장은 안 내시겠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예.

○고민정 위원 예결위 시간에 맞춰서 이배용 위원장이 사임의 의사를 기자단에 배포한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예, 알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알고 계셨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10시 여기 바로 들어오기 직전에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고민정 위원 저도 그 전에 알았는데 위원이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여태 숨어 있다가 문제가 되고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서 해야 되고 그러나 증거는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뒤로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사표를 낸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국가교육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저는 일단 상임위원으로서 이번 국가교육위원회 관련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된 데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민정 위원 최소한 이배용 위원장이 국민들 앞에 나와서 입장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일단 그건 위원장의 판단 문제……

○고민정 위원 유감이라면서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그러면 최소한 대통령 앞에서는 얘기하지 못하셨으면 국민들 앞에 나와서는 내가 어떠한 사정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분이 거동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개인 사정이 있었는지도 저희가 확인해야 되겠고. 그러려면 모습을 보이셔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하여튼 제가……

○고민정 위원 그러면 그런 저희들의 입장을 이배용 위원장에게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그러면 제가 일단 논의를 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국교위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입장은 유감을 표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아닙니다. 상임위원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린 거고.

○고민정 위원 상임위원으로서.

지난주에 국교위에서 긴급회의 여섯잖아요. 그때 어떤 입장 정하셨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그때 여러 가지 국교위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을 논의를 해서 얘기는 했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고 추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결론을 내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아직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조차 못 냈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결재가 돼서는 안 되겠네요. 최소한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 안에서의 일들이 정리가 돼야지 그다음에 사의 표명이 실제로 결재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위원장……

○고민정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사표 처리해야 됩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위원장의 사퇴 이후에……

○고민정 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저는 그 행정적인 절차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데……

○고민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의를 표명했고 거기에 대한 재가가 있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교위 상임위원으로서? 아직 국교위의 입장은 아무것도 정리된 것이 없고 국민들 앞에 나서지도 않았고 현재 당사자는 국민들 앞에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냐고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만간에 국교위를 소집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민정 위원 위원장과 함께 말씀이시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그것은 사퇴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고민정 위원 재가가 안 됐습니다. 자기가 사표 내고 안 나오고 싶으면 그냥 안 나와 버리면 그만입니까? 교육을,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됩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

○고민정 위원 제가 교육자로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든 어쨌든 국가의, 어린 학생들의 백년지대계 교육을 설계하는 곳이 국가교육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행정적 절차든 사람들과의 관계든 정리되기도 전에 일단 그렇게 도망치면 되는 겁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일단 저희……

○고민정 위원 되는 겁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국교위에서……

○고민정 위원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논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교육자로서 물어보겠습니다. 되는 겁니까? 안 되겠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

○고민정 위원 안 되니까 답을 못 하시는 겁니까? 도망치면 되는 거냐고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하여튼 뭐 좀……

○고민정 위원 도망치면 되는 거냐 물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하여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제가 개인적으로 상임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요.

○고민정 위원 학생들 앞에서 그렇게 가르치면 됩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답변을……

○고민정 위원 부모 앞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저희는 안 가르칩니다. 국가교육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청소년들 앞에서, 본인의 죄가 무엇인지는 법원 앞에서 따질 일이고 최소한 도의적 책임은 져야 한다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아이들에게 늘상 가르쳐 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워 왔고요. 그래서 힘들어도 많은 공직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하든 죄송하다는 입장을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게 상식 아닙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

○고민정 위원 저 다른 것 질문할 것 많은데 위원님께서 대답을 안 하셔서 못 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하여튼 제가 위원장……

○고민정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께서도 자격이 없습니다. 무슨 교육을 거기에서 설계하셨습니까?

최소한 잘못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무죄라면 거기에 대해서 무결점하다라는 거를 입증을 하든 아니면 정말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든 그게 상식 아닙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하여튼……

○고민정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씨에게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국민들 앞에 나서서 입장을 얘기하시라라는 얘기를 전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일단 전달을 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예.

이렇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학생들한테는 매일같이 우리가 뭐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르치는지 좀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곳이 많은 국무위원들에게는 많이 낯설 겁니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조직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는 학생들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 시간을 다 할애했습니다.

그 약속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의 곽상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언 위원**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 그리고—국무총리님 안 계시고—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언입니다.

저는 지난 8월 27일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의 모든 예산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집행해야 된다’.

우리 정부의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이 앞으로 법률의 목적을 충실히 실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이라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우수저류시설, 우수라는 것은 빗물이지요.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경우엔 빗물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그 급속한 증가를 방지해서 도심지, 그중에서 저지대의 침수·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50%의 예산을 편성하고 정부는 국비를 50%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실제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이 사업의 적정성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행정안전부는 전체 예산액이 715억 원가량인데요. 제가 1000만 원 이하는 빼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715억 원 중에서 703억 원을 집행했고 대략 집행률이 98.3%, 불용 처리된 금액이 11억 9200만 원가량입니다. 이 사업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업 시행을 위해서 행안부로부터 703억 원을 교부받았는데 지난해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249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952억 원을 집행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실집행 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2024년도에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명목 전체 예산 952억 원 중에서 42.9%에 불과한 489억 원만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이 사업 명목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57.1%가 또다시 2025년도 예산으로 이월되었지요. 그 금액만 457억 원입니다.

장관님, 혹시 확인하셨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행하지도 못한 예산이 249억 원이고 이월되었는데 행안부가 이 이월된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703억 원이나 교부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계획에 따라서 교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곽상언 위원** 그러면 계획은 그 전년도 혹은 그 전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그동안 정부의 관례였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것이 아니고요. 이월된 예산을 포함하여 그 계획된 예산까지 집행을 하라는 의미로 교부를 하는 것입니다만 제가 보고받기로는 특히 우수저류시설, 그러니까 우수가 하천으로 유출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이런 저류조나 지하 저류조 또 개방형 저류조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특히나 홍수 위험이

있는 지역이 대부분 도심지에 이것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많고 또 지하매설물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어려워서 못 하고 있기보다는 이런 절차를 충족시키려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러니까 사업 진행상 곤란 때문에 집행이 늦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2024년도에 지자체가 집행한 사업비가 489억 원입니다. 이월된 예산이 249억 원입니다. 그러면 행안부가 2024년도 예산으로 240억 원만 교부하면 전체 집행률이 100%가 되거든요.

그러면 제 질문은 뭐냐 하면 과거 이월된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률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를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 지역의 사업, 1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24년도에 계획돼 있는 사업은 계속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배정된 예산을 바로 교부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지금 관례처럼 하려면, 그러니까 2024년도 사업비 배정처럼 하려면 내년도 집행률은 또 50% 미만으로 될 것 같은데요. 사업 점검을 좀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말씀 주신 취지를 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집행률을 높이려면 최소한 주민들을 제대로 잘 설득했는지 주민 설명 여부,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이런 사전…… 또 지하시설에 대한 조사 여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애초에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조치를 충분하게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경우에 빗물이 급속하게 증가하지요. 그때 저지대에 침수 피해, 홍수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빗물의 저장 공간을 확대하는 사업이고요. 근거 법률은 자연재해대책법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는지를 보려면 실제로 어느 지역에 우수저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재해예방률이 감소가 되었는지 그리고 우수저류시설은 집중호우가 발생한 곳에 설치되었는지, 연차적 계획은 되었는지를 보는 것인데요. 해마다 700억 원 이상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 실효성 여부는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행안부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난 20년간 집중호우 발생 건수가 어떤지, 발생 장소 현황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국에 설치된 우수저류시설의 설치 현황은 어떤지, 특히 지방자치단체별 현황이 기재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요. 저도 제 지역구에 이런 상습적인 침수 지역이 있습니다. 지하형 저류조를 설치하고 나서 침수를 막은 예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지대 침수를 막는 데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저는 직접 확인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요청해 주신 자료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서울에 1984년도에 대규모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 인근의, 서울 한강 주변의 많은 마을들이 잠겼는데요. 그때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잠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옆에, 그때 안양천 부근이었는데, 지금도 크게 설치돼 있는 우수저류시설이 있습니다. 우수저류시설이 설치된 이후에는 지금까지 목동에서 침수된 사례가 없습니다. 것처럼 실효적이고, 특히 도심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사업입니다.

지금 해마다 기온이 올라가고 있지요.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단순히 기온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중에 있던 혹은 바다, 호수 위에 있던 수증기가 지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만큼 집중호우가 발생할 확률은 매년 올라간다는 것이고 우수저류시설이 확충될 필요는 충분합니다. 한층 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제가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경남 창원 의창의 김종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양 위원** 반갑습니다.

창원특례시 의창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종양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요즘 우리 국회의 모습이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실 입법의 전당임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이 판을 치는, 독주의 무대공연을 하는, 전횡을 일삼는 그런 곳으로 전락한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실 과거 민주당은 민주를 외치면서 독재 타도를 주장했잖아요. 평등을 이야기했고 소수자 배려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협치를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얼마 전까지 자기들이 외쳤던 그런 구호들은 깡그리 사라지고 지금 모습은 일방적인 독재, 독주, 철저한 소수 무시 등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실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야당의 국가인권위원 추천권도 철저히 무시했잖아요.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저께 신문 보니까 내란재판부 설치한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헌법정신을 왜곡하고 기본권을 무시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비판하고 비난하는 독재기구를 갖다가, 폭력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 보면 맘에 안 드는 광역단체장들, 앞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광역자치단체장들 수사해라 이런 지시까지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국회의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예전에 읽었던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등장하는 돼지들의 행태와 어떻게 이렇게 닮아 가느냐. 돼지들, 자유와 평등을 외치면서 혁명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예전보다도 더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지금 민주당 행태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민주당 얼마 전에 집권했을 때 적폐를 외쳤습니다. 그 외쳤던 적폐의 전철을 닮아 가

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회부처 대정부질문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있었던 경제부처 질문을 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준비를 했었는데 정말 국회 다수당의 참을 수 없는 그런 행태 때문에 지난 경제부처 질의 때는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앞으로 민주당 집권했다, 다수당이 되었다, 거기에 빠지지 말고 정말 제대로 정신을 차리기를 촉구하면서 제가 준비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걸 뭐 오늘 비경제부처 회의이지만 존경하는 임기근 기획재정부2차관께서 나와 계셨으니까 제가 SOC 사업 집행률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SOC 사업 예산이 당해 연도에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거나 또는 불용 처리되거나 전용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건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양 위원 제 상임위 소관인 국토부 소관 SOC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이월이 9000억이고 불용이 1조 3000억, 약 2조 원가량이 당초 편성한 대로 집행이 못 났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전용된 예산도 보니까 특히 국토부 고속도로 사업 예산은 22개 사업의 총 1조 7431억 원 중에서 약 30%가 넘는 10개 사업의 5286억 원이 전용이 났더라고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SOC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지역경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김종양 위원 이런 사업 예산이 당해 연도에 편성되는 것 같으면 그 지역 주민들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지역에서는 얼마나 대대적인 홍보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을 경우에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실망감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감도 아주 커질 수 있다고 보는데 차관님,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SOC 사업이라는 건 지역 주민들 편익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요. 그래서 당초 예산에 반영된 대로 집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확하게 현장의 민원 상황, 용지 보상 속도 그리고 공기 중에 혹시 다른 문제는 없는지 점검을 잘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점검을 세밀하게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요.

그리고 집행하고 관련해서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여기 고속도로 건설 예산을 한 비목에 포함을 해 놓고요. 불가피하게 잘 집행이 안 된 사업이 생기면 이 사업을 무작정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에 잘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쪽으로 전용을 시키는 게 국민 전체적인 차원에서 혜택을 더 증진시키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김종양 위원 물론 효율성 측면에서 생각하면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당초 반영된 대로 그렇게 집행하는 게 최고, 최선이다 하는 생각이구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습니다.

○김종양 위원 물론 집행 관리는 일차적으로 주무부처에서 책임져야 되겠지만 또 기획

재정부는 총괄적인 책임을 갖고 있으니까 다음에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부서라든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편성에 이러한 부분도 철저히 감안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알겠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조치하고 별도로 예산편성이 조금 더 세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관계부처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김종양 위원** 장관님, 근래 들어서 자치단체 간 통합을 이룬 도시가 몇 군데, 어느 지역인지 혹시 아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마산·창원·진해가 있고요. 청주·청원도 통합을……

○**김종양 위원** 맞습니다. 2010년도 마산·진해·창원시가 합해 가지고 통합창원시가 됐어요. 그다음에 2014년도 청주군하고 청주가 합쳐 가지고 청주시가 됐지요.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 통합을 추진하려고 논의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있습니다.

○**김종양 위원** 최근에 보니까 전주하고 특히 완주군이,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전주, 완주가 있습니다.

○**김종양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비등한 것 같은데 이렇게 비등한 이유가 뭡니까? 어떤 경우에, 어떤 모습을 보이면 그 지역 주민들이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 통합을 하는 것과 통합을 하지 않는 것에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 문화적인 이유 또 경제적인 이유,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양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과연 통합이 되었을 때 예전보다도 더 잘살 수 있을까, 지역균형발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과연 예전보다 잘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과거 통합된 그런 사례를 보고, 통합된 지역이 정말 불만이 없고 예전보다도 훨씬 더 나아졌다는 주민들의 그런 여론이 팽배해 있으면 자치단체 간 통합이 필요한 그런 곳은 앞장서서 하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챙겨 줘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현재도 법률에 따라서 통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10년간 국가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양 위원** 맞아요. 그런데 지금 통합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수 주민들이 예전으로 돌아가자, 당초에 정부에 아주 큰 기대를 했는데 정부에서 그다지 관심도 안 가지는 것 같더라, 오히려 3개 자치단체로 나누어져 있을 때보다도 지원이 더 줄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 근거로는 교부세 같은 경우도, 교부세가 3개 지역으로 있을 때 그때보다도 지금 현재 받는 교부세가 훨씬 적고요. 그리고 또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인구가 많아 가지고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합이 돼 가지고, 행정구거든요, 행정자치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통합창원시 같은 경우에 자율통합기금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행정부에서 지속 지급, 10년 정도 해 가지고 지원해 줬는데 그게 올해로 창원시 같은 경우 만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지원도 받을 수 없고.

그동안의 비용을 즉 추계해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받은 것보다도 오히려 통합에 따른 행정비용이 배나 더 많더라 하는 그런 등등의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자율통합기금 같은 경우에 금년으로 창원시 같은 경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후에 소멸되는데 그 연장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님 좀 한번 챙겨 주셔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지금 통합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재정적인 그런 불이익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야…… 지금 자치단체가 통합을 거론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전북 전주하고 완주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선례를 제대로 만들어 놔야 그다음에 뒤따라오는 사람들도 적극 긍정적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새로 가셨으니까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례시…… 특례시가 전국에 몇 개 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5개 됐습니다.

○김종양 위원 5개 있는데 사실 4개는 수원, 고양, 용인, 화성 그리고 창원. 비수도권은 1개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비수도권은 100만 인구 채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지역민들은 ‘통합해 가지고 별 혜택도 못 받고’…… 그리고 또 인구가 점차 줄어들어 가지고 특례시 지위마저도 지금 위태로운 그런 지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례시 인구기준을 100만으로 하는 걸 수도권·비수도권 동일시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탄력적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장관님이 잘 좀 챙겨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황정아 위원님, 김상욱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의 존경하는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아 위원** 안녕하세요? 대전 유성읍의 황정아 위원입니다.

저는 김태준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박근혜정부의 친일·독재 미화 역사 국정교과서 추진 주역이 위원장으로 지명이 됐을 때 윤석열 정부가 정말 이 나라를 뉴라이트의 나라로 만들려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전질문받았으면 충분히 답변 가능했다라는 위원장의 국정감사 답변을 보면서 아무리 그래도 저런 사람을 국가 미래 백년대계를 그려야 할 국가교육위원장에 어떻게 앉힐 수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위원장을 보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으로 그 의구심이 명쾌하게 해소되었습니다. 초등학생조차도 불법임을 알고 있을 김건희의 매관매직이라는 검은손이 작동한 것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보이십니까? 국민권익위에서 시·도교육청과 함께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말입니다, ‘부정부패를 절제하는 손’ ‘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부터 시작해요’.

금거북이로 국가교육위원장 직을 사고파는 것, 초등학생도 안 할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정아 위원**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할 겁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뇌물 컨설팅업체가 된 꼴입니다. 위원장이 이제서야 사퇴한다는데 사퇴하면 끝입니까? 혈세로 녹봉을 받아 놓고, 최소한 국민 앞에 나와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첫 위원장이 뇌물 공여자라는 오물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뿌렸는데 국가교육위 차원의 입장문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국교위 회의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빨리 입장문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국회에는 출석도 안 하고 입장문만 같은 시간에 배포를 합니까?

위원장이 유독 김건희 일가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습니까? 위원장이 윤석열이나 김건희 일가에 대해서 했던 말 중에 혹시 기억나는 말 있으십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특별히 기억나는 얘기는 없습니다.

○**황정아 위원** 아니면 혹시 상임위원도 김건희 일가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전혀 아닙니다.

○**황정아 위원** 위원장이 부정부패를 가리면 가릴수록 국가교육위원회도 권익위에 이어서 국가건희위원회가 될 뿐입니다.

국가 교육정책입니다. 국가의 교육정책에 김건희 일가의 마수가 얼마나 뻗어 있었을지 당연히 점점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철환 권익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이런데도 아직 디올백은 뇌물 백이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거는 합의제기관으로서 합의에 따라서 결정이 됐던 것입니다.

○황정아 위원 정말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거북이로 직을 사고팔았다면 최소한 알선수재죄, 뇌물죄 아닙니까? 금거북이를 주고받은 것 자체가 심각한 공직윤리의 붕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럴 가능성은 높다고 보입니다.

○황정아 위원 권익위원장도 김건희에게 무언가 상납하고 직을 얻었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전혀 관계없습니다.

○황정아 위원 초등학생들한테는 부패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부패에 눈감으면 조직의 존재 의의가 있습니까? 디올백 때라도 그 전횡을 막았더라면 나라가 이렇게까지 쑥대밭이 되었겠습니까?

권력자에게는 더 엄격하고 약자에게는 좀 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부패방지국장의 유언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책임 느끼지 않습니까, 권익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국민권익위를 건희권익위로 만들어 낸 장본인입니다.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직을 내려놓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참 참담한 심정인데, 제가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 아이들이 여전히 고등학생과 중학생입니다. 매관매직을 일삼던 자들이 대한민국을 3년이나 좌지우지했다는 것이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는. 김건희 일가의 악취가 대한민국에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발본색원을 해야 합니다.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사상 최악의 언론탄압이 진행됐습니다. 재임 기간 내내 언론사를 입맛대로 주무르기 위해서 비판적 언론에 대한 고소 고발과 압수수색, 과징금과 징계 등 법적 제재를 남발했고 그 결과 윤석열 집권 2년 만에 한국의 언론 자유는 40위대에서 62위로 수직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MBC가 날씨 소식을 전하면서 미세먼지 농도 수치 1을 방송했다가 선방심위로부터 최고 수준의 법정 제재를 받았던 사건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파란색은 환경부가 미세먼지의 낮은 농도를 나타낼 때 쓰는 색상이어서 선관위마저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윤석열과 류희림이 만들어 낸 괴기한 선방심위는 이 황당한 제재를 그대로 의결합니다. 미국 국무부까지도 국가 인권보고서에 이 사례를 콕 집어서 언론 자유가 제약된 사례로 평가하기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된 언론탄압은 하나하나 사법부를 통해서 바로잡히고 있는 중입니다. 무더기 방송 제재 등 일심 결과가 나온 18개 재판에서 18전 모두 방통위 전패로 법원은 모두 방송사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방송 탄압, 언론탄압에 의한 법정 다툼을 행정부가 바로잡을 수 있는 것들은 바로잡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황정아 위원** 장관님,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 정부에서 행해진 그 위법한 처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남영진 전 이사장을 비롯해 김의철 전 KBS 사장, 김유진 전 방심위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그리고 이광복 부위원장 해임 사건 모두 상소 취소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이렇게 법원에서 일관되게 잘못됐다는 판결이 이어져서 국가가 패소하고 있는데 전 정권에서 자행된 그 위법한 처분, 그 목적 자체가 위헌적이었던 소송을, 오직 탄압을 위한 소송을 취하하는 결정이 소송 해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황정아 위원** 법무부도 언론탄압용, 방송 장악용 소송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황정아 위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신 건 소송 해태하신 겁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닙니다.

○**황정아 위원** 저를 비롯해서 과방위 위원들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 언론탄압, 방송 장악용 소송은 당장 그만두어야 된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서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자 해서 법무부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소송지휘 여부가 공개되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 이미 소송지휘가 이루어졌다고 방통위원장이 직접 과방위에서 밝혔는데 왜 법무부는 사실 확인조차 안 해 주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것은 제가 좀 정확하게 진상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정아 위원** 저는 사실 그 자리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이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법무부가 이렇게 답변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가 취임한 이후에는 과거 정부에 있었던 잘못된 결정과 관련된 사건들 또 국가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면밀히 보고 있고요. 부당한 과거의 관행적인 항소나 상고를 저희가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법무부가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 방송 장악에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장관님께서 명명백백하게 밝히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확인해 보니 방통위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소송수행자는 검토결과 항소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서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제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 필요성에 대한 1차 판단은 소송수행기관인 방통위가 하는 것인데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했더라는 방통위가 무슨 뜻인지 제대로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황정아 위원** 알아보시고 저희 의원실에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들이 면밀히 확인해 갖고요,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감사합니다.

이진숙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관련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 이진숙이 헌법이 부여한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혈세를 전용하고 전례 없는 외상 변호사 수임까지 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윤석열·김건희의 방송 장악 그리고 언론탄압을 비호하기 위해서 불법의 탑을 쌓고 있는 중인데 지난해에만 5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윤건희 공동 정권의 방탄을 위해서 지출하면서 직원들의 약값, 기름값까지 유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정당한 예산 심의·의결권을 통해서 불법적인 소송비용을 삭감했고 전용 못 하게 부대의견에 명확하게 담았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법적으로 돈을 쓸 수 없게 되었는데도 외상으로 변호사를 쓰겠다고 합니다.

지금 방통위는 방통위원장이 본인의 정치적 도구로 사유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결위 차원에서 언론탄압, 방송 장악을 위한 불법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송비 남용에 대해서 국가 회계질서 문란으로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여야 간사님들과 위원장님께도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구갑, 존경하는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먼저 외교부장관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국민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잠깐 좀 짚고 넘어갈게요.

침략전쟁이 있지만 방어전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한 회담도 있지만 무언가를 잃지 않기 위한 회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국민들께서는 트럼프의 관세 합의 이후에 추가 부담이 있지 않을까 또는 방위비와 관련해서 과도한 요구가 있지 않을까 또는 동맹 현대화에 대한 요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많았습니다.

외교부장관으로서 이번 회담에서 이런 세 가지 우려에 대해 잘 방어한 것으로 평가하시는지,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전체적으로 보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대략 선방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좀 구체적 이유도 말씀 주시면 좋을 텐데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미국에서 이런 요구들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대비 부탁드립니다.

또한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관계 개선 또 한반도 지정학에 대한민국이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 어떻게 보면 2025년 하반기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얻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얻은 건가요?

○외교부장관 조현 우선 양국 정상 간에 깊은 신뢰 또 우위가 다져졌고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의 리더십으로 잘하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상욱 위원 트럼프는 그동안 보면 협상 상대국의 약점을 이용해서 과도한 이익을 요구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협상 상대국 지도자의 약점을 파거나 또는 정치적 불안을 이용하거나 내부 분란을 야기하거나 이런 전략을 취했었는데 사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도 국익을 위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 때문에 우리의 협상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일부 극우성향 사람들의 시도가 있었지요? 아마 장관님께서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했으며 어떻게 대응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해 갈 건지 한미 외교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의견 구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상회담 불과 몇 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그런 것이 나서 저희들이 매우 신속하게 대응을 했고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입으로 페이크 뉴스, 가짜뉴스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계속되어서 최근에는 워싱턴 타임스에 강리치 전 미 의회 하원의장의 기고문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는 즉각 여기에 대한 대응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욱 위원 사실 국익을 위한 일, 특히나 한미 협상 이런 일들을 앞두고서는 나라의 힘이 하나로 뭉쳐져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 측에 유리한, 힘을 실어 주는 그런 일이 우리나라 일부 정치권력 또는 일부 극우성향을 가진 분들 사이에서 일어난 것인데요. 지금 외교부장관님께서 잘 대응하고 계시겠지만 돌발 변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는 변수니까 예민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미 정상회담 전에 한일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 여쭙고 싶은데 지금 외교부,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이것을 한 항목으로 해서 예산 배정하고 있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김상욱 위원 그런데 한일 과거사 대응 그리고 한일 미래지향, 어떻게 보면 성격이 반대로 볼 수도 있는데 한 카테고리 묶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관련 항목을 전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또 사실은 두 가지를 결국은 대승적 차원에서 같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욱 위원 같이 추진해야 하는데, 2024년 기준으로 보면 7억 9500만 원 배정했는데 그중에 5억 3700만 원만 집행해서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사실은 상당 기간 외교에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욱 위원** 2024년이면 윤석열 정부 시절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시절에 대일 외교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은 별로 없었던 것이네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김상욱 위원** 특히 이 중에서도 한일 신협력 비전, 즉 미래지향적인 부분이지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2억 17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실집행은 1억 52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한일 정책대화, 3800만 원밖에 배정이 안 돼 있고 그마저도 1900만 원만 집행했습니다.

일본과의 외교 관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부분이 특히 많이 밀접되어 있는데 한일 정책에 관한 2024년 실집행 예산이 19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좀 상식 밖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적습니까? 또 왜 이렇게 실집행조차 되지 않았던 겁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몇 가지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취소되면서 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다양한 포럼을 새로 만들고 또 한일 간에 국민 간 교류를 확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에는 비록 집행이 저조했으나 앞으로는 예산 소요를 충분히 잘 반영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물론 장관님께서 오시기 전에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 문제가 있으니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 간에 경제 교류 또 인적 교류 또 문화관광 교류는 정말 많습니다. 또 그것을 잘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 가면 우리 국민경제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테마에 이렇게 예산 배정도 없고 실질적인 움직임이 전혀 없다면, 그러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국민 감정만 서로 자극해서 이걸 이용만 하려고 한다면 국민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외교의 중요한 역할, 결국 국민들께서 더 잘살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실질적 교류와 협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고 책정하고 실행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17년 만에 한일 정상의 공동언론발표문이 있었습니다.

장관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래산업 및 사회문제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청년 교류 및 인적 교류도 확대해야 한다. 또 역내 및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세계를 함부로 하던, 모든 걸 주도 하던 시대에서 각자도생의 시대로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의 협력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물론 과거사 문제도 같이 연동돼서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외교부에서 구체적 계획 실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예산도 배정을 해야 되고, 예산 써야 되고요. 장관님께 한일 관계가 과거사는 제대로 정리되고 또 우리 간의 협력은 미래지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계획과 예산 배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나아가서, 조금 더 다른 말씀 또 여쭙볼게요.

외교부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의 국격, 이미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몽골이나 태국 이쪽에서 비자 발급 관련해서 불편·불만이 많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입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30일 정도 여권을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또 비자 발급했는데, 우리나라까지 왔는데 공항에서 입국 거절당해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 중에 몽골이나 태국의 고위층 분들도 계셨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지고 어떻게 보면 케이팝, K-한류가 활성화되는 것에 좀 찬물이 되고 있다,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지고 있다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예산 배정이나 기획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저희들이 비자 문제는 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입국 거부가 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면 불법체류자 문제와 또 연계가 됩니다.

어찌 됐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잘 살펴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격에 손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본회의 산회 및 국회의원 단체사진 촬영을 마친 직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의 존경하는 배준영……

죄송합니다. 제가 한 분을 빼먹었네요.

개혁신당의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우선 지금 법원행정처장님 나와 계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나와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거기 계셨군요.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특별재판부 또 내란 관련한 특별영장전담 판사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란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굉장히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높고 큰 우려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법원행정처의 관련한 입장 어떠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주신 질의에 대해서는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답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좀 돌아보면 지난 12월 3일 날 12·3 비상계엄 터졌을 때 직후에 제가 법사위에 나가서 이것은 위헌적인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삼권분립을 핵심으로 하는 우리 헌법 가치하에서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그런 통수권 행사는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었고 그와 같은 12·3 교훈이나 최근의 케데헌 신드롬을 볼 때 저는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은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어떤 국가권력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라는 데 대한 헌법수호 의식을 철저히 했다고 생각되고 이와 같은 저희들의 호헌 의식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려하는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고 또 우리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형식적 법률로서 정해진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밝혔고 또 여러 헌법 교과서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건을 두고 이렇게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법관을, 특히 사법부 외의 다른 국회라든지 이런 외부기관에서 관여해서 법관을 임명하는 데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병도 위원장, 박형수 간사와 사회교대)

또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해방하고 나서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를 만들 때도 헌법에 근거를 뒀습니다. 마찬가지로 3·15 부정선거 행위자들에 대한 특별재판부 역시 그 당시 헌법 부칙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헌법에 정해진 사법부 독립은 존중돼야 한다는 그런 역사적인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혹은 재판 과정에도 재판받는 피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위헌적인 조치라는 주장을 할 텐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단을 받게 되면 이런 역사적인 재판이 무효화돼 버리는 그런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사법부에서 재판을 맡을 법관을 선정할 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주관적인 의도도 개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재판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인들에 의한 의사가 반영이 되고 한다면 그 부분은 사법의 독립성이나 재판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초래할 위험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회에서 법원행정처장님이 이렇게 긴 시간 자세하

게 또 명확하게 본인의 견해를 밝히시는 것이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란특별재판부의 설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저도 주신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일반 법률을 통해서 이런 식의 재판부를 신설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 또 우리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근간에서부터 흔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사무차장님, 헌법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헌법에 따르면 국민들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권이 지요.

그런데 헌법에 따라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입법부에서 갑자기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이 사람, 이 사람이 특별법에 의한 법관이니까 이제부터 이 사건은 이 사람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세요’라고 마구잡이로 바뀌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법원행정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정해진, 게다가 무작위로 결정되는 공정한 형태로 관리되는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 이 질문에 대해서 포함해서 내란특별재판부 신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 내지는 사무차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사무차장 김용호 가정적인 질문이라서 저희가 독단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만일 이 건이 사건화돼서 저희 재판소에 오게 된다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다 감안해서 재판관님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하람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방금 법원행정처장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해당 법률이 위헌으로 판단이 돼도 극심한 혼란이 되겠지만 절차의 지연이 염려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컨대 재판을 받는 분들이 아니, 이런 헌법에 근거도 없는 특별법에 의한 재판부 구성은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받아들이게 되면 절차가 중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위험성도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견해를 내셔야 되지 않겠어요?

○헌법재판소사무처사무차장 김용호 저희가 사전적으로 입장을 내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이 부분은 제 생각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사법부의 독립 이게 대법원의 일이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은 우리 헌법의 기본 질서 아니겠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따져 보시고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시는 게 우리 헌법질서 수호에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사무차장 김용호 하여튼 저희가 헌법재판기관의 성격상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입장을 표명하기는 사실 어렵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하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도 물론 위헌적이고 그런 입법을 하는 것도 문제겠습니 다마는 저는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역시도 사법부의 독립을 굉장히 저해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당의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분이 ‘특검에 제동을 거는 사법부는 국민을 두려워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여러 여당 위원들도 ‘법원이 내란 재판에 매우 소극적이다’ 이 런 식의 압박성 발언들을 쏟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칫 잘못하면 사법 부가 우리 말 듣지 않고 내지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내지 않고 소위 말해 뻔대면 내란 특별재판부 만들 수도 있어라고 겁박하는 것과 뭐가 다르니까?

아니, 만약에 특검에서 하는 것처럼 특검에 제동을 거는 사법부가 문제라면 이것 내란 특별재판부 뭐 하러 만듭니까? 그냥 특검에서 재판하라고 그러지요. 특검에서 수사도 하 고 기소도 하고 재판도 하라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법부를 그렇게 못 믿고 특별재판부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이것은, 아무리 이런저런 중요한 일들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할 일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구속돼 있고 김건희 씨도 지금 구속돼 있고, 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 까? 그런데 여기서 한두 가지 본인들의 마음에 안 들거나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빨리 안 움직인다는 것 때문에 특검에 제동 거는 사법부 나오면 내란 재판부 만들겠다 이게 지 금 여당이 할 얘기입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이런 식으로 사법부가 특검의 판단에 반하는 거 하면, 이런 행태 나오 면 내란특별재판부 만들겠다 이런 식의 여당의 어떤, 지금 주장 단계에서의 잘못된 언동 에 대해서도 사법부 차원에서 좀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 입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고 저희들은 어쨌든 헌 법을 중시하는 국민들에 의해서 들어선 정부이니까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방향으 로 가리라 믿고 또 그와 같이 저희들 입장을 계속 개진을 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형수** 천하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중구·강화·옹진의 존경하는 국민의힘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배준영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2018년 사법농단 사건 관련해서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 대하면서 대법원이 밝힌 입장이 있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법률이 정한 법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법권 독립의 침해로 볼 수 있다. 특정 혐의자에 대한 재판부 구성 특례를 두면 법정의 평등을 침해한다. 특별재 판부 설치가 선례가 되면 같은 요구가 빈번할 것이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 발생은 물론 재판 독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법원에서 밝혔는데 지금 입장 그대로이 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와 같은 취지로 제가 조금 전에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압니다.

○**배준영 위원** 그때 입장과 변한 게 없으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가 가동하게 되면 이런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님이 우려를 표시하신 것이고요.

저는 만약에 이런 내란특별재판부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려면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헌법을 만들 당시에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면서도 그리고 3·15 부정행위자를 처벌하면서도 역시 헌법 부칙에 그와 같은 특별재판소를 설치하는 근거를 다 마련했습니다. 그와 같은 저희 선배들의 헌법에 대한 의식이 더 발전되어야지 후퇴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배준영 위원 법원행정처장님의 말씀은 예전에 특별재판부를 뒀을 때는 헌법적인 근거가 있었고 군사재판 같은 경우에도 헌법적인 근거가 있지만 내란특별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헌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를 특별재판소 신설로 특별 대우하자는 주장이 인정되면 외환죄, 살인죄, 강도상해죄 등 각종 여타 범죄들에도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법농단의 피의자이자 피고인은 사법부 자신이었기 때문에—이것은 지난 사법농단 사건 말씀드리는 겁니다—그때는 그나마 자기 재판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재판소 신설이 그나마 설득력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내란 특별재판소는 그런 정당성조차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이 그동안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수호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사권을 굉장히 남용하거나 오용했다는 그런 역사적 경험들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이 더 이상 수사에 직접 나서서는 안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러면 일차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이후에 검찰이 기소권만 갖는 상황에서 보완수사,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약간 미진한 점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걸 보완수사를 할 건지 보완수사 요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전 단계에서 어쨌든 보완수사의 의미를 갖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어떤 협력관계를 규정할 것인지 이렇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특별한 입장은 없고요. 다만 국회에서 그러한 점들을 잘 고려해 가지고 추후에, 아직은 공소청이나 중수청이 설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설립된다고 하면 설립된 이후에, 설립하기로 결정된 이후에 개별법으로 만들 때 잘 논의해 주기를 좀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배준영 위원 장관님 다선 의원이지 않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법안 심사할 때 해당 부처에서 의견 내는 것 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의견이 없다는 의견은 없습니다. 보완수사권에 관련된 장관님의 의견은 됩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떤 형태든지 수사기관의 미진……

○**배준영 위원** 의견이 없다는 게 의견으로 알면 되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현재 제가 어떤 결정된 의견은 없습니다. 법안이 나오면 그때 저희들이 법안을 보고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참 힘드시겠습니다.

저희가 보완수사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경찰을 불신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언론에서도 기사 쓰면 데스크에서 데스크하잖아요. 그래서 착오라든지 보완할 점이 있으면 되돌려서 다시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에서도 보시다시피 ‘전남 시골마을에서 검수완박에 문힐 뻔했는데 검찰의 보완수사로 7명 추가 기소’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검수완박 후 경찰의 부실수사 급증, 불송치 이의신청도 2배로 늘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좀 명확한 의견을 갖고 계셔야 될 텐데, 글썽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보기가 안쓰럽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검찰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지금 특검에 많은 인원이 가 있고 그거 관련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된 사법서비스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님 명확한 입장을 갖고 그것을 관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님, 조금만 답변드리면요 어쨌든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한 부분에 관련해서는 보완돼야 된다는 입장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거를 보완수사를 할 것인지 보완수사 요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수사단계에서의 향후 협조적 관계를 규정해 갖고 그런 관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수사 지도할 것인지는 좀 더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좀 더 논의가 돼야 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배준영 위원** 그러니까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으로 좀 들리는데 하여튼……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보완의 필요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보완의 필요성은 있다고 제가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배준영 위원** 오늘 안보·정책·비서실장님 안 나오셨지요, 결국은? 그러면 제가 누구한테 여쭙 봐야 됩니까? 외교부장관님 계십니까?

세 실장이 발표한 브리핑 내용을 제가 봤어요. ‘화기애애하다’, ‘허심탄회하다’, ‘기념품 습으로 저희를 안내했다’ 그리고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 과정은 좀 남아 있다’, 점입가경입니다.

그런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양국은 조선 분야 최대 1500억 불을 포함해서 에너지, 핵심광물, 배터리, 반도체 산업 강화를 지원하는 데 금융 패키지를 활용하기로 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투자하는 것은 1500억 불이 더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아직 이게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배준영 위원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배준영 위원 그리고 ‘구속력 없는 MOU로 금융 패키지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구속력이 없는 MOU라는 건 미국 측에서도 서로 확인한 사실입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미국 측에서도 요구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서 그 점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됐습니다.

○배준영 위원 (신문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신문을 보니까 며칠 전 신문인데 ‘트럼프 띄운 이 대통령, 민감한 청구서 늦쳤다’, 늦쳤다고 돼 있습니다. 25% 자동차 관세가 있는데 지금 그것 낮추기로 합의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일단 이 패키지와 연동이 돼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합의 안 됐지요, 아직? 언제 낮출지 모르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한미 양측은 조속……

○배준영 위원 EU는 낮쳤잖아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건 EU가 다른 패키지를……

○배준영 위원 EU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본, 이탈리아, EU, 전부 합의서가 있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아닙니다.

○배준영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배준영 위원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합의서는 언제쯤 나올 걸로 예측을 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지금 금융 패키지 분야에서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조속히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이번에 오산 에어 베이스를 압수수색했는데 MCRC는 제가 알기로는 미군이 근무하고 미군이 작전 통제하면서 한국군이 들어가서 동시에 근무합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오산 공군기지는 주소가 캘리포니아로 돼 있어요. 미국에서 우편 보내려면 캘리포니아 주소 적어서 보냅니다. 합의 없이, SOFA 합의 없이 압수수색하고, 동의 없이 한 게 SOFA 규정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SOFA 규정에는 크게 저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저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안 됩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알기로는 저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저촉이 안 된다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배준영 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형수 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갑의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경기도 고양시갑 김성희입니다.

먼저 국방부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왜곡으로 지금 군이 많이 망가졌는데 복구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요 2005년에서 2006년생들이 입대를 하고 있지요. 넷플릭스 보고 케데헌 보는 친구들인데, 역사에 대해서 그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군 신병 훈련 교육용 교재 기본군사지식 교본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용에 보시면 북한군이 매일같이 암송하는 군인의 일반의무 얘기하면서 ‘당의 유일사상과 김정일의 혁명사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김정일의 교시, 당의 정책을 무조건 옹호 관철한다’.

지금 김정일이 사망한 지가 꽤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정은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서 지금 김정은 방식의 한국에 대한 대응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교본에서는 김정일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에 대해서 저렇게 쓴 게 문제다라고 하면서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도 공군 기본군사지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빼앗을 때 우리나라의 군대도 같이 없어졌다라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가 광복군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광복군, 독립군.

○김성희 위원 아주 기본적인 얘기인데 저렇게 해서 우리나라 군대가 그때 없었다라고 해 버리는 것은 글썄요, 그런 일부 수정주의적 사관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군인들에게 저렇게 가르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특히 분노했던 부분은 일제시대에 양성됐던 조종사들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양성됐다 해서 이미 일제시대에 키운 걸로 해 놓고서 이 중에서 지금 보시면 ‘독립운동을 한 조종사들’이라고 해서 몇 분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덕, 이영무 등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병렬적으로 ‘일본에서 활약한 조종사들’이라고 하면서 지금 김정렬, 박범집 등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행한 친일인명사전에도 들어 있고 특히나 박범집의 경우에는 1943년 매일신보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요 ‘조선 청년에게 태평양전쟁 패배는 동양 인종이 미국과 영국의 노예가 되는 길이니 승리를 위해 일본 육해군의 항공병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자가 지금 독립군이랑 같이 한 선상에 놓여서 선배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내용에 보니까 광복 후 공군 창설 간부 7인이 되어 공군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라고 박범집을 칭송을 하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다 덮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공군 창설 7인의 간부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일제시대에는 이런 징병에 동의하고 이런 활동을 했다는 공과 과를 같이 담아야 되는데 공과 과를 같이 담지도 않았고 게다가 일제시대가 같은

일제시대라고 독립군과 저런 친일 행적을 했던 자들을 한 선상에서 교과서에서 가르친다는 게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역사 편향도 하나 지적하면요 여순 사건에 대해서는 ‘여순 반란 진압작전’이라고 해 놓고 ‘좌익단체와 학생단체가 우익 인사와 양민을 대량 학살했다’, 4·3 사건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 공산분자들의 일부 잔당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게 내용이 전반적으로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이 교본이 왜 중요하나 하면 훈련병일 때 이 교본을 잘 외운 병사들이 좀 더 좋은 부대, 엘리트 부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입대하자마자 2005년, 2006년생들이 이렇게 역사관으로 무장한 다음에 자기 자대로 가게 되는 건데.

장관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이런 역사관에 많이 동의가 안 되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약간 시대정신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역사는 사실을 기초로 해서 기록되어야 되기 때문에 2005년, 2006년생들이 군에 들어와서 첫발을 내딛는 순간들인데 보다 더 건강한 정신적 사고가 될 수 있도록 더 체계성을 갖추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이게 정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정일 얘기를 저렇게 아직 넣어 놓은 걸로 봐서는 그냥 만들어 놓고 계속 복사해서 붙였던 것 같고. 교본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국방부 예산 30억을 들여 갖고 매년 찍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공군만 말씀드리어서 그렇지 다른 데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 새로운 걸 가르치자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국가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재에 대해서 한번 전면적인 검수를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공군뿐만 아니라 육해공군이 공히 이런 점들이, 불편한 점들이 또 역사의 잘못된 점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감사합니다.

행안부장관님께 지방세연구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고급주택 질의,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지방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신과 의혹이 크게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방세 정책을 결정하는 곳은 지방세제국, 이걸 행안부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곳이 지방세연구원. 둘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이고 지방세 정책을 세우는 데 근간이 되는 곳이지요.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런데 국정운영계획에도 나와 있는 소위 말하는 갑질 없는 행복한 일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장관님도 무진장 애를 쓰고 계실 텐데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행안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지방세연구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또 연구평가 조작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다는 보고는 들으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죄송합니다만 아직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김성희 위원** 이것 제가 국정감사 때 지적했던 건데 아마 쉬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꼭 한번 보고를 받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면 계약직 말단인 김 모 씨가…… 말단입니다, 말단, 계약직 말단. 이 사람이 연구기획부장인 장 모 씨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해서 그래서 평가권을

행사해서 정규직 전환 못 하게 하겠다는 협박까지 들으면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공론화되고 나니까 부원장이, 이 과정에서 부원장하고 간부진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연구원들을 자르고 연구평가를 조작한 정황이 담긴 녹취도 공개됐고 이게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질의 때는 전 장관이 엄정하게 감사를 하겠다라고 제가 답변을 들은 상황이었습시다.

문제가 된 유태현 부원장…… 부원장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람은 계약직, 김 모 씨는 계약직 말단 직원이고요. 그런데 유태현 부원장이 자기가 협박당했다라고 그 김 모 씨를 직장 괴롭힘으로 신고합니다. 계약직 말단이 부원장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게 신고가 된다는 자체가 저는 놀랍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니 직원은 얼마나 압박을 크게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문제를 삼으니까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시정명령에 대해서 불이행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까지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가해자들이? 유태현 부원장은 그만뒀고요, 이제 전 부원장이지요. 그리고 파견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본대로 파견 복귀했고요. 육아휴직 등으로 도망을 가서 가해자가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박형수 간사, 한병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편지 한 통을 저희한테 보내오셨는데요. 피해자입니다.

지방세연구원 모 씨라고 하면서 지옥같이 살고 있고 자기가 어렵게 살고 있는 걸 알아서, 직장을 못 그만두는 사정이 있어서 이러고 버틸 수밖에 없는데 너무 힘들게 한다는 하소연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원장이 계약직을 직장 갑질로 고소하는 것 이게 가능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돼서 노동조합이 행정안전부에 감사를 와 달라라고 일종의 구조 요청을 한 거지요. 그랬는데 행안부 감사팀이 가해자와 간부진이 아니라 오히려 괴롭힘 피해자와 연구위원들을 상대로 무리한 조사를 했습니다. 보통 행안부에서 감사를 나가면 감사국에서 나가야 되는데 지방세국에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다 아는 사람이 나가서 감사를 하니 제대로 되지 않겠지요.

그다음에 노조에서 요청했던 감사 요청 사항을 쭉 보시면요. 공개채용이라고 하면서 합격자가 내정되어 있던 부정 채용도 있었고 특정인에게만 연구용역을 주는 일감 몰아주기도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떠한 처분도 한 게 없습니다. 엑스 자 보시면, 제가 나중에 또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다가 심지어 괴롭힘 가해자인 장 모 씨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증거를 영수증과 함께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 감사팀은 감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착 관계가 만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만약 사실이라면 당연히 감찰 대상이고 부적절한 직무 집행을 한 해당 공직자가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성희 위원** 장관님,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지방세 체납 같은 경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0%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전체 체류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국인의 10%가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현실을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희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책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내국인 같은 경우는 3.5% 정도 되는데, 외국인의 경우엔 10%가 넘게 체납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조차 해 주지 않아서 자의든 타의든 지방세 체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장관님께서 들여다봐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갑,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원 위원** 한병도 예결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수원갑 국회의원 김승원입니다.

우선 지금 기재부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김승원 위원** 지난번에 질의했던 것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PPT 화면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때 상속세·증여세 관련해서 시가주의가 원칙인데 관행적으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했다가, 이게 2025년 6월 11일 사무처리규정, 국세청 훈령인데요, 이것을 개정함으로써 감정평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김승원 위원** 다음 보시면, 그래서 기준시가보다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면 세수 증대 효과가 연간 8000억 원 정도로 해서 조세 형평이라든가 또 시가주의 원칙에 부응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상속세·증여세 총신고 건수가 2024년도만 해도 30만 건인데 대부분, 23만 건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한 것은 4만 2000건 정도에 불과해서 국민이 거의 수십 년간 기준시가에 의한 상속세·증여세를 예측하고 또 관행처럼 받아들이고 있다가 갑자기 바꾸는 것에 대한 조세 저항이 클 것이다 이런 유의점을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PPT 앞으로 가 보실까요.

그런데 이 사무처리규정 시행이 2025년 6월 11일입니다. 돌이켜 보면 6월 3일 저희가 대통령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시행이 6월 11일이면 이 사무처리규정의 변경은 그 전에 있었을 것으로 예측이, 예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런데 저 조항이 지금 기재부 조항이 아니고 국세청 훈령이어서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국세청에 확인……

○김승원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총괄하시는 기재부차관님도 같이 좀 봐 주십사 하는 거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김승원 위원 제 의문은, 윤석열 정부하에서 세수결손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김승원 위원 50조, 30조 정도.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정부가 이것에 대한 세수결손을 메꿔라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졌고 그래서 여러 부처에서 세수결손을 막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를 올린 것 중에 상속세·증여세를 기준시가로 하지 말고 감정평가 하는 식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세수를 보충해라라고 하는 그런 결정이 윤석열 정권 때 이루어졌고 그것에 따른 훈령의 변경이 이루어져서 6월 11일 진행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런데 저 시점하고 관련해서요 실제로 저게 시행이 된 게 25년 6월이지 않습니까?

○김승원 위원 그렇습니다. 대선 직후인……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세수결손이 심각하게 문제가 된 건 저희가 23년하고 24년 이고요.

○김승원 위원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래서 그런 의혹이 생길 수는 있지만 저 시점의 차이를 보면 꼭 의혹대로 그런 취지에 따라서 시행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김승원 위원 이게 당장 벌써 시행이 되면 세수증대 효과는 있는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단기 처방인 것도 분명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윤석열 정부 때 이루어진 것인데 시행은 이재명 정부 때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이런 조세 저항은 우리 정부, 이재명 정부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런 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이라든가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고 단순한 국세청 훈령의 개정만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폭넓은 공감대도 얻고 예컨대 시행령 개정이라든가 다른 법률 개정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일단 시행은 6월 11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저게 취지가 적정한지 그리고 저걸 만약에 되돌렸을 때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 부작용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해에 23만 건인데 이게 기준 없이 또 계속 예컨대 국민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 상속세·증여세가 2배에서 10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그런 우려를 표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꼭 필요한 데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단순한 세수증대를 목표로만 해서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 그리고 그 욕은, 비판은 다 이재명 정부가 들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세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100% 동의하고요. 혹시 예상되는 부작용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꼭 한번 국세청과 점검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체부 장관님, 최휘영 장관님 계신가요?

그러면 최휘영 장관님은 나중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고학수 개보위 위원장님 나오셨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여기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어디 계시지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 8월 27일 개보위에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 원, 과태료 960만 원 부과하셨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이게 8월 28일 날 밝히신 거고요. 맞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김승원 위원** 그런데 SK텔레콤 유출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일단은 건수로는 국민의 대부분, 거의 과반수인 2300만 명이 유출 사태의 피해자였고 그다음에 인증번호가 유출이 되었으며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25가지 종류의 정보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의 즉장 대응, 해킹을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반한 사실도 있고 워낙 또 사회적 파장도 커서 이것에 대한 사실은 충분한, 최대의 과징금이 나오지 않을까. 또 아마 개보위원장님께서도 한 3%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언급도 하셨던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이 맞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던 것은 분명하고요. 제가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하기 전에 과징금 액수 관련해서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김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언급하셨고 그래서 아마 국민들께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충분한, 최대의 과징금이 나올 것으로…… 그러니까 법적 기준에 맞는 과징금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과징금 부과액은 1300억 정도로 전체 매출액의 1%에 불과하고요.

다른 나라를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5%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EU 같은 데에서도 전 세계 매출액의 4%, 영국 같은 곳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과징금 규모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턱없이 낮은 것이 아닌가 그런 비판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2022년도 5400억, 2023년도 4600억 그리고 2024년도에 9500억으로 갑자기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 7월까지만 해도 7700억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액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게 연간으로 환산하면 1조 4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보이스피싱 피해 액수 그다음에 피해 명수, 인수를 늘어나게 하는 데 어떤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그에 대한 인과관계 조사는 혹시 해 보셨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징금 액수 관련해서는 EU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상한액이 높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김승원 위원 지금 제 질문은 뒤쪽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는……

○김승원 위원 보이스피싱 피해 액수가 갑자기 늘어났는데 그것과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없는데, 다른 한편 유심 정보가 유출됨으로 해서 다크 웹이나 이런 곳에서 간접적인 형태로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는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니까요, 개보위라든가 정부가 밝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SK텔레콤 문제는 2016년 10월 달부터 문제가 지적됐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맞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운영체제의 보완 없이 계속 사용하다가 2025년 4월 달에 대량 유출 사태가 나타나게 된 것인데요. 제가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까지는 4600억 정도의 피해 규모 액수였는데 2024년도에 9500억으로 갑자기 두 배가 증가하고 2025년도 상반기 7700억, 연간 1조 4000억이 넘는 피해 건수와 액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024년도부터 개인정보 유출 의심이 들고, 특히 2025년도에는 어쨌건 상관적인 인과관계는 보이기 때문에, 숫자적인, 이런 것에 대한 조사까지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승원 위원 그러면 좀 알아보시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프로세스를 마련하신 다음에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울산 울주의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서범수 위원입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님, 인사전문가로서 자부심이 대단하시지요?

없으십니까, 인사전문가로서?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

○서범수 위원 왜 대답이 없으세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생각하시는 대로입니다.

○서범수 위원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전문가로 생각하시는 것 아니었습니까?

○서범수 위원 아니, 저는 여쭙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호전적으로 하세요? 저하고 싸우자고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아니요.

○서범수 위원 그것은 아닌데 제가……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전문가 맞습니다.

○서범수 위원 맞습니까?

한국은행하고 교보생명에서 계셨고, 2005년도에 나오셨지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2006년도입니다.

○서범수 위원 그 이후에는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싶어서…… 한번 간단하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컨설팅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조직 생활을 해 보니까 인사를 하시는 분들은 누구보다도 켄틀하고, 사실은 욕을 잘 안 먹으려고 아주 관대하고 제너러스(generous)하고 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 중에 제가 볼 때는 옛날의 총무처 직원들, 지금 인사혁신처지요, 그분들이 대개 순하시고 아주 켄틀하시던데……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시네.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도 여기……

왜 저렇게 막말 내지는 좀 격한 말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과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님이 인사를 하신 분이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7대 기준의 명칭함 그런 유튜브를 찍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과거에 뭘 했거나 도덕성을 가지고 시비 붙는 진짜 명칭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했는데, 그러면 처장님 입장에서는 뭘 보고 사람을 판단해야 됩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유능성을 보고 판단합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그 유능성이라는 게, 물론 인사청문회라는 게 미래를 위한 인사청문회겠지요, 앞으로 저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과거를 반추해 봐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거를 모르고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맞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처장님께서 인사 기준을 정한다면 어떤 걸 정하시겠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과거에 얼마나 사회적 성취를 이룩했느냐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다.

○서범수 위원 그 사회적 성취라는 게 그 안에도 도덕성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도덕성과 유능성은 차원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유능하기만 하면 되네요. 도덕성은……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두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서범수 위원 예를 들면 인간적으로는 참 나쁜 사람이라도 성과만 있고 유능성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다음 한번 보십시오.

저게 처장님이 말씀하시는 성취예측모형지수입니다. 저기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 몇 프로입니까? 여기서 잘 안 보인다. 그다음에 추미애 의원.

한국 문명을 퇴보시킨 사람들 죽, 김경수, 김두관, 김부겸……

저게 어떤 기준입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그 기준은 제 책에 나와 있고요. 별도로 인사 조직과 관련된 컨설팅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수준의 훈련을 받은 사람은 저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서범수 위원 그래서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무식해서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 김경수, 김두관, 김부겸, 김동연, 임종석 저런 분들은 아예 고위공직에 들어오면 안 되시는 분이네요. 그렇지요? 처장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봐야 되지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범수 위원 그렇습니까? 언제 저분들한테 한번 여쭙볼게요. 제가 만날 기회가 있으면 ‘김경수 지방위원장님께서서는 공직에 들어오시면 안 된답니다. 누가? 우리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그러답니다’라고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리고 오늘 총리가 안 나오셔서 그런데 내각 사무처 역할을 하셨던 행안부장관님께 한번 여쭙볼게요.

지난번에 장관들 인사청문회를 했지 않습니까? 십수 명 분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두 분만 사퇴를 하든지 낙마를 하셨습니다. 왜 두 분이 낙마를, 그 두 분만…… 그 이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크고 작은 하자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은 통과가 됐고. 그런데 교육부장관이나 여가부장관께서 낙마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회의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살펴서 본인들이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서범수 위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각 부처 여기 앉아 계시는 국무위원님들이나 장관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각 부처마다 보호해야 할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핵심 가치.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지역발전, 지역균형발전 그다음에 재난 안전 이런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서범수 위원 교육부장관은 공교육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연구윤리를 어떻게 확립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여가부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게 핵심 가치라고 봅니다. 그 핵심 가치들을 이 두 분은 명백하게 위반을 하셨

다, 그래서 이 두 분은 낙마를 하셨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인사혁신처장님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도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 배제 7원칙에 대해서는 아주 명칭한 기준이다, 그리고 인사는 코드인사로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아주 싫어하는 게 자기 계발이다.

인사혁신처라면 75만의 국가공무원들에 대해서 공정한 채용, 승진, 자기 계발을 하는 게 목표가 인사혁신처잖아요. 그런데 처장님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계발 싫어. 안 돼’, 그리고 나름대로 만들었던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배제 7대 검증, ‘명칭한 기준이야’, ‘인사는 코드로 인사해야 돼’. 이러면 과연 75만 국가공무원들이 공정한 채용, 승진, 자기 계발 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인사혁신처장님이 그 말씀만 하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직접 여쭙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처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이 살다 보면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 어떤 직위를 가지려면 그 직위에 합당한 분들이 가 주셔야 된다. 그와 반대되는, 배치되는 언행을 하셨던 분들이 있어서 그 업무를 하실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같은 국무위원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대통령께도 그런 건의를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느냐. 어떻습니까, 장관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대통령께서도 들으시지 않을까요?

○**서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검찰개혁 잘돼 갑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시작되고……

○**서범수 위원** 그런데 최근에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개혁안에 대해서 ‘검찰개혁, 오직에 장악돼 있다’라고 인신공격성 비난을 했습니다. 어떤 기분이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장관이 부하라고 할 수 있는 지방 검사장이 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기……

○**서범수 위원**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적인 내용은 제가 여기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소동이 맞느냐, 그래도 검사장은 국가공무원이잖아요. 국가공무원이 그것도 다른 데 SNS가 아니고 정당에서 주관하는 토론회 그리고 촛불행동이라는 그런 단체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가서 자기의 직속 상관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비난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맞습니까, 장관님?

○**법무부장관 정성호**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검찰……

○**서범수 위원** 이것 그대로…… 검찰이 그래서 간이 커지는 겁니다. 예를 들까요? 옛날에 경찰국 설립한다고 했을 때 총경들 회의할 때 그 총경들을 전부 징계 먹이고 전부 하방으로 보내고 했지 않습니까? 경찰은 그리하는데 검찰은 왜 이런 식으로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그대로 그냥 넘어갑니까? 이러니까 검찰개혁 하자는 거 아닙니까, 검찰개혁. 인사권 지금 장관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검찰 인사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하십니다. 저는 추천만 하지요.

○**서범수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법무부장관을 직접 공격하는 이런 검사장을 놔둬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검찰 오적이라고 지칭한 분들이 제가 장관 임명되기 전에 임명되신, 대통령에 의해서 직접 임명되신 분들이 거든요.

○**서범수 위원** 그래서 이걸 차제에 기강 확립……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원에서도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유념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을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서는 취임 일성으로 국민 통합은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최근에 일본과의 국제적 관계에 있어서는 미래를 지향하되 과거를 직시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전범기지요, 욱일기를 사용하는 행위가 지금도 버젓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욱일기는 한마디로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아직도 살아 계신 일제강점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시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무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1년 전쯤일 겁니다, 현충일에 부산 아파트 외벽에 욱일기가 걸리고요. 또 작년에 인천 도심에서도 욱일기를 달고 차량이 돌아다니고 또 최근에는 한성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건물 안에 욱일기 형상과 혐오 표현이 섞여서 전시가 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반면에 지금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욱일기를 규탄하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욱일기를 노골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을 하지 않고 그 반대편에 서서 잘못됐다 얘기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처럼 욱일기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이따금씩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서는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일단 욱일기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저희 헌법이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초로 한, 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부인하는 또 국가의 정체성 또 정통성을 부인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을 상징하는 전범기인 거지요.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우리 피해자분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곁에 있기 때문에 상처와 모욕을 주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일반 국민들께서도 굉장

히 불쾌해하고 분노를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회적인 비용도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렇다 보니까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곳에서는 나치의 상징이라고 하지요, 하켄크로이츠 아시지요? 그 나치의 상징을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이나 피해자 모욕을 사전에 차단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전범 피해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할 수가 없지요, 법적으로 대응할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 간에 분노와 혼란이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장관님, 간토대학살이나 난징대학살이라는 거 들어 보셨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수십만 명을 무차별적으로, 마치 나치가 하켄크로이츠라는 상징 아래서 유대인을 학살한 것처럼 일본인들도 그 제국주의 아래, 욱일기 아래 정말 무고한 시민들을 죽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 2개의 사건에 있어서 어떤 하나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 평가할 수 있으실까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렇지요. 2개 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무고한 국민들이 한 마디로 무차별적으로 살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저는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는 우리 국회랑 같이 욱일기 사용에 대해서 이제는 명확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단순한 처벌이라고만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 나름대로의 역사 정의를 세우는 거고 또 나아가서는 대통령님께서 얘기하시는 국민통합, 과거 직시라는 부분에 해당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욱일기에 있어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나라 차원에서 이제는 대응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하실 수 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우리 행안부장관님께도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부산 아파트 사건 때 주민들이 결국은 직접 나서서 항의를 하는 그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을 했어요. 인천 욱일기 차량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SNS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분노가 일어났고 한성대학교도 전시 사건 때문에 학내에서도 갈등으로 번졌지요.

그런데 현행법 체계로 경찰이나 지자체가 권고나 임의 철거 정도 수준밖에 못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실질적인 대응과 마찰이 사회적 비용으로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현장에만 계속해서 맡겨 뒀야 할까요,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욱일기와 관련된 사회적인 갈등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식민지배를 받았고 그것이 또 제국주의 침략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는 현재 아직도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과거 제국 해군의 욱일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 한일 간에도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한일 양국의 양심적인 시민들이 이렇게 침략의 상징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마땅히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만 위원 우리가 일단 국민들 차원에서 얘기를 먼저 해 보면 결국은 국가 차원 수준이 아니더라도 이미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계속해서 갈등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법하게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우리가 처벌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산 아파트 사건에서도 그 아파트에 있는 입주민들끼리 문제가 많았어요. 욕일기를 내걸었던 그 집 앞에 가 가지고 경고 문구를 붙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계란 던지고 또 당사자 직장으로 추정되는 홈페이지 가서 테러하고.

그러니까 경찰이나 지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고 수준의, 임의 철거 수준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직접 대응을 하다 보니까 더 큰 사고가 일어나거나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까지도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실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34개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자체 차원의 조례이다 보니까 공공시설 내에만 효력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학 건물, 민간 아파트 외벽, 개인 차량, 그러니까 사적 공간은 규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요. 그러니까 지자체 조례의 효과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국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과거의 입법 사례들을 보면 조금 과격하게 다뤄졌다고 평가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형법으로 다뤄져서 몇천만 원의 벌금이나 아니면 진짜 징역형이 떨어지는 걸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일부 반박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 수준으로는 대응하지 않더라도 경범죄 처벌법 수준에서 우리 사회가 이것만큼은 그래도 잘못됐다, 과격하지 않은 수준에서 우리 정부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헌법 전문이든 아니면 나치 하켄크로이츠처럼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되는 어떤 법적 기반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형법이 너무 과격했다면 경범죄 처벌법 수준에서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관련해서는 경찰청이나 또 법무부, 혹시 외교적 문제가 있다면 외교부와도 협의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장관님, 저희가 학술적이거나 연구를 목적으로 할 때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단 그런 상황이 아닐 때, 누군가를 조롱하기 위해서는 그걸 보호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는 있어야 되는데요. 방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욕일기 사용을 제재하는 게 외교적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런데요 장관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범기를 사용하는 국가가 외교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같이 피해국 입장에서는 욕일기 사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시점부터는 외교적 갈등이라는 걸 걱정해야 되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건 제가 앞서서 답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을 외교부도 잘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법무부장관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행안부장관님께서도 기본적인 수준에서의 전범기, 육일기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이제는 탁상공론이 아니고,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대응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의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榮夏 위원** 국무조정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국무2차장 나와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차장님, 지난 7월 30일 날 대미 관세협정이 체결돼서 저희가 15% 일괄 관세가 됐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수입 철강제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품목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린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8일부터는 기존 615개 파생 제품에서 407개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이런 경우 제품에 철강이나 알루미늄 함유분에 대해서 50% 추가 관세 부과된 것 알고 계시지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세 폭탄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업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장님?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아무래도 자동차하고 철강, 알루미늄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柳榮夏 위원** 그렇습니다. 자동차산업입니다.

화면을 좀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4년도 자동차 대미 수출액은 347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명실상부 1위 수출 품목인데요. 지난 7월 누계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181억 9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1%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 완성차만 있는 게 아니지요. 자동차 부품산업에도 똑같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수출 감소가 되면 내수시장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품 자체도 수출에 관세가 붙으니깐 양쪽으로 다 타격을 받겠지요.

부품산업으로 해서 내수 위기랑 수출 위기로 가장 타격을 받는 지역이 어디라고 알고 계십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

○柳榮夏 위원 대구광역시입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대구광역시의 대미 수출 1위 산업이 자동차 부품산업입니다. 표에 보시다시피 2024년 기준 대구 지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약 4억 1800만 달러입니다. 전체 대구 수출의 20.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다음 화면 넘겨 주실까요.

대구 상위 50개 기업 중에 15개 업체가 자동차 부품기업입니다. 그만큼 대구는 자동차 부품산업이 핵심 산업입니다.

문제는 주 거래처인 현대나 기아차 완성차업체들이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지 생산을 늘리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결국 부품산업의 수출 물량도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완성차업체들이 미국에서 완성차 물량을 늘리면 결국 국내 공장 가동률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줄어들게 되면 결국 부품업체들 내수도 위축되겠지요.

이 부품업체 중에 자본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미국 현지 공장을 증설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2차·3차·4차 벤더 협력업체나 영세 부품업체들은 여력이 안 돼요.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무조정실에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런 관세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갖고 있냐, 혹시 TF를 구성한 게 있냐.

화면 좀 띄워 보실까요.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관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 물었더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응하고 있고 국무조정실은 정책 조정이나 TF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무책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보신 화면이 아마 산업은행에서 관세 피해 기업에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다시피 집행률이 2.2%입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저게 집행률이 왜 저렇게 저조한지 파악해서 가지고요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기업이 망하고 난 다음에 돈을 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 골든타임 놓치면 영세업자들 다 도산하고 맙니다.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적극성을 띠고 절박성을 갖고 임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긴급경영자금 지원도 중요하고 무역보험 등 이런 단기적 정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 부품업체와 완성차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저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 도시들이, 산업의 기본은 제조업입니다. 이런 제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집니다. 좀 더 각별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계시지요?

장관님, 취임 축하드리면서 제가 오늘 곤란한 질문 몇 개 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이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사면법이 갖고 있는 또 대통령 사면권이 갖고 있는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새 정부 들어 처음 취임해서 실시한 지난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본래 취지와는 좀 거리가 멀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조국혁신당 대표라든지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굳이 그분들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듯이 공정성과 법치를 훼손한 분들에 대해서 과연 사면이 적절하냐는 국민들 비판은 장관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화면을 좀 보실까요?

그때 여론조사를 보면 이렇게 사면이 부적절하다는 국민 여론이 54%입니다. 물론 여론이 저는 국가정책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여론을 또 무시하고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조국 전 의원이나 윤미향 의원의 사면이 어쩌면 다른 분들을 위한 마중물이 아니냐 이런 기우가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김용이라고, 물론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 아주 이례적인 거지요. 보석으로 나오신 이분들에 대한 사면이나 또는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사면을 위한 밑자락이 아닌가 하는 국민 일부의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과 범죄적으로 공모 관계에 있는 분들의 사면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지금 사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자는 많은 여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분들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자 이런 의견에 대해 장관님 개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일단 사면권이 왕조시대의 어떤 유물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국민적 정당성과 민주성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면권을 어떤 특정인이라든가 특정 범죄에 대해서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柳榮夏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대정부 질의가 있으면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은정 검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감사윤리강령 21조에 보면 감사가 외부기관에 가서 의견을 발표할 때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동부지검이니까 아마 서울고검장에게 신고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죄송합니다. 확인 못 했습니다.

○**柳榮夏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러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임은정 검사를 잘 압니다. 좋아했고요, 지금

도 좋아합니다. 다만 그 자리가 갖고 있는 무게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의 프로필을 보면 부처 차장이 있는 지청장은 고사하고 일선 작은 소규모 지청장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을 과연 일선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한 게 옳은가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자, 물론 이 인사가 장관님 취임 전에 있었던 인사입니다.

임은정 검사가 세미나에 가서 했던 말은 아까 서범수 위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부가해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검사 생활을 했지만 소속 현직 검사장이 인사권자인 법무부장관과 자기 상관인 검찰총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검사들에 대해서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오적이다 이런 인신공격성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데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검사징계법 2조에 해당되는 검사가 지켜야 할 품위 유지에 저는 위배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공보숙 전 서울지검 2차장,—후배입니다—후배 검사가 임은정 검사에게 이랬습니다.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을 했다,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지요. 만약에 이 사태를 그냥 묵과하고 가면 저는 제2의, 제3의 임은정 검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검사가 본연의 임무로 해서 평가받지 않고 SNS나 정치적 견해를 통해서 평가받는 그런 게 만약에 만연화된다면 저는 검찰의 앞날은 더욱더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장관께서 인사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임은정 검사는 일선 검사장으로 맞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도 건의를 시켜 주십시오. 과연 이분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게 누구를 위한 승진인가, 과연 후배 검사들한테 이렇게 정치적 편향 되고 이런 발언 하면 승진하게 되는 그런 본보기를 보여 준 인사인가, 저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은 인사였다고 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한 임은정 검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적절한 책임을 물어 주실 것을 장관께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 성산의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성무 위원** 행안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남 창원 마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전당이 건립이 됐습니다. 올해 완공이 되었는데요, 아직 정식 개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2019년 10월 16일 부산·마산 부마민주항쟁 제40주년을 기념해서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고 마산의 경남대학 10·16 현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셔서 기념식을 하면서 약속을 해서, 국가 지원을 약속해서 만들어진 전당입니다.

그런데 이 전당에 국가예산 국비가, 121억의 보조금이 왔습니다. 그런데 완공이 되고

전시가 되었는데, 준공을 하기 전에 임시 전시 상태에서 개방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가서 보고는 민주화운동을 위한 전시, 역사 그리고 교육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시공간은 20%밖에 안 되고 그 20% 중에서도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이 없고 오히려 산업화의 성과에 대해서만 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매우 부적절하다.

이 전당이 만들어진 것은 역시 법적 근거가 명확합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 따라서…… 우리나라 4대 민주화 의거가 있지요. 4·19민주화 의거, 부마민주화 의거, 광주민주화 의거 그리고 6·10민주화 의거가 있습니다. 마산에는 이 4대 의거 중에 2개가 직접적인 현장입니다, 촉발된. 그럴 정도의 지역인데 실제로는 민주화와 관련된 전시는 거의 없고 오히려 산업화를 홍보하는 그런 전시가 돼 있어서 이거 창원 마산판 리박스쿨이다 하는 그런 지적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지역의 80개가 넘는 시민단체가 지금 몇 달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단체행동도 하고 있는데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가보조금이 이걸 위해서 121억이나 들어갔는데, 그렇게 해서 건립된 건물인데 그 건물이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보조금을 준 행안부, 관리하고 있는 행안부에서 이거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창원 민주주의전당이 운영 주체가 창원시이다 보니까 원래의 설립 목적으로 내세운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함양하고 민주시민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의 과오나 교훈에 대한 언급도 부족한 것 같고요. 이렇게 보조금이 사업 목적에서 벗어나서 사용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창원시로 하여금 시정하고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지방자치법 190조에도 행안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행안부가 자의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함양하는 데 유의미한 공간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잘 고려해서 그 점을 시정 방향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감사드립니다.

장관님, 지난주에 이미 경남지역의 8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에서 행안부에 진정서를 접한 감사청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실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나 이런 쪽에서 전시 내용들을 같이 상의할 수도 있고 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게 가능하다고……

○**허성무 위원** 그리고 시설을 완성해 왔는데 그렇게 해서 시설을 바꾸게 되면 또 다른 비용이 좀 추가로 들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행안부에서 부분적인 지원도 가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감사드립니다.

임기근 기재부2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차관님, 26년도 예산안이 지난주에 발표되고 R&D 예산이 35조 3279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19.3% 증가하였습니다. 역대 최고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이렇게 R&D를 위해서 정부가 높은 가치를 두고 우선적으로 정말 긴 역사에 가장 많은 증액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ABCDEF 연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해서 국민들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A는 인공지능, B는 바이오, C는 문화 콘텐츠, D는 방산, E는 에너지, F는 첨단 제조 이렇게 해서 아주 배분을 잘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24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24년도에는 16.4%의 R&D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산불이 일어나면 그 산이 모두 불타는 것은 하루 만에 족하지만 그게 복원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24년도에 삭감된 이 R&D 예산이 얼마나 많은 연구자들을 좌절하게 하고 연구 현장에서 떠나게 되고 과제들이 중단되고 과제들이 사라지고 그래서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하는데, 지난 과방위 상임위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과기부장관께서는 그러면 TF팀을 만들어서 그 영향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해 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결산위원회 첫날 총리님 출석해 계실 때 종합백서가 필요하다,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영향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극복할 건지를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는 백서 발행을 해 달라 했는데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차관님, 이것 단순히 과기부 하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 더 보여 주십시오.

정부 R&D 예산이 24년도에 보면 과기부 것이 약 33.7%입니다. 일반회계 그다음에 특별회계, 기금회계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이 방사청장님도 나와 계신데 방사청의 R&D가 많습니다. 그다음이 산자부 그다음이 중기부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삭감되면서 일어난 후유증에 대해서 정말로 종합적인 분석,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관님, 어찌하시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방금 허성무 위원님께서 26년 R&D 예산의 성과에 대해서 인정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총액도 총액이지만 오랜 기간 동안 과기계 출연연구기관에서 폐지를 요구했던 PBS도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를 인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24년 R&D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과오 또한 동시에 저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기부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그리고 백서 작성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되는 데에 따른 무슨 대책이 포함될 수 있는지 그런 논의 과정에 기재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23년도 채용구조, 24년도 채용구조를 비교해 가면서 각 부처별로 중단된 과제, 사라진 과제 또 계획되었다가 시작이 못 된 과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분류될 수 있고 또 그 과제에 참여했던 수많은 연구원들, 대학원 석사·박사 과정들, 이분들이 연구비를 받지 못하고 활동비를 받지 못하면서 좌절했던 이런 게 충분히 파악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시 각 연구기관의 최우수한 인력이었던 젊은 연구자들은 대한민국을 등지고

외국으로 이미 나갔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인력 실태에 대한 파악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차관님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고 기다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APEC 정상회담 준비가 잘되고 있는지 외교부장관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어쨌든 12월 3일 내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APEC 정상회담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했습니다. 제가 국회 APEC특위의 위원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전에 실패했던 잼버리 대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지난 몇 달 동안 열심히 많이 하면서 부처에 준비를 아주 다그치는 그런 노력들도 많이 했는데……

지금 저희들 걱정으로는 이제 두 달 반, 석 달이 채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안전 문제에서부터 교통, 숙박, 회의장, 만찬 등등의 이런 기초적인 준비 그다음에 공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인 점검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정말 걱정이거든요. 장관님이 직접, 지금 총리님이 그것을 챙기고 계시긴 합니까라는 사실 주관부처는 외교부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저도 경주에 내려가서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일부 미진한 것이 있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대회 형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가는 거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데 있어서도 작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근본적으로 APEC 대회가 물론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 중심이지만 이미 트럼프 대통령도 온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차기 대회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올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엄청난 외교의 장이 될 텐데 어떤 성과를 거두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 국민들이 매우 궁금해하는데 장관님 잠깐만이라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이미 각국 정상들에게 초청장이 나갔고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몇십 년 만에 갖게 되는 외교의 장이므로 이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도록 계획을 잘 세우고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래서 장관님,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 말씀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요. 저희 의원실로 좀 구체적인 자료들, 내용을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부산 사하갑의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권 위원 부산 사하갑의 이성권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 또 인권을 중시하는 정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잘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초기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안전하고 또 국민의 기

본적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저희 법무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행안부장관님, 똑같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좋습니다. 하나씩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PT를 먼저 한번 봐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게 부처 간의 핑퐁 게임으로 인해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인권 유린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제대로 인권의 구제 혹은 또 국민주권이라는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양상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과거에 국가 권력에 의해서 집단수용시설, 부산 소재의 영화숙·재생원의 인권침해 사례를 언론에서 보도했던 아주 오래된 기사들입니다.

이게 보면 1개 호실에 3~4평밖에 안 되는데 15~50명이 강제 수용을 당했다든지 연고자가 있는 아동도 강제 구금을 했다는지 폭행으로 인해서 실명과 고막이 파열됐다든지 이러한 인권침해 사례로 아주 눈에 두드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장 나와 계신가요?

이렇게 국가가 저지른 대국민 인권 폭력, 국가의 사과 및 피해 회복에 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동의합니다.

○이성권 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국가 인권 폭력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정부부처가 결국은 서로 핑퐁 게임을 함으로 인해서 가로막고 있는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이게 제가, 영화숙과 재생원 관련해서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상규명으로서 결정을 냈지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국가의 사과와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하라고 되어 있지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예.

○이성권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기 표에 나온 것처럼 제가 법안 발의를 7월 10일에 했습니다만 실제 위원회에 회부된 건 8월 19일입니다.

윤호중 장관님께서도 의원 생활을 하셔서 잘 아시다시피 보통 법안이 발의가 되면 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이 그다음 아니면 그다음 날이라든지 하루이틀이면 보통 회부가 되지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런데 제가 발의한 법안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소관 위원회가 결정이 안 되면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래서 제가 발의한 법안의 경우는 지금 한 달이 넘게 회부가 안 됐거든요.

진실·화해위원장님, 이렇게 회부가 늦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내부적인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3기 위원회 출범에 주력하다 보니 그리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시기적으로 여름이어서 좀 늦어지기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예,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라고 아마 위원장님은 판단하시겠지만 실제로는 복지부와 행안부 간에 주관 부처를 놓고서 서로 협의가 안 되어서 이렇게 되는 양상도 있습니다.

질문을 또 다음 것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PT 한번 넣어 보시지요.

행안부장관님,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상규명한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례는 총 몇 건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

○이성권 위원 알지를 못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몇 건인지.....

○이성권 위원 11건입니다. 11건 중에서 경기도에 있었던 선감학원의 경우는 행안부가 소관기관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나머지 6곳은 진화위로 결정이 되었고 또 나머지 3개 법안은 아직도 지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 하나를 놓고서 국회와 행정부 간에 이견이 조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덕성원의 경우는 복지부가 소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복지위원회가 아니고 행안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법안의 경우도 복지부로 되어 있는데 아직은 위원회가 정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양상이 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마도.....

○이성권 위원 좀 짧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복지법인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 복지부가 소관이고 그렇지 않은, 복지법인이 아닌 다른 일종의 과거 인권범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행안부가 맡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게 아니고, 다음 PPT를 한번 봐 보시지요.

제가 행안부하고 복지부하고 각각 이 법안에 대해서 답변서를 요청했습니다, 어디가 소관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 내용을 보는 것처럼 행안부는 당시 보건사회부의 시설관리책임으로 있었기 때문에 복지부가 소관이 되어야 된다고 답변을 하고 있고요, 복지부는 내무부 사업이라고 해서 행안부 소관이라고 서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핑퐁을 치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답변서를 보면. 이게 과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 인권을 중시한다는 정부의 모습인지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행안부장관님, 이러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게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행안부가 이런 사건, 과거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포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처가.....

○이성권 위원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행안부가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지 않나……

○**이성권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행안부가 소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저는 그게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지요.

아까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7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결정을 내어서 부처에 대한 권고를 내렸고요. 지금 3기를 앞두고 27건이 집단수용시설과 관련된 인권침해 사례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럴 경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수용기관마다, 시설마다 개별법을 만들어야지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본질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영화숙이나 재생원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고 다른 의원들도 다른 법안을 발의했지만 모든 수용시설에 맞는 법을 다 만들 필요가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관님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잘못 답변을 하신 거고 문제를 계속 양산시켜 나가는 꼴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지금 보면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법안들이 다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진실·화해법이 있지만 나머지 사건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집단수용시설에 관한, 인권침해에 관한 법을 포괄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개별 수용시설별로 거기에 따르는 국가의 공통 사과와 피해보상을 하는 게 맞지 개별법마다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방향 전환할 시점에 왔다는 것을 제가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집단시설이라고 해서 모두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성권 위원** 장관님, 제가 이 이야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실무 부서에서는 그 안을 가지고 저하고 상의까지 했습니다.

장관님이 아직 장관 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법무부장관님, 얼마 전에 선감학원하고 형제복지원 관련해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무부의 상소 취하를 했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게 지휘를 해 가지고……

○**이성권 위원** 그 취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과거 국가의 폭력이라든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에 관련해서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이성권 위원** 거기에 대상 기관으로 지금 형제복지원하고 선감학원이 대상이 되었지

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그것을 계속 끌고 가는 게 2차 가해이기 때문에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권 위원** 맞습니다. 그것 아주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환영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부산만 놓고 보면 형제복지원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숙·재생원이 있고요 덕성원도 법안이 발의돼 있고 마찬가지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국가에 대해서 사과를 권고하고 피해 보상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 건까지도 당연히 다음에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현재 법원 판결이, 사실심 판결이 끝난다고 하면 해야 됩니다.

○**이성권 위원** 그다음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그러면 결국은 정부가 국가의 배상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요.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이성권 위원** 그러면 아까 앞에 보면 정부 단독이 있고 지자체 공동피고가 있고 지자체 단독피고가 있습니다. 국가 단독피고의 경우에는 배상을 누가 해야 됩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일단 그 해당 예산은 소관 부처의 예산으로 지금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성권 위원** 국가가 할 것이지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런데 정부, 국가와 그리고 지자체가 공동피고로 돼 있을 경우에는 배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상금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정성호** 일단은 그게 연대책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배상하고 구상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분담하게 되겠지요.

○**이성권 위원** 지자체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되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자체도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겠지요.

○**이성권 위원** PPT가 안 나오게 됩니까, 시간 넘어가면?

그러면 죄송합니다. 국가와 그리고 지자체가 공동의 피고가 되었을 경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을,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 여성가족부차관님, 제가 작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이돌봄 지원사

업의 2024년도 사업 집행률이 한 75%밖에 될 것 같지 않으니 내년도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2024년 결산 자료에 들어간 아이돌봄 지원 실집행률 몇 % 정도 됩니까? 제가 여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71.4%입니다. 상당히 집행이 안 됐는데요.

차관님, 집행이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도 잘, 상세하게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좋은 취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돌봄수당 같은 것들은 증가하는 율이 굉장히 저희가 늘어났던 반면에 이 사업을 잘 집행할 수 있는 구조적인 측면인 아이돌보미를 양성한다든가 그다음에 서비스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운영비에 대한 그런 구조적인 측면을 저희가 살피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한규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제 4년째 계속하고 있는데요. 매년 질문을 드렸고 차관님 전임자들도 매년 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구조적으로 어렵다.

아니, 그러면 구조적으로 어려워서 집행률이 안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적게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제 주장이었고요. 다행히 동료 위원들이 수궁을 해 주셔서 가지고 384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이돌봄 예산을 포함해서 정부 예산이 삭감됐다고 이것을 반국가 세력의 전복 시도라고 하면서 계엄령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여가부 예산을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차관님, 아이돌봄 예산을 삭감한 게 반국가 세력의 국가 전복 시도였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아이돌보미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지를 잘 살려서 확대하는 부분은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

○김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삭감한 게 국회에서 삭감을 한 건데요. 국가 전복 시도였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국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피셔서 편성을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김한규 위원 실제로 이게 부당한 삭감이었는지는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제가 384억 원을 삭감했는데요.

차관님, 그러면 삭감된 2025년 올해 실집행률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올해는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가 잘 좀 보완을 해서 그래도 90% 이상은 집행할 것으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여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90%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그 집행이 제가 주장해서 삭감된 예산을 기준으로 90%입니다. 원래 여가부가 편성하겠다고 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8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정부 세력의 국가 전복 시도라고 한 예산 삭감으로 예산이 줄어들었으면 그거라도 다 써야 되는데 그것도 다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쓰지도 못할 예산인데 여가부가 사업 자체가 중요하니까 관행적으로 매년 높은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70%에서 8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채 몇 년째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적했다고 반국가 세력의 국가 전복 시도다. 아마 자료는 여가부에서 준비했었을 겁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추계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 예산, 그러니까 지금 오늘 결산을 하고 있는 2024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아이돌보미 숫자를 몇 명으로 전제했냐면 3.5만 명으로 추계해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실 텐데요.

그런데 이번에 결산 과정에서 받은 성과 달성표 자료를 봤더니 갑자기 아이돌보미 목표치가 2만 8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2만 9000명 정도로 늘려서 목표 달성을 했다고 저희 결산 서류를 준비해 왔습니다.

차관님, 아니, 예산 편성할 때는 3만 6000명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받아 놓고 실제로는 3만 6000명을 그러면 달성을 시켜야 되는데 은근슬쩍 결산 자료에는 2만 8000명이 목표였다고 주장을 하면서 목표 달성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설명해 보시지요.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제가 인원수를 저렇게, 인원수 줄인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김한규 위원** 저도 구석구석 서 있는 전제 숫자를 대조해 보느라고 힘들었는데요. 여가부 실무자들도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국회에서 예산·결산 심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업 추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담당 부서의 전망치를 보고 예산이 적정한지, 결산이 충분하게 됐는지 이것을 봐야 되는데 이 수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예산은 아이돌보미 숫자 충족도 못 했으면서 홍보, 돌보미 사업비 또 부족하다고 64억 정도 전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지금 결산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일부 삭감을 했는데요. 당시에 아이돌보미가 3만 6000명이라고 전제하고 추산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 온 겁니다.

차관님, 지금 2025년 9월인데요. 가장 비슷한 시점의 통계로 아이돌보미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제가 알기로 2만 89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요. 3만 6000에는 비슷하게 가지도 않은 상황인데 그것을 3만 6000을 전제로 목표를 아주 원대하게 잡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줄였다고 국가 전복 시도라고 지난 정부가 주장을 한 겁니다.

아이돌보미 사업 중요합니다. 차관님도 지난 여가위 그리고 또 본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아이돌보미 사업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돌보미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는 부분은 몇 년째 바뀌고 있지 않은데요.

그리고 오늘 여가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이 서비스 신청 후에 장기 대기 문제도 계속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렵겠지요. 어려우니까 계속 해

결이 안 되는데 그런데 여가부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부모들의 육아의 부담을 줄여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 출생률에도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번 정부에서는 여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가져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도 또 집행 못 했더라는 결산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 제가 4년째 반복해서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지금 지적하신 부분 무겁게 저희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취지에 맞게 잘 집행되려면 아이돌보미 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양성 관리나 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이 잘 되도록 저희도 예산의 구조적인 측면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부탁드립니다.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김한규 위원**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관련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집행 결산 내역을 봤더니 작년에는 87%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금 예산이 한 13% 정도는 지급되지 못했고 불용됐더라는 건데요. 지난 3년을 보면 불용된 예산만 한 1500억 정도가 됩니다.

혹시 장관님께서 이렇게 예산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원인을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세밀하게 보고받지는 않았으나 보상금 심사 과정이 늦어지면서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맞습니다.

보상금 지급 절차를 보면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PPT에서 보시다시피 제주도 실무위원회에서 조사·심사를 하고 행안부에서 결국 검토해서 결정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걸리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김한규 위원** 통상적으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김한규 위원** 원래 이것보다 훨씬 빨리 진행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오래 걸리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서지요. 그래서 지난번 국회에서도 이런 지적이 돼 갖고 시간제로, 임기제로 2명 정도가 충원됐는데 제주도에선 여전히 6명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절차가 지연되는데 갈수록 이제 남아 있는 사안들은 어려운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유족들이 제일 원하는 건 다른 4·3 관련된 사업도 많지만 본인이 피해자이고 유족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그에 대해서 보상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급해 달라, 신속하게. 단순히 돈을 빨리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피

해자와 유가족으로 인정을 해 주고 그로 인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명예를 회복하는 거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해야 될 거고 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안부에서 일시적으로 인원을 확충해서라도 좀 더 신속하게 이번 정부 내에서 만드시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번 어떤 절차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지 챙겨 봐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주로 사전 심의 절차에서 지연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인력 확충을 비롯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는 최종적으로 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치는데 위원 7명 중의 5명이 결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는 위원 추천을 이미 하신 것 같은데 국무총리가 임명하도록 돼 있으니까 총리께 신속하게 임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절차를 지금 진행할 수가 없는 스톱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김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휴식 정회 없이 계속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질의 답변 등 회의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잠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의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 동·남 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통일부장관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남북관계가 위낙에 경색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잇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이산가족들이 완전히 만남이 끊어진 지가 한 7년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해 있는 분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 마음이 점점 절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산가족으로 신청한 분들 중에서 현재 생존자가 약 26% 정도 되십니다. 그 가운데 70대 이상 고령자가 84%인데요. 그분들은 남북관계가 좋아질 때 엄청난 기대를 가졌다가 다시 경색되면서 마음에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나곤 합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공약은 이산가족 상봉 만드시 하겠다 했지만 이산가족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삭감했고 불법계엄 당시에는 북한 도발을 유도하는 외환죄까지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장관님, 지난 정부에서 급격히 줄어든 이산가족 관련 예산, 사실은 이산가족을 바로 만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그걸 포기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

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2000년 6·15 이후에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직계가족 이산가족이 13만 5000명이었습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10만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3만 5000명이 남아 계신데요.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80대 이상, 90대 이상이 주류를 이루고 특히 100세 이상도 780여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희한한 통계입니다. 이걸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통계입니다만 대한민국 5100만 가운데 100세 이상이 약 8000여 명 됩니다. 그런데 이산가족 13만 5000분 등록한 분 중에 100세 이상이 800여 명에 가깝다는 것은 전체의 10%를 차지합니다.

○**정진욱 위원** 맞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래서 제가 이거 박사 논문을 좀 써야 할 주제 아닌가, 가족을 만나기 전에는 눈을 감을 수 없다는 그런 한이 어떻게 보면 100세 이상 장수자가 이렇게 많게 된 배경이 아닌가 추정을 해 봅니다.

○**정진욱 위원** 그렇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아무튼 사실 남북관계가 끊어진 연원을 보면 2010년 5·24 조치가, 그게 분기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체 남북 협력 또는 지원도 끊어졌습니다. 당시 천안함 사건으로 촉발된 5·24 조치였습니다만 전면적인, 그러니까 선박 운항의 중단뿐만 아니라 투자의 중단, 방북 허가의 중단, 일체 교류의 중단이 수반돼 왔는데, 그 뒤에 점진적으로 좀 완화된 측면은 있지만 이제 다시 남북대화가 복원이 된다면 5·24 조치 같은 것은 해제해야 된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욱 위원** 저도 통계를 보면서 장관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90세 이상이 지금 살아 계신 분들 중에서 32.9%를 차지하고 또 80세 이상인 분들이 33.7%, 그걸 보면서 정말 염원이 얼마나 절절하시면 그렇게 버티고 계실까 이런 또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는데 장관님께서 잘해 주실 걸로 그렇게 믿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한말씀만 더 붙이면 체제나 이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욱 위원** 그렇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인간의 인간적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욱 위원** 감사합니다.

조현 외무부장관님께 간략히 여쭙겠습니다.

KAL858편 폭파사건 잘 아시지요? 잊혀져 있는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87년 11월 29일에 이라크를 출발해서 한국으로 오던 KAL858기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공항을 출발해서 태국 방콕 경유지를 가다가 폭발한 사건인데요. 경유지가 두 번이나 됩니다. 보통 경유지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유지가 많은 것은 비행기 샀을 싸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 비행기에는 대부분 어떤 분들이 타고 계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중동의 근로자분들이……

○**정진욱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없고 가난한 분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떠났던 분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대구MBC에서 2020년 1월 4일 날 KAL858기 잔해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 위치가……

한번 PPT 띄워 줘 보실까요? 띄울 수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것을 찍은 걸 봤는데 저 위치고요, 실제로도 저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상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얀마 바로 옆의 인근 바다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전두환 정권은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엔진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m 이내에 거의 모든 잔해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난 21대 국회 때 외교부와 함께 논의를 해서 외교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배정해서 조사를 하러 가기로 돼 있다가 미얀마에 쿠데타가 나면서 외부 사람들을 자기 국경 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조치로 인해서 못 가게 됐거든요.

이번에 저는 다시 추진해서 반드시 858기 유가족분들, 정말 잊혀져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한을 풀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관님, 추진되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아마 오랫동안 잊고 있어서 내용을 파악하시기가 사실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요. 이제 막 취임하셔서 제가 자세한 질문은 드리지 않았습시다.

그리고 국회도서관 분관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나와 계시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예, 사무차장 나와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오늘 김민기 사무총장님 대신에 박태형 사무차장님 나오셨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예.

○정진욱 위원 국회도서관이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국회에 있고요 그리고 또 부산에 있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예, 그렇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리고 또 분관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지금 세종 쪽에 분관이……

○정진욱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국가 지식정보체계 구축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회도서관의 역할 강화 방안’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 요지를 보면 호남 지역에는 관련된 시설이 전무하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에 국회도서관의 분관 건립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데 알고 계십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예, 국회도서관이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예, 그렇습니다.

국회도서관 분관 건립 연구용역 이번 내년 예산에 들어 있는 것도 아시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예,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여기서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도서관 광주관은 우리 대한민국을 삼각 축으로 보면 서울 그리고 영남에서 부산 그다음에 호남에서 광주 이렇게 삼각 축이 완성되는 그런 구도라고 보고요.

그래서 대상지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좁혀서 우리 광주 안에서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에는 한 8600평 정도의 넓은 옛날 보훈병원 부지가 있습니다. 이 보훈병원이 광산구로 이전하면서 저 넓은 땅이 23년 이상 비어 있는데요. 저곳은 교통의 요지인 백운광장 그리고 또 남구청에 바로 인접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총선 때 국회도서관 광주관 유치를 저의 제1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고요, 올해 대선에서도 지역 대표 공약으로 민주당 중앙선대위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남구는 제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 땅이 구 소유지입니다. 따로 돈을 더 들일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게 앞으로 대상지를 선정할 때 더 좋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요소 아닌가요, 사무차장님?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은 도서관 분관의 입지 분석과 관련되는 사항인데 자세한 부분은 연구용역에 포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예,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남구는 우리 광주에서 흔히 광주의 강남이라 불릴 정도로 초중고가 많이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종합대학이 2개 있고 인근에 또 조선대, 전남대 의대가 있는 교육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또 문화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남구민들이 오랫동안 국회도서관 건립을 준비해 왔는데 그 염원을 국회사무처에서도 각별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예, 연구용역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충북 충주의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이종배 위원입니다.

저는 외교부장관님, 국방부장관님, 교육부장관님께 질의할 테니까 다른 분들 불일 보실 분들 있으면 불일 보셔도 좋습니다.

앞서도 몇 분이 또 질문하셨는데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여쭙보겠습니다.

저는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도 국익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야당으로서 국민을 대신해서 꼭 지적해야 할 점은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현 외교부장관님, 지난번에 미국 다녀오셨잖아요. 일본도 건너뛰고 이렇게 미국으로 직행을 하셨는데 사전 조율 잘 되셨나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 사전 조율을 위해서 제가……

○이종배 위원 가셨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목요일 저녁에 떠나서 금요일 아침부터 그런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종배 위원 전에도 미국에 오래 계셨잖아요. 유엔에도 계셨고 그래 가지고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한미 정상회담 후에 공동성명이나 공동기자회견이 없어서 국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과는 공동성명도 했고 공동기자회견도 했는데 미국은 왜 그런 것이 안 됐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미국과 이번에 사실은 상당히 긴 공동성명을 준비를 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분야에서 잘 협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종배 위원 협의를 구체적으로 더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쉽게 양보할 수……

○이종배 위원 어쨌든 그래도 합의된 부분이라도 할 수 있었을 것 아닌가, 아니면 우리가 방향성이라도 좀 할 수 있었을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첫 방미 하셨을 때 다 정상회담 끝나고 공동성명 발표했잖아요. 안 한 분도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게 아주 짧게 나온 경우도 있었고 또 길게 팩트 위주로……

○이종배 위원 어쨌든 하기는 했잖아요. 다 나왔잖아요.

○외교부장관 조현 특히 이번의 경우는요……

○이종배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역대 다 했는데 이번에 안 하니까 더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외국 같은 경우 일본 총리하고도 공동성명 발표했고 또 인도 총리도 또 이탈리아 총리도 다 공동성명 발표했는데 왜 우리만 유독 안 했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입니다. 하여간 충분히 답변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언제 봅니까? APEC 때 봅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아닙니다. 9월 유엔총회 시에 아마도……

○이종배 위원 아, 유엔총회 시에.

유엔총회 시는 공동성명, 공동기자회견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때 회담에도?

○외교부장관 조현 유엔총회에서 별도의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을는지 아직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 노력하고 계시겠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지난 25일 제가 종합정책질의 할 때 자동차 품목관세는 일본과 동일한 15%는 우리에게 불리한 거고 또 대미 투자액 3500억 불도 GDP 대비해서 우리에게 과중하다 지적을 했습니다. 자동차 품목관세는 12.5%가 합당하고 투자액은 2000억~2500억 불이 GDP 대비하면 합당하다 하는, 적당하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런 협상 결과는 그

렇다 치더라도 7월 말에 합의한 자동차 품목관세 15%는 언제 문서화되는지 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지금 투자의 방법 또 액수는 이미 정해졌습시다마는……

○이종배 위원 액수는 정해졌다 하더라도 문서화가 안 되니까 지금도 자동차 수출할 때 품목관세 25% 부과하고 있는 것, 부담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걸 빨리 15%로 조정, 합의했으면 15%로 빨리 맞춰 줘야지요. 10% 적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러니까 지금 합의가 안 된 것이 어찌면, 제가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기간 동안에 높은 관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어쨌든 15%를 합의했으면 15%만 부담해야지, 그래서 지금 자동차 수출하는 데 25%, 부품도 수출하는 데 25% 부담하는 것은 너무 기업체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빨리 문서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방미에서 기업이 1500억 불 추가 직접투자 한다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투자할 게 5000억 불이나 되는데 향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일자리가 줄어든다든지 국내 투자가 줄어드는 이런 점이 상당히 걱정이 되니까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회답이라든지 외교는 결국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 내는 게 충분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성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

안규백 국방부장관님, 이재명 정부의 대북 조치 요즘 너무 일방적이고 유화적인 저자세 아닌가 하는 지적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일방적이고 저자세라기보다는요 여러 가지 제재 완화 조치랄지 또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낮은 단계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종배 위원 하여간 좋은 생각도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북한도 거기에 대응해서 같이 손뼉이 좀 마주쳤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우리들이 노력한다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호응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배 위원 기대는 하는데 빨리 그런 호응이 있도록 다각적으로, 물론 국방부만 할 일은 아니지만 다각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

핵과 관련해서 일부 여당 의원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 하는 발언도 했고 조현 장관님은 북한 핵보유국 관련해서는 북미의 밀당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협상이 필요하다는 말씀 하셨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입장이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우리는 NPT 체제에 가입돼 있는 나라로서 북한 핵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정해서도 안 되고요.

○이종배 위원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그건 일관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북한 핵 해법으로 3단계, 동결·축소·비핵화 방침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이종배 위원 북한 핵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 동결인지, 어떤 상황을 알아야 동결인지, 동결을 했는지, 그다음에 이걸 축소할 건지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현 북핵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IAEA에서 예전에 사찰도 하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우라늄 농축이랄지 재처리 시설을 보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배 위원 추정하고 계시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런 판단에서 그런 말씀 하신……

○이종배 위원 접근하신 거지요?

전 정부에서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을 계속 유지할 생각이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NCG 그룹은 계속 유지·승화·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종배 위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서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정도는 우리가 좀 얻어 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의견이……

○국방부장관 안규백 얻어 낸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자주권 차원, 주권국가로서의 원자력 재처리 문제의 협정 문제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종배 위원 시간 다 돼 가지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또 필요한 것 질의하고.

교육부차관님, 질의할 게 있는데 제가 문서로 질의할 테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이종배 위원님처럼 질의하시기에 앞서서 질의하실 분들을 지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잠시 이석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갑의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규 위원 저는 국무조정실 그리고 기재부 그다음에 통일부 이렇게 세 분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 관악구갑 박민규 위원입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님 못 오셔서 차장님 오셨는데 1차장님이신가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2차장입니다.

○박민규 위원 김용수 차장님, 이름이 유사하셔서……

만약에 업무가 1차장 업무라면 또 실장님께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사상 초유의 R&D 불법 예산 삭감을 벌였습니다. R&D 예산이 15%나 삭감되면서 기존에 진행됐던 연구도 중단되고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토대가 완전히 망가진 최대의 정책 실패 중의 하나로 기록될 사태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매몰비용이 발생했고 청년 연구인력들이 해외로 떠나는 등 연

구 현장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요. R&D 카르텔이라는 실체가 없는 이런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쳐 버린 정치 실패인데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 삭감을 지시했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그리고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사이에서 첫째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 둘째 누가 중심이 되어서 삭감을 지휘했는지, 셋째 구체적인 삭감 규모는 누가 설계해서 결정했는지, 넷째 어떤 방식으로 각 부처—여기는 대통령실, 기재부, 과기부 혁신본부입니다—그리고 그 관련된 각 부처의 R&D 예산을 담당하는 산하기관들에게 어떤 압박을 주었는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정부의 책임 있는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행히 최근 과기부가 R&D진상조사TF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이 저기 PPT 화면에 있습니다.

김용수 차장님, 총리실은 과기정통부로부터 진상조사TF 계획과 조사단 구성에 대해 보고받으셨지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TF를 구성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민규 위원 그 정도시지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예.

○박민규 위원 저희 의원실에 좀 더 자세한 안이 보고가 됐는데요 그거를 보면 삭감 지시와 전달 경위 등 타임라인 순서대로 재구성해서 사실관계를 따져 보겠다는 과기정통부의 노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과기부가 R&D 주무 부처로서 이러한 정책 실패를 복기하고 성찰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과기부 차원의 진상조사만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R&D 불법 삭감 사태 전모를 규명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현재 TF 계획안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기정통부 내부에서의 R&D 예산 배분과 조정에 관해 그러한 사람들만 제한되어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지시 아래 실질적으로 R&D 삭감을 지휘하고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2023년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당시 2023년 기재부 예산실에 대한 책임 규명은 불가능한 조사입니다.

예산 삭감은 기재부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압박해서 추진한 사안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 과기정통부 자체 조사만으로 끝난다면 이는 과기부와 혁신본부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사의 대상을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혁신본부 상하 간의 예산 재검토 과정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는 국무조정실의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차장님, 여기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은 조사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기부에서 조사TF를 지난주에 발족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파악하고 계신 조사 범위보다 더 크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취지도 제가 잘 이해를 하겠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과기부 TF에서 하는 조사를 일단 좀 보고 그 외까지 확대를 해야 되는지는 관계 부처 간에 같이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민규 위원 예산의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물론 대통령실은 지금은 다 분해되어 있지만 기획재정부 자체만은 과기부 TF와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해결해야 될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태에서 과거의 문제로 시간을 낭비할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국무조정실 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은 알겠지만 거기에 기획재정부가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의 입장을 잘 협의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저의 강력한 의견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예.

○박민규 위원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과기정통부 스스로도 외부에서 진행된 사안은 사실관계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서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어서 임기근 차관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차관님, 2023년도에 어디서 근무하고 계셨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2023년도 초기에는 예산실에 있다가 그다음에 재정차관보로 옮겼습니다.

○박민규 위원 재정차관보, 그렇다면 그때 이 의사결정 과정 속에 어쨌든 있으셨던 거네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있지 않았습니다.

○박민규 위원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기재부 재정차관보로 계셨다면 이 과정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예산심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국무위원들과 예결위원들도 또 국민들도 궁금해하실 텐데 이런 이해적인 대통령실의 결정에 의해서 과기부의 예산 삭감이 진행됐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어떤 공식 라인을 통해서 협의하고 진행하게 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억이 나시는 한도에서?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일단은 과기혁신본부에서 내년도 R&D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안을 만들고요.

○박민규 위원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 안이 기재부로 넘어오게 되면 그다음 단계에서 기재부가 필요한 부분에 일부는 증액하기도 하고 일부는 감액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박민규 위원 맞습니다. 법상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서, 국가 R&D 예산은 매우 중요하고 낭비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담은 것을, 혁신본부가 설립된 취지에 맞춰서 조정된 안을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예산 라인에서 한 번 더 보는 1주 정도의 기간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것이 다시 옥상옥과 책임과 권한에 혼선을 일으키는 점이 있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 의견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2023년도 24년 R&D 예산 삭감의 과정에서 이처럼 기획재정부, 예산 부처는 거기에 협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차관님께 여기서 답을 원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오늘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니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셔서……

저는 여기서 이걸 담당했던 국·과장들을 문책하고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획

재정부가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재정건전성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재정에 대한 자부심과 신념을 가지고 지켜 왔던 것이 가장 산산이 무너졌던 것이 제가 보기엔 지난 과학 예산의 과도한 삭감이었습니다. 그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기획재정부도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미숙했다라는 점을 국무조정실과 함께 협의해서 한번 조사를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 당시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는 국조실, 과기부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부탁드립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님, 개인적으로 2005년, 2006년 행정부처의 장관실 비서로 일할 때 통일부장관으로서 개성공단 설립과 당시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매진하던 장관님을 동료 의원으로 있다가 다시 또 통일부장관이라는 숙명적인 어려운 직을 맡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장관님, 하지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많은 통일 관련된 기능, 인력들이 줄어들고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통일부장관님, 앞으로 이 기능을 어떻게 회복하는 것이 좋고 국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간단히 말씀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첫 번째는 원상회복입니다.

사실 지금 통일부는 조직과 기능, 역할 편제가 비정상화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류협력 기능이 없어졌고요 교류협력국 또 남북회담사무국도 없어졌고 개성공단 지원 부서도 없어졌고 연락사무소 지원하는 것도 없어져서 남북관계관리단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전부 통폐합을 시켜 놔는데 이것 전부 원상회복, 윤호중 행안부장관님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20년 전 제가 통일부장관 할 때와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져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직 핵실험 전입니다. 아직 핵탄두를 갖고 있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초기만 해도 그때 북의 핵무기 보유 추정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기준으로 10개입니다. 많아야 20개. 그런데 지난 3~4년 사이에 작년 말로 2배 반 늘어났습니다. 최소 50개 내지 90개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10개 이상씩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북한의 핵 능력을 중단시키는 것, 스톱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가장 긴요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보당의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저는 교육부 그리고 행안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님,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전주 M초등학교에서 2년 이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 머리 스타일 왜 칭찬 안해요?’, ‘생일인데 노래 안 불러 줬으니 사과하세요’, ‘회장선거 결과가 조작됐으니 재개표

해 주세요’, ‘왜 전화 안 받아요?’ 그리고 고소.

차마 보고 있기도 듣고 있기도 민망한 학부모 악성 민원 사례들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 담임교사는 1년 만에 여섯 번째 바뀌었고 1학기 동안 아동학대 신고 세 번, 112 경찰 출동 다섯 번, 각종 민원 제기 40회, 형사고발 5회. 정상적 교과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아이들은 학습권 침해로 이어져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차관님, 전주 M초등학교 사태 파악하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전종덕 위원** 결국 전주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이 학부모 2명에 대해서 작년에는 특별교육시간 30시간, 50시간 이수 명령과 올해는 학부모 심리치료를 각각 15시간씩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학부모들은 단 1시간도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선생님들은 정신과 치료에 심리상담에 경찰 조사까지 받으며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두 학부모가 특별교육 명령을 이수하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 30시간, 50시간 이런 특별교육 프로그램이 교육청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태료 처분 절차도 소극적인 것으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권침해가 계속되고 있고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이 무력화되는데 지역 교육청에만 맡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겠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다음 PPT 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서이초 교사 이후에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이 시행되었지만 교사들은 현장이 아직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저연차 선생님들의 경우는 41%가 교권 침해로 학교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동복지법 17조 5호를 악용하는, 이것을 악용하면서 발생하는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이기도 한 이 아동복지법 17조 5호의 모호한 규정을, 정당한 교육활동과 아동학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돼야 합니다. 이게 복지부다 교육부다 이렇게 부처에 떠넘길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차관님, 아동복지법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협의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더 이상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도 강화해야 합니다. 무고 신고를 제재한다든지 무혐의가 나온 교사들에 대한 피해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현장에 배포해야겠지요. 그리고 그래야만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종덕 위원** 교권 보호 강화 대책 그리고 예산도 더욱더 확대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위한 강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저희가 2년 전에 교권 관련된 다섯 가지 법을, 다섯 개의 법을 개정을 해서 제도는 개선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현장에 안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보다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조만간 저희가 발표도 하고 또 교권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시급하게 대책 세워 주시고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과 같은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권 보호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행안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차관입니다.

○**전종덕 위원** 예, 차관님.

김민재 차관님이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전종덕 위원** PT 한번 봐 주십시오.

지난 8월 20일 우리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태원참사에 투입됐던 30대 소방관의 죽음이었습니다. 뒤늦게 알려졌지만 한 명 더 있었습니다. 한 달 새 2명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소방관들은 재난 현장에서 우리 국민의 목숨을 구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 소방청이 실시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조사에 따르면 PTSD는 4375명, 우울은 3937명, 자살 위험은 314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보다 10배 이상 높은 유병률인데 지난 4년간 공무상 요양 신청은 25%가 불승인되었습니다. 24년만 35%가 불승인되었네요.

경남 고성외의 소방관의 경우 이태원참사 2년 뒤에 초진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승인되었습니다. PTSD 같은 경우는 자연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학문적으로도 입증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발생 시점만을 기계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려면 이 공무원이 그 상황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입증을 하려면 그 끔찍했던 재난 현장을 다시 기억해야 되고 필요한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그것 자체가 고통이고 2차 가해 아니겠습니까?

저는 최소한 발생 시점 그다음에 사건의 장소 이런 것만 기재하면 나머지는 재해보상심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관님, 공무상 질병·재해 인정 요건을 좀 완화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재해보상심의회에서 결정할 때 사적인 부분하고 또 공적인 부분이 좀 혼재돼 있으니까 그 순직 인정 비율이 제가 봐도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인사혁신처가 재해보상심의회위원회를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밀히 협

의해 나가서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미국은 9·11 테러 이후에 뉴욕주 등 이런 곳에서 평생 치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PTSD 같은 경우는 공무상 질병으로 제도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무상 질병으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런 부분도 소방청장 등과 협의해서 장기간 주기적으로 추적 관리해 나가는 방안 등을 마련……

○전종덕 위원 예, 적극적으로 방안 마련해 주시고 제도화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참사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들은 내상, 외상 이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상담을 다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받는 상담이 아니라 저는 의무상담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소방청에서 굉장히 바쁘고 하니까 직접 찾아가는 상담실……

○전종덕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리고 근처 병원에 찾아가서 할 수 있게끔 주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좀 누락되는 분들 없이……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해야겠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청에서 찾아가는 상담실 그리고 정신과 진료 지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소방관서가 268개입니다. 그런데 전국 상담사는 128명입니다. 48% 수준이지요. 이 전국의 상담사가 일인당 연 799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소방청에서도 1 소방서 1 상담계획을 세웠는데 예산 문제로 26년까지 166명, 28년에서야 1 관서 1 상담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너무 늦지요. 그리고 이것 또한 5 대 5 지방비 매칭펀드가 돼 있어서 지방재정 사정에 따라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지원 같은 경우도요 상담 건수는 7만 9000건인데 그중에 한 9% 정도인 7635명만 받고 있어요. 예산도 5억 6000 수준입니다. 상담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진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수요 대비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상담사 늘리는 문제와 정신과 지원을 하는 문제는 이 속도와 이 예산으로는 우리 소방 공무원들의 정신건강 위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또 시급하게 확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주신 의견도 저희가 소방청하고 적극 협의해서 좋은 방안,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정말 재난 현장에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 소방관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말씀만 하지 마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실질적 대책을 꼭 세워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먼저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서 국가 차원에서 소방관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것을 꼭 보여 줄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의 존경하는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안녕하십니까?

영주·영양·봉화 출신 임종득 위원입니다.

저는 국방부장관님, 기재부2차관님, 법무부장관님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임종득 위원 오늘 오후에 보니까 속보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군 수뇌부 인사가 나오는데 예상하고 다르게 7명의 4성 장군 전부 교체가 됐어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장관님의 의중이 반영이 된 겁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임종득 위원 채신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조기 안정화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공감합니다.

○임종득 위원 문민 장관으로서 부임을 하셨으니까 조기에 리더십을 발휘해서 안정화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감사합니다.

○임종득 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바로 국제전략연구소를 방문해서 연설을 했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때 그 자리에서 국방비 인상을 미국이 먼저 제안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안을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국방비 규모의 결정은 주권국가인 우리가 결정할 사안인데 여러 가지 국내외 안보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위상 확고히 해서.....

○임종득 위원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궁금한 것은 구체적으로 국방비를 GDP 대비 얼마 정도로 어디에, 얼마의 기간을 가지고 하는 그런 정도는.....

○국방부장관 안규백 구체적으로 무슨 R&D 연구비랄지 한국형 3축 체계랄지 이렇게 지명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한국의 국방력과 안보 증강을 위해서.....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최대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인 것 같습니다.

○임종득 위원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지요.

지금 답변하는데 왜 제가 그만 잘랐는가 하면 사실은 미국은 지난 6월부터 해서 국방비 인상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헤그세스가 6월 1일 날 이야기도 했었고 국방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서 6월 19일 날 또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여기에 미국의 청구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정상회담에서 제안을 했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미국 동맹국 중 GDP 대비 가장 넓게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나라고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증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임종득 위원 그 배경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선수들이 그것을 지금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런데 그것을……

○임종득 위원 지금 나토가 이미 국방비 GDP 대비 5%를 합의 본 상태이고, 그렇지요? 지금 헤그세스가 얘기를 하고 국방부 대변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방부장관 안규백 우리는……

○임종득 위원 우리 대통령이 가 가지고 5%…… 아니, 우리 대통령이 가서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면 그런 배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러니까 우리는 미 측에서……

○임종득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이야기 안 하시냐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우리는 미 측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임종득 위원 그러면 제안한 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우리 스스로가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겁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진척된 게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니지요, 그것을 어느 사안과 어떤 무기 체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밝힐 수 없는 것이고……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총괄적으로 문제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종득 위원 지금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지금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5%든 아니면 3.8%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경제 능력을 놓고 보나, 지금 우리가 한 2.3%, 2.6% 정도의 GDP 대비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비로?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 재정 상태로써 이게 가능하냐는 부분들을 국방부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기재부 차원에서도 고민하면서 검토하고 우리의 전략을 세워 가지고 정상회담에 임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정부는 국내외 안보 환경과 재정 여건을 최대한 고려해 가지고……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국방비를 우리 능력과 태세에 맞게 할 겁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래서 하시다시피……

○임종득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끊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하시다시피……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8.2%의 증액이 나왔고 단년도 국방비 예산의 5조 증액은 정부 수립 이래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 정도의 국방비에 대해서는 철저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기재부2차관님, 지난번에 한미 관세협상 그다음에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투자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3500억 불로 되어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3500억 불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임종득 위원 4500억 불 아니에요? 아니면 6000억 불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것은 포괄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임종득 위원 아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난번이라고 말씀하셔서……

○임종득 위원 왜냐하면 지난 7월 말 관세협상을 하면서 3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임종득 위원 그리고 1000억 달러를 에너지 구매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기업 회장들을 모시고 가서 기업들이 15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지요. 그러면 전부 얼마입니까? 그것을 3500억 불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렇게 보시면……

○임종득 위원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게 전부 합산하면……

○임종득 위원 그러면 6000억 달러면 한화로 얼마 정도가 됩니까? 계산해 보셨어요? 환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800조 혹은 840조까지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1년 예

산이 얼마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728조입니다.

○임종득 위원 우리 외환보유고는 얼마 됩니까, 지금?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4100억 불 정도 됩니다.

○임종득 위원 한 4000억 정도 되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4100억 불 정도 됩니다.

○임종득 위원 4000억 달러.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4100억 달러.

○임종득 위원 그런데 어떻게 6000억 달러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어요? 가능해요? 어떻게 이런 협상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고 잘하셨어요?

그리고 일본과 EU의 미국 투자 합의 내용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일본과 EU의 합의 내용 같은 경우는 외부로 공개된 부분도 있고 공개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임종득 위원 아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래서 그것을 수평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일본이 공개된 게 5500억 달러, EU가 600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6000억 달러예요.

일본하고 우리 비교하면 경제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일본이 약 2.5배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임종득 위원 그다음에 외환보유고를 놓고 봤을 때 약 1조 2000억 원입니다. 우리보다 3배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유럽연합은 27개 국가로 연합된 국가고요,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우리보다 10배가 넘어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수준의 대미 투자를 합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투자할 능력이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대미 투자의, 지금 임종득 위원님께서 합산하신 숫자가 다 등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정부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3500억 불이고 1500억 불은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투자하기로 한 거고요.

○임종득 위원 그러면 그 3500억 불을 할 수 있어요?

다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리고 3500억 불은 내용을 100%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임종득 위원 아니, 당연히 그렇지요. 그건 다 똑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부 이렇게 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총계가 그렇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과연…… 그게 현금과 그것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제 규모를 놓고 봤을 때, EU나 일본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이재명 정부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국익 중심의 외

교나, 실용외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앞으로의 진행 상황은 상호 호혜적인 원칙 그리고 국익 우선의 원칙에 따라 순차적으로 저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범위 내에서 진행될 겁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광복절 특사에 관련돼서 질문을 좀 할게요.

사실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추진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결과는 많은 논란을 낳았고 국민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결과가 됐습니다.

주무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가지고, 물론 단기적으로는 여론조사상의 그런 문제점도 약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임종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상 인원들이 윤미향, 조국, 최강욱, 조희연 등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은 분들이 포함돼 있었고요. 또 그 내용들을 보면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유용한 사람을 광복절 날 한다는 문제, 자녀 입시, 청와대 감찰 무마 등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사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동의 안 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이번 광복절 사면 같은 경우는 또 경제회복 차원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자들 그다음에 이에 관련된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돼서 장관께서는 필요성을 언급하신 적도 있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조국 전 대표가 형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이 됐는데 이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다만 저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장관 임명되기 전에 언론을 봤을 때 조국 전 교수뿐만 아니라 그의 배우자 또 가족들, 자녀들이 받았던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양형이 조금 과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지요.

조국 전 대표가 나오면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에 감사한다.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인 장면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냥 조국 전 장관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종득 위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이것 아시지요? 이것 때문에 SNS가 시끄러웠어요.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민적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위선을 떨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개인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임종득 위원** 다음 슬라이드. 아, 슬라이드를 못 보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사면과 관련돼서 앞으로 하실 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의 존경하는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승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저는 법원행정처장님과 그다음에 기재부2차관님이신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박희승 위원** 이렇게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부는 헌법상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국민 권리구제의 핵심인데요. 지금 OECD 평균 법원 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0.7% 정도인데 우리 사법부 예산의 비중은 2014년에 0.42%에서 10년간 21.4% 감소해서 0.33%에 불과합니다. 이는 국제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물가상승률과 비교해도 사실상 삭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최근 3년 물가상승률이 3.7%고 대법원 예산 연평균 증가분은 1.3%에 불과합니다.

처장님, 이 예산으로 사법부 기능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도에 저희들이 0.43% 정도였고 10년 뒤인 2023년경에는 0.33% 정도로 예산 비중이 줄었습니다. 다만 작년부터, 특히 올해 들어서는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저희 형편을 이해를 하고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10년간에 걸쳐서 예산이 축소된 결과가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어려운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2017년, 2018년 이때는 월드뱅크—세계은행—에서 세계 각국의 소송의 신속한 처리 그리고 소송비용 정도 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수치를 매긴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020년도에는 세계 2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사법부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월드뱅크 통계 조사는 이제 중단이 되었고 2023년도에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라는 곳에서 신속한 재판 관점에서 통계를 내 본 결과 민사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이 세계 10위로 주저앉았고 형사 분야에서는 세계 4위가 되었습니다. 이때 민사에서 1위를 한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95년도에 법관의 대량 이직 등 이런 사태를 직면해서 사법부에 대규모 투자를 한 결과 2020년도 조사 결과로는 국민의 98%가 사법부 재판에 대한 신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가 법치주

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나빠진 지표가 앞으로는 기재부의 적극 협조하에 다시 한번 과거의 그 좋은 지표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지금 제가 복지위에 있으면서 작년 의료대란 때 전공의들 평균 월급을 보니까 연봉이 약 칠팔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법관, 법조 자격을 취득해서 변호사 5년 정도 한 사람들의 초봉이 오륙천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레지던트들보다 적게 법관들이 보수를 받으면서 어떻게 고강도의 일을 다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더구나 지금 법관들은 보수 외에 시간외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별도로 받지는 않습니다.

○박희승 위원 주말수당 주고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아닙니다.

○박희승 위원 그러니까 법관들 보면 밤에도 10시, 11시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토요일, 일요일 남는 시간 와서 일을 하고 그런 분들이 태반인데 전혀 거기에 대한 지원도 없이, 다른 직역에 비해서 정말…… 특히 요즘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말 국가 전체적으로 봐도 예산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반도 안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기재부에서도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충분히 고려하고…… 제가 약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희승 위원 아니요. 제가 좀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최근 10년간 사법부가 요구한 예산이 평균 7.4% 정도 삭감이 됐고요. 2023년도 2100억 원가량이 삭감이 돼서 그게 무려 9.4%나 되고 이렇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반영이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법부 예산 비중이 0.3%로 내려앉은 2020년부터 법원의 재판 지연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심 민사합의 평균 처리일수가 2014년에 252일에서 2023년에는 473일로 약 87%가량 재판 처리일수가 증가했고요. 일심 형사공판의 미제 건수 역시 2014년 9만여 건에서 2024년에는 12만여 건으로 3만 건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예산 문제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역시 통계상으로도 이렇게 사건 처리가 많이 지연되고 있다. 이것은 정말 인간의 한계를 넘는 노력이나 판사들의 야간 근무, 주말 근무를 강요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워라벨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한 노동력을 투입해서 사건 처리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인력 충원, 전산화, 시설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부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또 빨리 증액을 해야 된다는 분야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고 다행히 기재부 협조하에 잘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가장 시급한 분야라고 하면 모든 중심이 되어야 될 법관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5년 된 초임 법관들이 대형 로펌의 5년 차 변호사들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 두세 배 정도 못 받는 이런 상황이라서 중견 법관들의 이직이 굉장히 많았던 상황인 데다가 또 특히 신입, 실력 유능한 젊은 법관들의 유입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아시다시피 저희 대한민국의 법관 수가 지금 3250여 명 정도 되고 있는데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2000명 정도, 프랑스 같은 경우도 한 9000명 정도 이런 상황이라서 그쪽에서는 많은 사실심 법관들을 전제로 해서 가령 소액사건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하루 종일 변론을 하는 이런 현상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그런 걸 갖다가 감당할 형편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관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또 사실심 법관의 증원 이런 부분이 좀 시급한 상황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최근 통계에도 보면 특히 하급심 재판 심리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고 오히려 상고심은 심리 기일이 지금 많이 단축되고 있어요. 대법원에서 최근에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은 또 최근의 대법관 증원 논란하고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관님, 현재 대한민국 검사 정원은 약 2200명 남짓이고 판사 정원은 3200명 정도 해서 판사들이 한 1000여 명 많습니다. 그런데 2025년 법무부 전체 예산은 약 4조 4700억 정도인데 사법부 예산은 2조 3000억밖에 안 돼요. 도대체…… 지금 근무 인원수가 법원이 훨씬 더 많은데 왜 이렇게 검찰보다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근무 인원수하고 예산 자체하고는 일대일 매칭 관계가 기본적으로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똑같은 사람이더라도 법원에 계신 분이 수행하는 업무하고 검찰에 계신 분이 수행하는 업무하고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법원과 검찰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마는 사실 전산화의 정도, 시설비에 따라서 이런 편차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대법원의 총지출 대비 부처 예산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외람된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그 당시 똑같은 시계열로 비교를 해 보면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부나 경찰청은 훨씬 더 큰 폭으로 줄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큰 줄기에서만 비교를 했지만 사실은 전 세계의 법원 예산이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반도 안 돼요, 지금 선진국 평균에 비교하면. 그래서 이미 예산 세팅할 때부터 지금 기재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 좀 검토를 잘해 주시고 사실은……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법부의 신뢰가 대한민국을 끌어가는 중요한 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승 위원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정부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헌법기관인 대법원으로부터 동의하시는지 동의 안 하시는지 저희가 지금 의견을 즉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소송의 신속한 처리 이것은 기본적으로 판사 정원법하고 관련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판사 증원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 올리고……

○박희승 위원 그것도 저희들도, 작년에도 일부 증원했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리고 또 사법부 신뢰 말씀을 주셨는데 사법부 신뢰의 문제가 저는 예산만의 문제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이렇게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은 행정부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직급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부터는 시간외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법원 같은 경우는 직급이 훨씬 높게 책정이 돼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법부의 신뢰가 대한민국을 끌여가는 중요한 힘 중의 하나라고 100% 저희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희승 위원 아까 행정처장님도 말씀했지만 WTO에서 계속 매년 민사·상사 재판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2010년에서 2020년 전까지는 거의 정말 1·2·3·4등 안에 들었어요, 평가가. 그랬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한 10위권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물적인 지원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동의합니다.

○박희승 위원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만찬을 위해서 오후 회의는 송기현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율의 존경하는 송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현 위원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차관님하고 또 장관들께서 나오셨는데요. 아까 야당 위원님 질문하실 때 미국과의 협상에 관련돼서 차관님들도 그렇고 다른 장관님들도 그렇고 좀 더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500억 불 얘기할 때 추가로 다른 부분도 들어갔는데 에너지 구입 비용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기존에 구입해야 되는 당연한 비용이 같이 포함된 부분이 있어서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그 부분은 우리가 정말 잘한 거다 얘기도 하고, 민간부문 투자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까지 다 포함돼서 얘기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꺼번에 다 섞어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런 것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행안부차관님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송기현 위원 PPT 한번 띄워 줘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2018년도에 시작된 사업인데 2022년, 2023년까지 꾸준히 많은 참여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전체 18만 6404명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다음 것, 혹시 도표 있나요?

보면 정규직 전환율이 80%에 해당이 되고 청년 만족도도 90% 이상 된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위해서 만든 제도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맞습니다.

○송기현 위원 2021년도에 국고보조사업 적격성 평가를 통과해서 지속성이 인정된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송기현 위원 그런데 22년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입장이 바뀌어 가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보다는 청년인턴제도 이런 등등의 사업으로 바뀌어 가지고 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송기현 위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예산도 대폭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2022년도에 2396억이던 예산이 2025년도에는 198억으로 해 가지고 91.7%가 줄었기 때문에 신규 참여하는 모집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게 사실 사업 평가할 때 행안부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했었고.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송기현 위원 그런데 나중에 정부가 바뀐 다음에 보니까 이것이 단기형 사업이기 때문에 종료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성과가 있고 실제로 많은 결과가 지역에 도움이 되고 이런 사업 같으면 계속해서 이어 나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는 사업 평가 성과가 굉장히 좋다고 해서 어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게 됨으로써 올해까지만 사업하고 이제 올해 종료 예정되어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래서 이게 윤석열 정부 때 했던 중앙부처 청년인턴제도를 보면 사업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청년인턴들이 하고 있는 일도 굉장히 잡무에 가까운 일들만, 행정 보조 업무만, 이런 것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참여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되는지 아니면 만족도가 있는지 이런 것 성과 점검도 사실 안 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 보면 오히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같이 효과가 있었던 사업을 다시 잘 검토해서 실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특히 지역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됐었습니다,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지역이음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조금 사업을 업그레이드, 개선을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좋으신 생각이고요. 지역, 특히 소멸 위기가 있는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그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는 정책이 가장 필요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송기현 위원 우리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국방부장관입니다.

○송기현 위원 공항소음법을 보면 민간공항 주변의 주민들에게는 방음시설·냉방비 등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고 주민지원사업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복지·문화·체육 시설 등까지도 같이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민군겸용공항에 대해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군소음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냥 보상만, 소음에 대한 보상만 규정돼 있고 이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것은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월정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실제로 보면 이 겸용공항 중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공항이 꽤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대구라든지 이런 공항은 이용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러니까 먼저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 입고 계시는 주민께 국방부장관으로서 참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민군복합공항이 대부분 군이 사용하는 공항인데 이제 민이 같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차원에서 민군겸용공항은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서 군소음법상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 민항하고 달리. 그런 점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공공재, 공공성으로 인해서 상당히 수인 한도가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많은 이해와 양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송기현 위원 그래서 민간공항 같은 경우는 딱 개인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단 말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혜택을.

그런데 군공항 같은 경우는 소음 측정을 해서 그 소음 피해가 인정되는 한도에 있는 사람만 해 가지고 현금 보상만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현금 보상할 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에 해당이 안 되는 주민들한테는 아무런 지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점 때문에 민간공항하고 차이가 있고, 사실 민간공항 같은 경우는 항공사에서 거기서 지원하는,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상이 많은 겁니다.

○송기현 위원 민군 합동으로 하는, 겸용으로 하는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국가예산으로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런 지원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방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공항과 같은 정도의, 똑같은 수준으로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어느 정도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그 주민들한테도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공항하고 군공항하고 소음 측정하는 단위가 다르

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거 다르니까 공항별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군공항이 데시벨이 상당히 높고, 우리가 데시벨이라고도 하고……

○송기현 위원 뭐 웨클……

○국방부장관 안규백 웨클이라 하고 구분부터가 다릅니다.

○송기현 위원 Lden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Lden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일단 군공항의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차등이 약간 있는 것입니다.

○송기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항 소음에 대해서 일관된 어떤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고 대책도 마찬가지로 세우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토부에 관련된 건데, 민간공항은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고 또 군공항은 국방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국토부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음 측정하거나 소음에 대한 대응을 하는 기준이나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소음, 군공항 소음에 대해서 금액 보상을 할 때 소음 평가를 하는데 실제로 그 해당되는 주민들이 소음 측정한 결과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는 또 왜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면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잘 알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법무부장관님, 윤석열 정권 동안에 형사보상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형사보상금은, 그러니까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를 선고받았을 경우에 구속되었을 때 구속에 대한 보상 또는 여러 가지 소송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게 형사보상금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동안에 형사보상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면 그동안 검찰이 기소를 굉장히 남용했다,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가 된다는 거잖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것보다는 최근에 과거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국가폭력이라든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사건들의 재심 사건이 판결이 확정된 게 많습니다. 그런 금액들이 대개 한 칠팔십 % 정도 됩니다.

○송기현 위원 그런 것도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애초에 최초 예산이 400억이었는데 타 사업에

서 전용해 가지고 372억을 더 썼습니다. 그 372억 중에는 마약수사와 관련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마약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제로는 그 예산을 가지고 마약수사에 들어간 게 아니고 형사보상금으로 전용하는 데 많이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얘기했던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호에 그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약수사에 대해서 철저하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세워서 다른 데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마약에 대한 위험이 큰 만큼 마약수사에 필요한 예산으로 책정이 됐으면 철저히 그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향후 예산편성을 좀 더 엄밀하게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서울 서초갑,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 저까지 질의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선 정성호 법무부장관님께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 좀 빼고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을 여쭙보겠습니다.

장관님께서서는 검찰에 장악되어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렇지 않으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조은희 위원** 장관님이 추진하시는 검찰개혁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준이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 또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기 위해서 과거의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반성을 하자는……

○**조은희 위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PPT 참고해 주시고요.

검찰개혁 오적 또 5대 로펌이 이재명 대통령과 장관님을 속이는 게 아닌가……

속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조은희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검찰개혁 오적이 보면 민정수석, 법무부차관 또 법무부 검찰국장, 과장 이렇게 돼 있는 데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보통 을사오적이라고 할 때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오적이라고 그러는데, 검찰개혁 오적은 검찰개혁을 팔아먹은 오적 이렇게 지칭한 것 같은데 이분들이 실제로 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분들에게 포위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이고 그리고 이분들도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라든가 대통령이 추구하는 검찰개혁의 과제에 대해서 확고한 사명감을 갖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 틀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임은정 동부지검장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지금 공개적으로 따끔한 한마디 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제 소속의 부하인 검사장이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제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이분이 국회의원들이 주관한 행사에 초청되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의 주관적 확신 또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들에 대한 약간 오해가 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오해로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징계나, 지금 공개적으로 따끔한 말씀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없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지 않는다고요.

○**조은희 위원**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국민들이 볼 때는요 굉장히 불쌍사납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검찰개혁을 ‘합리적으로 토론해서 공감대를 얻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당 대표는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직 동부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이나 민정수석을 두고 이렇게 막말을 했던 말이지요. 그리고 오적이라는 말도 쓰고 심지어 ‘대통령이 이런 분한테 둘러싸여서 속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면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 검찰은 검찰 내로, 여권은 대통령과 또 장관님 그리고 당이 굉장히 권력 투쟁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하여튼 정부 또 대통령실 또 당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건설적인 토론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내용을 갖고 저희가 토론을 해야지 내용보다는 사람에 대한 공격은 바람직하지 않겠지요.

○**조은희 위원** 징계를 하십시오. 국민들이 징계를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검사장이고 또 최종적인 임명은 대통령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

러 문제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건의하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하여튼간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 보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행안부장관님 행안위에서, 산회됐던데 안 와 계셔서 제가 좀 서운한데요. 차관님 계신데, 지난 주말에 총리님과 법무부장관님, 행안부장관님이 중수청을 어디다 둘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셨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중수청이 법무부에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둘 건지 또 행안부 산하기관으로 둘 건지 이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검찰이 수사를 안 하게 됐을 때 검찰 고유의 역할인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보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조은희 위원 행안부는요, 제가 행안위에 오래 있었는데 국수본도 있고…… 또 지금 최근에 2024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이관돼서 대공수사권까지 행안부 소관이 됐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조은희 위원 그런데 이관 이전의 3년간은 국정원과 경찰이 합동 수사로 총 17명의 간첩을 잡았는데 이관 이후로는 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기관에 무조건 몰빵한다고 좋은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차관님, 이 부분에 있어서 대공수사 업무를 국정원으로 다시 이관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렇게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제가 수사와 관련된 것은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이 그냥 나가셔서…… 제가 행안위 생중계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아쉬워한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십시오. 계시면 답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조은희 위원 외교부장관님께 여쭙기 전에 잠깐만, 수석님 나와 계십니까?

하정우 수석님이세요?

○대통령비서실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하정우 예, AI미래기획수석입니다.

○조은희 위원 지난 25일에 제가 공직자 병역 공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당시 우상호 수석께서 친절하게도 제가 착각한 것 같다고 알려 주셨는데요. 알려 주신 건 감사하다고 전해 주시고.

제가 실제 검색해 보려고 봤더니 대통령실 직원들의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수석님이나 우상호 수석님이나 비서실장님같이 유명하신 분은 검색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실의 비서관과 행정관의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언론사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된 걸 제가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그걸 찾아서 우리 보좌진과 5시간에 걸쳐 일일이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입력 안 하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렇게 검색해도 12명은 여전히 조회 결과 없음으로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12명이 보면 비서관 7명, 선임행정관 3명, 4급 이상 행정관 4명, 이런 분들은 조회 결과가 없어요. 이분들은 뭐 약점이 있어서 안 하는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시미래기획수석비서관 하정우** 이 부분은 제가 담당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문의 주신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또 PPT 보시면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 대통령실 직원 명단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된다고 해서 발의한 것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성역이 아니잖아요. 언론 공개 청구하면 이름이 나오는데 언제 발령을 받았는지 담당 업무는 어떤 건지 왜 이런 건 까막눈이고 또 병역도 일일이 이름을 쳐 봐야 되는 건지.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도 생중계하는 마당에 이렇게 불투명 정부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시미래기획수석비서관 하정우** 말씀 주신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주셨던 질문 중에 파견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입된 케이스들만 나오고요.

○**조은희 위원** 그건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시미래기획수석비서관 하정우** 예.

○**조은희 위원** 지금 조현 외교부장관님께, 시간이 좀 부족한데요. 미국 보안 전문 잡지 프랙 보고서에 의하면 외교부가 북한에 의해서 해킹당했다고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항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알고 계세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은희 위원** 제 생각에는 사실이 아니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반드시 항의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외교부는……

○**외교부장관 조현** 항의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의원실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알려 주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만찬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저녁 8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회의중지)

(20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들 많으십니다.

먼저 기재부차관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년도 예산안 발표되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안도걸 위원 내년도 예산안을 한마디로 어떻게 특징지을 수 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매 연도 저희가 예산 발표할 때마다 캐치프레이즈를 정하는데요. 2026년도 예산안의 캐치프레이즈는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입니다.

○안도걸 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예산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고, 그동안에 전 정부에서 재정정책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았어요. 성장을 잠식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날개를 붙여 주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재정지출 증가율을 가지고 높다 낮다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안도걸 위원 2차 추정 대비 증가율이 어떻게 되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2차 추정 대비로는 3.5%입니다.

○안도걸 위원 맞습니다. 절대 금액으로 한 25조 정도 되지요? 25조를 늘려서 지금 경제성장을 어느 정도까지 올릴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는 내년도 경제성장을 1.8%로 보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한 0.3%p, 25조가 이 정도 올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늘려서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달성하겠다고 하는 성장률이 1.8, 잠재성장률에 겨우 도달하는 이런 수준이거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턱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성장률이 2% 미만이라는 것도 이걸 정말 우리가 지금 아찔한 상황이에요. 우리 성장률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겨우 1.8%에 머무는 거거든요.

이 정도 예산편성을 가지고 이걸 재정 폭주다, 포퓰리즘적 재정 폭주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 현실, 단기적인 현실 그리고 여러 가지 잠재적인 문제점을 도외시하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도걸 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저성장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 정부는 방치하자. 저성장은 저성장 방치 정책으로의 회귀다, 포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긴장감을 바짝 갖고 지금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경제는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성장의 고삐를 완전히 놓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저성장의 침체를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유념하시고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안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지방재정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 정부 때 국가재정도 완전히 엉망이 됐습니다마는 지방재정 역시 굉장히 상태가 악화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장관님께서 지방 공간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좀 많이 놀라셨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특히 세수결손을 지방재정에 떠넘긴 잘못된 정책을 폈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현실이 매우 악화가 돼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가지 정도로 특징을 잡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세수가 너무 악화됐다, 재정자립도도 많이 하락했다, 그리고 지자체 간에 재정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운용이 완전히 훼손이 됐다. 그리고 국고 보조금이 늘면서 중앙에 대한 의존도가 늘지 않았느냐, 이것도 저는 문제로 보입니다.

하나씩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기반이 약화가 됐지요. 작년도 지방세 수입이 3년 전 수준으로 퇴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규모가 좀 줄어 버린 셈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재정자립도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20년 대비 24년에 2%p 줄었습니다. 지방 재정자립도는 3%p가 줄었고요.

장관님, 이렇게 지방세수 기반이 악화된 요인은 뭐로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우선 그동안 국세 중에 지방세로 지원하는, 그러니까 지방세의 비율이 굉장히 낮아져서 25%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 대 3, 나아가서는 6 대 4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방교부세율도 19.24%에서 오랫동안 고정돼 있어서 이 부분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도걸 위원** 워낙 장관님께서 국가재정에도 해박하시고 해서 제가 묻지 않는데도 지금 다 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지방세수가 여러 가지 이유로 크게 악화가 됐고요. 지자체 간 재정 격차 확대도 굉장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보니까 가장 높은 데가 서울이고 가장 낮은 광역지자체가 전남이거든요. 이 두 지역 간의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지금 25년에 이게 50%p까지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부세도 말씀하신 대로 줄다 보니까 교부세까지 합친 재정자립도 역시 두 지자체 간의 격차를 보니까 이게 10%p까지 지금 늘어나 버린 이런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지방 간의 격차가 늘어난 이유에 있어서는 지방세 구조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방세의 한 40% 가까이를 재산과세가 차지하는데 결국에는 수도권과, 특히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시장의 격차, 거기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 어떤 재산과세 격차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려면 재산세 위주의 이

런 지방세수 구조를 소비세를 늘리는 쪽으로 구조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도걸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대규모 결손이 발생을 했지요. 23년, 24년 87조 그리고 금년에 2차 추정 하면서 10.3조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국세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삭감액이 지난 정부에서 17.2조이지요. 거기서 당해 연도에 삭감한 게 10.4조, 나머지가 7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시차를 두고 이렇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방교부세는 당해 연도뿐만 아니라 상당히 중기적으로 지방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그런 파장을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특히나 지방자립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타격이 좀 심하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래서 지방교부세의 배분에 있어서도 재정자립도와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지원해 줍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고보조금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사업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전면 이양이 어렵다면 보조금을 주는, 그러니까 형태도 개별 사업에 대한 보조금보다는 포괄적인 보조금으로 늘려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도걸 위원 예, 맞습니다.

장관님께서 대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방재정의 운용에 있어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4대 개혁 방안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수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국가와 지방 간의 기능 분담과 연계해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자주도 제고를 위해서 지방교부세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도 5극 3특의 균형성장전략과 매칭을 해 가야 한다고 생각되고.

또 지방교부세 예측성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세수결손이 생겨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그래서 지방재정의 예측성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일들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세수결손이 생기면 행정부가 아니고 국회에 와서 추정 편성을 통해서 세출을 조정토록 하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세입 조정을, 세입 경정을……

○안도걸 위원 예, 세입 조정도 하고 관련된 세출도 조정하도록 하는 이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소신은 어떠신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 소신과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안도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도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별보조금 문제 가지고 포괄보조금 형태로 전환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내년 예산에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내년 예산에서는 지금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한 10조 원 이상 넘길 생각입니다. 포괄보조금으로요.

○안도걸 위원 예, 그러니까 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이 지금 한 4조 정도 되는데 배 이상, 한 10.6조 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현재 3.8조—3조 8000억—이것을 10조 정도로 늘릴 계획입니다.

○안도걸 위원 예, 맞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튼 장관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이는 데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남 통영·고성의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위원 정점식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지난 8월 25일·26일 종합정책질의 때 장관님께서 소위 수사·기소의 분리
에 관한 장관님의 소신을 말씀하셨다가 안팎으로 굉장히 많은 공격을 당하셔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저의 소신이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우려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있고 법무부 안팎의 여러 가지 우려들을
전달한 거였지요.

(한병도 위원장, 이소영 간사와 사회교대)

○정점식 위원 그 이후에 민형배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장관님을 향해서 ‘너무 나갔다’
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검찰개혁 쟁점은 국민 앞
에서 합리적으로 토론하자. 필요하다면 내가 직접 주재하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리고 현직 검사장이 국회 특정 정당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나와서 장
관님을 겨냥해서 ‘장관의 개혁안은 검사장 늘리기 수준이다. 장관이 검찰에 장악되었다’
라는 표현까지 쏟아 냈습니다.

장관님, 특정 정당과 시민단체가 주최한 정치토론회에 현직 검사장이 토론자로 나와
장관님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게 과연 적절합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뭐 어떤 특정 정당보다도 여야 의원들이 같이 주최하고 또 시민
단체도 참여를 했는데요. 어쨌든 국회의원님들이 주도한 행사니까 왔던 것 같습니다.

○정점식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임은정 검사장은 페이스북에서 ‘국회에서 열리는 긴급 공청회에 토론자로 부름을 받았다. 업무로 방송은 물론 페이스북도 잘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라는 공무원은 국회가 부르면 가야 하니 부름에 응하여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토론회가 조국혁신당과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것은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민주당 의원님도 한 분 같이, 공동 주최자였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런데 ‘국회가 부르면 간다’, 국회의원들이 주최하는 토론회가 국회가 주최하는 토론회와는 다른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지요. 국회가 주최하는 것과 국회의원님들이 주최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요.

○**정점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국회의원이 주최를 하는 토론회에 검찰 관계자나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속 기관을 통해서 참석자를 결정해 달라고 기관에 통보를 하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런데 이번 토론회는 어땠습니까? 경위는 보고받으셨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보고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면 이 토론회에 나가면서 임은정 검사장은 법무부에 아무런 사전 보고도 없이 나갔다는 거네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절차를 밟으려고 했다고 하면 대검에나 서울고검에다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걸 아직까지 파악을 안 하셨나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정점식 위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임은정 검사장에 대한 징계 등을 거론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직 징계까지, 그런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점식 위원** 임은정 검사장의 이런 발언 이후에 검찰에서, 특히 공보숙 고검 검사, 전 중앙지검 2차장이 ‘임은정 검사는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했다. 정신 차려라’라고 내부에서도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보도는 보셨나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내용도 읽어 봤습니다.

○**정점식 위원** 공보숙 차장의 언급은 이렇습니다. ‘검사 생활 20년 동안 보완수사 안 해 봤느냐? 정치인들이 정략적인 판단을 우선하는 것은 익히 아는 바이고 형사 절차를 접하지 못한 일반 시민들은 보완수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보숙 차장은 평생 형사부 검사 일만 했는데 자기는 검사 생활 대부분을 보완수사를 하면서 지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적시했는데 소위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도 검찰 내부에서 제기되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도 장관님께서 많은 참고를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리고 장관님,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알고 계신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정점식 위원** 박찬운 교수께서 이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한국일보 ‘검찰개혁, 관건은 설계다’라는 기획기사에서 ‘현재 검찰개혁안은 범죄자만 살판나는 세상이 될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읽어 보셨나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박찬운 교수님의 경우에는 장관님도 잘 아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고 그리고 작년에는 나라의 위기를 걱정하는 한양대 교수 일동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또 민변의 창립 멤버이셨고요. 개인적으로는 잘 알고 인품이나 실력이 훌륭한 분이십니다.

○**정점식 위원** 이런 분조차도 ‘누구보다 오랜 기간 검찰과 경찰 개혁을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바쳤는데 여당에서 나오는 방안에는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대표적인 우려로는 복잡한 수사 구조,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의 사건 지휘 및 보완수사 폐지, 비효율적인 경찰 수사 통제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만든 수사 구조가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박하게 평가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대로 가게 되면 경찰 수사권 남용의 가능성은 커지고 사건 처리는 더 늦어질 것이며 실제적 진실 발견도 한층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박찬운 교수께서도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고서 권한을 오남용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요. 수사·기소가 분리되어야 되는데, 1차 수사기관의 수사가 공소 유지를 제대로 해 가지고 유죄판결을 받을 정도로 완벽하다는 보장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수사의 미진한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보완이 돼야 된다는 점들을 늘 강조하셨고. 그리고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지 사법적 통제 또 민주적 통제 등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 교수께서는 ‘연간 200만 건 이상의 형사사건 중 99%가 일반 민생사건이다. 검찰의 수사지휘나 보완수사가 사라지면서 지난 삼사 년간 수사 지연 문제가 심각해졌고 실제적 진실 발견에도 문제가 생겼다’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덧붙이시기를 ‘더불어민주당이 구상 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범죄인만 살판나는 세상을 만들면 안 되지’라고 지적을 하셨고.

제가 지난 질의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분도 국가수사위원회의 설치·구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경찰 수사 후 제기되는 이의신청만 전국에서 연 4만 건인데 소규모 위원회가 방대한 사건 기록을 확인해서 부실수사 여부를 가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보완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강조를 하신 게 결국은 ‘검찰권의 무분별한 남용은 막아야 하지만 국가의 범죄 억제 기능도 손상되면 절대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1차 수사는

경찰이, 2차 수사는 검찰이 담당하는 것으로 조정하면 검찰은 애초 수사 개시를 할 수가 없어서 직접 수사를 둘러싼 분쟁은 막을 수 있다'고 지적을 하셨고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지금 현재의 검찰수사 역량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적용 하되 전건 송치 원칙은 확립해야 되고', 그러니까 경찰이 불송치 종결하는 제도는 없애야 되고 그리고 시정요구권 확대, 보완수사권 확립, 수사 과정에서의 검경 협조의무 구체화 등을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을 소위 인권변호사로 살아오신 박 교수님 같은 분조차도 민주당의 소위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원칙, 수사·기소의 분리라기 보다는 수사를 개시한 자가 종결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결을 해 갖고 기소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불기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종결해 갖고 불기소 권한도 경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불송치 권한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칙하에서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일부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게 됐을 때 보완수사를 토대로 해 갖고 또 검찰이 무한대로 수사를 하지 않겠냐는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안팎의 문제 제기에 대해 관련해 갖고 국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열린 자세로 이렇게 논의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점식 위원** 장관님께 지난번에 당부드렸지만 결국은 가장 중심에 되야 될 것은 국민입니다. 국민을 중심에 두고 소위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대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소영** 정점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경기 파주갑의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윤후덕 위원** 경기도 파주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심의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며칠 전에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내일 지나서 모레 국회에 제출을 합니다. 국회에서는 결산을 정기 국회 전까지는 하여야 한다라고 국회에 강제규정으로 해 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미 지나갔습니다.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외교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우리 대통령님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간에 정상회담 첫 만남을 한 거잖아요. 이 첫 만남에서도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상 간의, 상호 간의 신뢰 그리고 또 향후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발전하는 것의 토대를 확실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양 정상이 분명히 의견을 같이하셨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그런데 이번에 잘했다 그리고 많은 칭찬이 있고 그러는데 이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합의문이 없고 공동성명 이런 게 없고 발표문이 없고 그러니까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 분야 분야들이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합의문, 공동발표 이런 것들이 안 나온 거예요?

○**외교부장관 조현** 오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분야에서는 합의문 내용에 한미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미 투자자금의 운용 방식이라든지 또는 구체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는 시일도 촉박했고 또 우리로서는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그 부분에서 이번에 협의를 한 게 안보 분야 그리고 또 관세 분야 그리고 투자 분야 이렇게 여러 분야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또 많이 장관님들이 가셔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합의에 이른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합의 안 된 부분이 결국은 투자 분야에 있었던 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거기서 3500억 달러에 대한 투자펀드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그 세부 내역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한국 측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 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받아들이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요, 그래서 오늘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오전에 장관께서 답변한 게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관세와 투자 이런 분야에서는 숫자가 많이 들어가고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이 있어서 절대 이걸 공동성명에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고 고수했다’. 저는 아침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들으면서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나라고 섬찔했어요, 솔직히, 거기서 협상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5시 반인가,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어느 신문에 이렇게 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투자펀드 3500억 달러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 미국과 우리 사이에 상당한 이견이 있다. MOU를 하더라도 우리가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안으로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 이 얘기가 지도 해요. ‘이 대통령은—이재명 대통령은—정상회담을 못 해도 좋으니까 무리한 건 사인할 수 없다고 했다고 했다’ 이런 얘기를 오늘 다 밝혔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가 미국 측이 3500억 달러의 투자펀드를 만드는 내용에 대해서 무리하게 요구를 해서 정상회담을 깰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국민한테 알려 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외교부장관 조현** 약간 상황을 좀 멋있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경우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합의라는 것은 그것이 조약이건 MOU건 국회에 반드시 가지고 와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 협상단에서 상당히 미국 측에 대해서 받을 수 없는 건 받을 수 없다고 강하게 얘기했

던 것입니다. 또 그런 협상단의 입장을 우리 대통령께서 지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게 무슨 정상회담을 깬 정도로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이제 거의 다 되어서 앞으로 잘 협상을 해 나가면 이 전체 패키지가 곧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국회의원이고 국회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국회에 보고를 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은 실제 이 내용이 뭔지를 장관께서 답변을 해 줘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가나 국민이 상당한 재정 부담을 부담할 때, 지을 때 그때는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가 이것을 비준 동의하는 동의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헌법에 있어요. 헌법 60조에 그런 게 있어요.

그에 해당하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아직 예단키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상무장관한테도 그런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런 헌법체계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국회의 동의, 필요에 따라서는 비준 절차까지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내용이 완전히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로서는 협상 과정에서 최대한 또 죄송합니다만 국회의 평계를 대 가면서도 협상을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끌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후덕 위원** 이제 좀 이해를 하겠네요.

그런데 3500억 달러면 이게 490조 원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2026년, 내년 예산이 728조여서 그거의 67%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어느 정도를 국가 부담, 우리 부담으로 투자를 한다면 이것은 예산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그런 방식이 아닌 타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하실 수 있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맞습니다.

우선 3500억 달러 중에 1500억 달러는 저희들이 분명하게 이어마크를 해서 이것은 한미 간의 조선 협력에 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 놔습니다. 나머지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보다는 한미 간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지금 정말 마지막까지 모색하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합의가 안 되니까 아직도 우리 자동차 등등이 25% 상호관세를 부과당하고 있어요. 이것 빨리 해결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산자부장관이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대통령께서 나서야 되는 거예요?

○**외교부장관 조현** 지금은 산자부장관이 훈령을 받아서 나머지 협상을 마무리 짓고자 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조만간 마무리될 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예, 그렇게 기대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소영** 윤후덕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충북 청주 상당, 더불어민주당의 이강일 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이강일 위원** 세 가지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상당구 국회의원 이강일입니다.

대통령비서실 그다음에 법무부, 보훈부 이렇게 세 꼭지거든요.

비서실장님 대신해서 누가, 지금 홍보수석님이신가요?

○**대통령비서실홍보소통수석비서관 이규연** 예, 그렇습니다.

○**이강일 위원** 잘 듣고 전해 주십시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는 자못 큼니다. 관세협상에 큰 틀의 합의가 있었고 조선, 에너지, 반도체, AI 등 미래산업에 대한 협력도 확대했습니다. 안보를 넘어서 경제·기술 협력으로 동맹을 확장해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을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회담 직전 불필요한 외교적 잡음이 있었습니다. 국내 극우 세력이 허위 정보로 한미 정상을 이간질했습니다. 미국 극우 인사지요. 일부 인사가 발언과 기고문을 통해서 트럼프의 SNS에서 망령이 잠깐 보였습니다. 국내외 극우 네트워크가 한미동맹을 위협했다고 본 위원은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동맹을 파괴하는 또 다른 내란행위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수석님, 이재명 대통령이 반미주의자입니까? 이재명 정부를 반미로, 윤석열 내란 세력을 친미라고 주장하는 세력은 불온한 세력이 아니란 말입니까? 국민들이 만든 정부를 부정하고 정부를 전복시키고 외교 관계를 망치고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소통수석비서관 이규연**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강일 위원** 유튜브, SNS, 일부 언론 등을 통해서 허위·조작 정보가 지금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극우 세력이 이를 통해서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해외 세력과 연계해서 외교 리스크를 만들어 내고 조작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허위정보 유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미국 내 일부 극우 인사들이 한국 정부를 친중·반미로 왜곡해서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언론, 싱크탱크 이런 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까?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고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의 외교적 노력을 선제적으로 기울여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소통수석비서관 이규연** 예, 동의합니다.

○**이강일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파괴하려는 극우 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꼭 물어야 하고 동시에 외교적 대응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의 잘못된 시각을 또한 꼭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서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응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에서도 함께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질의입니다. 보훈부장관님도 경청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친일 청산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민 통합의 출발점이라고 믿습니다. 나라를 팔아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조국을 위해서 피를 흘렸는지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또한 우리 후손들의 가슴으로 세대, 세대에 전승하는 것이 친일 청산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 번의 친일 청산 기회가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48년입니다, 반민특위. 그런데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의 방해로 좌절됐습니다.

두 번째, 2005년입니다, 노무현 정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불과 4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친일파 168명,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4.6배인 1300만 평방미터를 찾아내서 2000억 원 환수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 지금까지 15년이 흘렀는데 국가가 새롭게 적발한 친일 재산은 단 1건도 없습니다. 겨우 광복회가 5건이고요, 제 지역인 청주시가 1건, 서대문구청에 1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 청주시상당구에서도 시민 제보로 20필지의 친일 재산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친일 후손들이 위장 매매, 증여, 상속, 명의 이전 등 재산을 세탁하고 있어서 친일파 재산을 찾아내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관님,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8월 13일 친일 재산 환수를 지시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그렇다면 그 지시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통령이 말씀하신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친일반민족행위를 해 갖고 취득한 그 재산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환수에 나서 갖고 또 민족정기를 되살리는 데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강일 위원**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도 검토가 가능하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관련 법안들이 지금 2건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이강일 위원** 본 의원과 이인영 의원의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강일 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적극 좀 추진해 주고 저희 법무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12월 26일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2005년 특별법은 세 가지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장관님 잘 들어 주십시오.

기간이 4년으로 너무 짧았습니다. 두 번째, 조사 범위가 너무 협소했습니다. 세 번째는 요 국가기관의 협력체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법안에, 새로운 법안에는 제도적 보완을 했습니다.

첫째, 조사위원회의 상설화 및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거고요. 둘째, 친일재산의 교묘한 은폐·세탁에 대한 대응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셋째,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민포상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친일 청산을 위한 조사위원회 부활과 함께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친일재산 환수가 현실화될 것입니다. 친일재산 환수는 환수 과정 자체가 친일 청산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역사교육입니다. 조국을 팔아 얻은 부로 친일 후손이 대대로 영화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을 국가가 단죄하지 않으면 반역의 역사는 꼭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으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공감합니다.

○**이강일 위원** 감사합니다.

보훈부장관님, 들으셨지요? 보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 같이 보조 맞춰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장관님에도 질의가 있습니다.

2024년 작년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된 인물들의 친일 기록이 현충원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사실을 찾아내서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현충원에서는 김백일, 김홍준, 이웅준, 신태영, 신용균, 이종찬, 백낙준 등 7인의 친일 기록이 복원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대전현충원의 백선엽 씨의 친일 기록은 왜 복원되지 않지요? 보훈부에 문의를 했더니 안장자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어 복원이 불가하다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유족들의 이의가 심하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모든 친일파 후손들이 이의 제기를 할 텐데 그때마다 다 지워 줄 겁니까? 과는 과대로, 공은 공대로 기록해서 그 평가는 그걸 읽는 후손들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우선 그 답변을 장관이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국립묘지법에 의해서 공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기재하는 문제는 국립묘지법 절차에 따라서 심도 있게 다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예, 그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반드시 시정돼야 됩니다.

백선엽, 간도특설대 장교로 복무하며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학살한 인물입니다. 그는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국가공인 친일파입니다.

장관님, 대전현충원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백선엽의 친일 기록 즉시 복원하셔야 합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절차에 따라서 심도 있게 심의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독립운동의 희생을 기억하고 친일 매국의 죄를 역사에 기록하는 것, 국

가보훈부의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소영 이강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조배숙 위원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입니다.

제가 저 자리에서 보니까 여기 계신 우리 장관님, 차관님들이 좀 피곤한 기색이 역력히 보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법무부장관님 그리고 또 법원행정처 처장님 오셨는데 두 분 상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관님, 지금 민주당이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니까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일부 의원님들이 또 그런 주장들을 하고 계십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 박찬대 의원 외 115명의 의원이 내란 사건 전담 1·2심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법안이 좀 긴데요—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골자로 하는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을 좀 검토해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검토해 보지는 못했고요,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법안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과 또 하나 있습니다. 법안이 좀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은데 대표적인 것 제가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특별재판부 구성입니다, 특별재판부 구성. 보면 국회, 법원, 대한변협 추천으로 구성된 9명의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특별재판부법관과 특별영장전담법관을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 주도로 하게 돼 있어요. 국민의힘은 이 구성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가 구성이 되는데 이것 보면 사실상 정치권이 개입하는 정치 판사 임명입니다. 그리고 정치 재판을 할 우려가 큼니다. 그리고 또 신분과 자격 요건을 한정하지 아니해서 문언상 현직 법관이 아닌 사람 중에도 임명할 수 있는지 좀 불분명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피고인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추가로 또 민변의 손익찬 변호사라는 분은 재판의 공정성을 이유로 비 판사 출신이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민주당에 불리한 판결은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특검, 나아가서는 재판부 구성까지 자신들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는 명백한 사법 겁박 행위고 헌법상 삼권 분립 그리고 또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훼손한 겁니다.

어떤 칼럼리스트, 에릭 두르네이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특별재판부는 정치적 반대자 숙청을 위한 기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의 스탈린이나 모택동, 김일성이 정적을 제

거할 때 그랬습니다.

다음 PPT 띄워 주세요.

이춘석 전 법제사법위원장이 직접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특별재판부 설치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정청래 당대표나 박찬대 전 원내대표 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에 불리한 결정을 하면 그리고 또 재판을 하면 모두 불공정하고 불의하고 타도 대상입니까? 민주당만 정의를 독점합니까? 민주당의 생각만 옳습니까? 민주당의 생각이 모든 정의의 기준입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렇지요. 사법부는 사법부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법적 논리에 의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 보여 주세요.

2018년도에도 똑같은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행정처조차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산됐습니다.

처장님, 우리 의원실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위헌 여지가 있다 이런 검토의견서 제출하셨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제가 오후에 같은 취지로 답변한 바도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조배숙 위원** 지금 이 의견을 그대로 유지를 하실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민주당의 모 의원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별재판부 추진과 관련해서 지귀연 판사를 거명하면서 지 판사를 징계하면 내란특별재판부 만드는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 이랬습니다. 결국 지금 대법원에 재판부 바꾸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지시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법원에 대한 인사 개입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이 지시에 따르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그 말씀의 취지를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말씀 자체가 이처럼 특별재판부를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법안은 그런데요, 모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귀연 판사나 민주당에 불리한 판결을 한 그 판사들 인사 조치하고 전보 조치하면 이것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그거는 바꾸라는 얘기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이 법안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또 특정 법원에서 특정 판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이와 같이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것이 사법 독립, 특히 법원 독립이나 재판 독립의 취지에 반한다는 그런 점 때문입니다.

○**조배숙 위원** 보십시오. 지난 5월 1일 날 이재명 대선후보 당시에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어요. 그리고 또 5월 15일 날 서울

고등법원에서 심문기일이 지정이 됐어요.

당시에 우리는 정말 사법부가 살아 있구나 기대를 했어요. 그래도 역시 사법부, 법원이 최후의 보루다 그랬는데 나중에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하겠다고, 특검 하겠다, 청문회 하겠다, 공직선거법 구성요건 법 개정하겠다고, 법을 개정해서 공판절차 중지하겠다고, 대법관 증원하겠다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하겠다고 하면서 온갖 수단을 다해서 압박하겠다고 겁박을 하니깐 법원이 굴복했어요. 법원이 불기도 전에 누웠다고 합니다. 이게 사법부 수치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보니까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것을 선제적 복종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전제주의와 독재의 문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서 복종하는 것을 보고 독재자들은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만은 법원에서 아주 강력한 목소리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살아 있다는 걸 좀 보여 주세요.

그리고 또 장관님!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조배숙 위원** 오늘 또 민주당이, 특검이 난데없이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내란 가담 여부 문제가 있다, 이것 조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 하고 있어요. 너무 뜬금없는데요. 저는 이 주장이야말로 특검의 진의를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본심이 드러난 거지요. 특검의 수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슈를 끌고 가 가지고 선거에 활용하려는 정치적인 특검이다.

장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래도 되겠습니까, 특검이?

○**법무부장관 정성호** 국회의원들의 어떤 주장들이고요. 현재 세 분의 특별검사가 정식으로 독립적인 입장에서 또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요 이게 참…… 언론의 힘, 방송의 힘은 아시지요. 사건에 문제가 없어도 언론에 거명이 되면 일반인들한테 뇌리에 강력하게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이것은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의 칼날을 가지고 정말 모든 것을 휘두르고 그리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몰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현직 검사장인 임은정의 발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검사장인 경우에…… 현직 검사지요. 현직 검사는 저는 발언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장관님이 자기 상사 아닙니까. 그런데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것은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본인이 옷을 벗고 정치인이 돼서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검사예요.

장관님, 이것 징계하셔야 되지 않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반기라기보다도 어떻든 본인의 주관적 의견들을 부적절하게 표현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부적절한 게 지금 도가 넘었지요.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 넘었다고 직권면직시켜야 된다 이렇게 난리인데 임은정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게 이진숙 위원장과는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 검찰개혁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 것 같은데 저희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점들 유념하고서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제가 장관님의 평소의 인격과 품격은 존경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력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2의 임은정이 또 나올 겁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소영** 조배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경기 평택을의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이병진 위원** 저는 보훈부장관님, 국방부장관님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세 분에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보훈부장관님, 국회의원 하셨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이병진 위원** 예결위원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했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때하고 뭐가 다른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훨씬 더 진지한 것 같아요.

○**이병진 위원** 그렇습니다. 많은 공부들을 하십니다.

우리나라 국가유공자가 몇 분 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현재 65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65만이요.

결국은 유공자들이 0으로 수렴되지 않겠어요, 언젠가는?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이병진 위원** 지금은 배우자, 자녀까지 보통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연금은 배우자, 자녀까지 승계가 됩니다. 그런데 수당은 현재 승계가 되지 않아서 우리 보훈부의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재정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 하면 대부분 우리 유공자 가족들은, 후손들은 자유민주체제를 옹호하고 친정부적 성향이 있을 것이고 그런 층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명예롭게 그리고 명예증서로도 자손만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천에 옮기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무공수훈자 가족이신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병진 위원** 우리 이재명 정부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과 예우로 보답하겠다는 이런 기초를 유지하고 있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걸 제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방부장관님, 바로 오셨습니다. 다행입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국방부장관입니다.

○**이병진 위원** 문민 초대 장관으로 취임하신 만큼 더 강한 군대……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 가서 스마트 강군 육성한다고 하셨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스마트 강군의 함의는 뭐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스마트 강군이라고 하면 AI를 비롯한 국방 R&D,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NCW 체제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체제인데 네트워크 중심전에 부합한 여러 가지 전략무기를 우리가 갖추는 그런 태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래서 두 축, 정예화와 첨단화로 대변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AI라도 요원들은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합계출산율이 0.82로 또 떨어졌고 앞으로 지금 벌써 많은 인원이, 군 병력들이 감소하고 있는 이런 추세인데 특히 부사관과 초급간부의 문제가 적지 않게 있다고 보는데 말이지요. 초급간부의 복무여건 개선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평소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관학교 퇴교자가 177명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학군후보생 탈단자가 422명,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초급간부의 이탈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또.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취임 후에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개혁 방안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보고받았습니다.

이번에 2026년도에 국방예산 지금 역대 8.2% 올랐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이 군 병사의 급여가 인상됨으로써 초급간부의 상대적 박탈감과 또 복무 단축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급간부, 중견간부들에 대한 급여와 복무여건 개선이 가장 큰 강조점, 포인트라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에 따른 국방 R&D 연구개발비가 대폭 늘어났고 3축 체계에 대한 예산이 작년 대비 22.3%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두 가지 양 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저기 추진계획을 보면 경제적 보상 확대, 삶의 질 향상, 자아실현 기회 보장, 자긍심 고취 및 정체성 확립. 병사도 중요하지만 간부들이 탁월한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국 산하를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지킬 수 있는 또 명예도 따라 주는 이런 조치가 뒤따라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지난 8월 3일 최전방 위문 방문을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그런 유의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것을 현장에서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또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님, 이재명 대통령께서 로스쿨 제도가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말씀 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병진 위원** 특정 계층·지역 출신 편중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고 지방 로스쿨은 존재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사 선발·배치 과정에서 출신 대학 편중이라든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 장치 마련하고 있는 게 있나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잘 아시다시피 법관 선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지방의 로스쿨 출신자들이 예를 들면 로클릭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법관 선발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성적을 거두는 그런 학교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관 선발에 있어서 또 성적에만 치중한다는 그런 비판도 불식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시험 범위 같은 것도 사전에 공지를 해서 지나친 시간에 시험에만 몰두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본업에 충실한 사람이 우선 법관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지금 법관 정원이 몇 분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3250명이 조금 안 됩니다.

○**이병진 위원** 앞으로 향후 5년간 증원되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증원 370명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병진 위원** 우리 법관의 장기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84년도 8월에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를 제정했어요. 그래서 85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 그다음에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잘 아시다시피 법관들의 해외연수는 저희들 법관들의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법관들에 어깨를 견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법 선진국 위주로 나가는 경향이 있었고 그렇지만 최근에는 또 저희들의 사법적 위상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들의 사법적인 그런 부분을 전파하기 위해서 조금은 비중이 떨어지는 나라에도 점차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지원자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인기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법관들이 바빠서 연수를 안 가려고 하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잠시 법관이 해외에 나가는 것이 좀 애로점이 있어서 그 기간 중에는 주춤했지만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법관들은 해외에 나가서 1년 정도 공부를 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 때문에 평소에도 우수한 재판을 통해서 성적을, 평정을 잘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견문을 넓히고 세계를 보고 말이지요,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야를 넓히는 일련의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

다. 국내에서의 연수 또한 바람직하지만 더 문을 확대해서 말이지요 법관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비를 완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는데 행정부 공무원들은 말이지요 연수 가는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가려고 하는데 제가 본 데이터를 보니까 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이 제 나름대로 분석이 돼서 그런 질문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해외연수사업 예산이 45%가 미집행이 됐어요. 그렇지요, 저기 보면?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단기연수 위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병진 위원** 예, 단기연수가.

그래서 이런 불용 예산이 나오는 것을 내년에는 좀 막아야 되겠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크게 구조적인 문제하고 또 관행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연말 이전에는 법관들이 재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겨울 휴지기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선발하는 법관들 중에는 그래도 1년 내 격무 재판을 맡았던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연말에 선발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결합이 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또 하나의 관행적인 부분으로는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연말 그리고 해 지나서 이렇게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계획을 세워 왔는데 올해부터는, 올해 8월 달부터는 사실상의 예산 협의가 끝난 다음에 가을부터는 곧바로 내년도 계획을 세우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병진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소영** 이병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 비례의원 서왕진입니다.

기후위기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체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미래세대가 이 기후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또 잘 대응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주 본질적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기후환경교육을 잘하는 것은 탄소중립 시대에 경제 사회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고 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역량을 키우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계획적인 지원 또 지속적인 정책 집행이 중요할 텐데요. 특히 환경부와 교육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교육부장관직무대행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창의융합교육을 지원 중인데 이 사업 안에 학교 환경교육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있습니다.

화면 띄워 주시면 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업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서왕진 위원** 2024년도 교육부 전체 예산이 약 111조 1633억인데 이 중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지원된 학교 환경교육 예산은 11억 7200만 원, 지속가능발전교육 예산 2억 7000만 원 포함해서 14억 4200만 원인데 전체 교육부 예산의 0.001% 정도입니다. 물론 이 예산만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교부금을 통해서 지자체별로 환경교육을 자율적으로 하는 곳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중요한 환경교육 또 기후교육에 대해서 교육부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관심이 정말 있는 거냐 또 환경교육이나 지속가능교육에 적극적 노력할 의사가 있는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직무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저희 교육부에서 환경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부랑 협업하기 시작한 게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매년 조금의 변동이 있지만 시도에서 환경교육을 조례로 정해서 다 하고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왕진 위원** 이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그것만 제한해서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예산 운용에도 그 방식이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 운용기준 보면 국가시책 사업은 국가시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산 사업으로 당해 연도로만 하거나 아니면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사실 환경교육이나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한시적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질문이 또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그래서 저희 시도에, 그러니까 시책교부금은 마중물 같은 그런 역할이고요. 시도에서 그 본 교부금을 가지고 시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서왕진 위원** 혹시 그렇다면 이렇게 일종의 마중물 같은 시책 사업을 통해서 시·도교육청 또 일선학교의 환경교육이나 기후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이 보통교부금 예산으로 좀 늘어나고 확장됐다 이런 어떤 성과를 측정해 보시거나 확인한 게 있으신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일단 시도에서 조례를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모든 시도가 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매년 획기적으로 늘어나기에는 사실 다른 경직성 경비가 시도에도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교사 연수라든지 아니면 정규 교육과정에서 환경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실 있게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간사, 한병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왕진 위원** 환경교육은 또 환경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국가 미래에 필요한 환경 인재를 육성하는 것, 특히 이들을 위한 교원들의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은 교육행정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육청 또 교육부의 책임 있는 노력 또 환경 부와의 어떤 적극적인 협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현장에 있는 많은 환경

교육 전문가들은 이 점에 있어서 교육부가 너무 소극적이다, 보수적이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는데, 직무대행님 이것 관련해서 환경부가 큰 역할이 있지만 교육의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함께 나서서 좀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해결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산을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포함해서 교육부도 좀 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동의합니다.

○**서왕진 위원** 고맙습니다.

관련해서 사업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왕진 위원** 4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을 제로에너지 그다음에 친환경 그리고 디지털 교육과정을 결합해서 여기에 적합한 미래형 학습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노후도가 심하거나 안전등급이 낮은 건물 또는 석면, 유해요인이 있는 건물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 상당히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시설 개선이 된 학교라든지 폐교가 예정된 학교 이런 학교들은 당연히 제외가 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진행 전반적인 현황을 보면, 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차별 계획에 따르면 3년 안에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심의나 사전기획 지연 또 사업에 대한 학부모 반대 등으로 인해서 계획과는 달리 상당히 사업이 저조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요. 그렇지만 교육부는 21년부터 배정된 예산을 대부분 각 교육청에 교부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좀 부족하고 현장의 의견 수렴도 부족한 채로 사업들을 너무 그냥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 또 효율적인 집행을 관리하는 것 이런 게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저희가 그러한 지적 잘 알고 있고요.

최근에 올해 들어서 전체 대상 학교 912교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전체 학교에 대해서 실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 폐교 대상인 학교 이런 학교는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해서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집행 시기를 조정하고 또 저희가 교부하는 횟수도 확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최근에.

○**서왕진 위원** 아주 잘하신 거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의 감사 결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통폐합이 예정돼 있거나 또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진행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예산을 줄이고 오히려 더 필요한 다른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의 그린스마트스쿨이라는 사업 자체가 취지나 목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 공간을 그렇게 전환하는 것이 실질적인 기후대응이나 또 에너지 절

감 효과도 있지만 특히 학교 구성원들, 학생들에게도 아주 좋은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예산집행만 해서 잘 발전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무대행님, 국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나 대응 또 적응 역량을 제고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또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가 주무 부처로서 여기에 대해서 큰 역할도 해야 되고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미래세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수용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은 학교이고 또 학교 교사들이 그 역량들을 높여서 제대로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때 이 문제가 좀 더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부 차원에서 지금처럼 너무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예산 정책이나 또는 사업 실행, 이 수준을 좀 뛰어넘어서 예산을 제대로 투입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 있는 환경 교사라든지 다양한 주체들하고 거버넌스를 잘 형성해서 좀 더 책임 있는 또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직무대행 최은옥** 저희가 교사 연수에 기본적으로 환경과 생태 교육에 관한 것을 넣었고요. 그래서 교사들의 역량을 키워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것을 가장 주안점으로 지금 두어서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더 유념해서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특별히 환경부 또 현장에 있는 환경교육 전문가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업 하시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장관 직무대행 최은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서울 마포갑의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 외교부장관님, 국방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당대표 시절과 지금 대통령이 됐을 때 외교 문제에 대해서 너무 입장이 180도 달라진 것 같아서 약간 혼란스럽고 어이가 없습니다.

일단 일본에 가셨을 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언급하신 게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저는……

○**조정훈 위원** 일본 총리하고 없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조정훈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 지적할 기회가 없으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 후에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조정훈 위원**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기 전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이재명 당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제

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다’ ‘일본의 오염수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부터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주말 장외투쟁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

정부가 되셨잖아요. 일본 갓잖아요. 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십니까? 계산을 잘못된 겁니까, 알아보니까 사실이 아닌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무슨 고해성사 한마디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 정치적으로 이용한 겁니까? 왜 한마디도 안 한 겁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저는……

○조정훈 위원 일본이 뭐 새로운 것을 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저는 그 당시에 정부 밖에 있는 한 명의 학자로서 당시 우리 정부가 과도하게 후쿠시마 오염수를 옹호하고 거기에 예산을 쓰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조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과도하게 옹호한 것을 비판하셨으니까 그리고 외교부장관 되셨고 이재명 당대표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본 총리를 만나서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셨으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 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 이런 얘기라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사례들이 정말 외교 문제 그리고 과학으로 풀어야 될 문제를 정치적 소재로 사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워 낼 수가 없어요.

그건 거기까지 하고, 미국 가서 한미 정상회담 끝난 뒤에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저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장관께서 오늘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들이 있으셨습니다. ‘나쁜 합의서보다 없는 합의서가 더 낫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발언하신 적 있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없는 합의서니까, 지금 합의서가 없지요. 그러면 나쁜 합의를 할 뻔했다 이 소리인데 어떤 부분에서 나쁜 합의를 작성할 뻔하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작성할 뻔한 것이 아니라……

○조정훈 위원 미국이 자꾸 압박을 했다면서요, 합의하자고.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 분야가 뭘니까, 그 내용이?

○외교부장관 조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는 투자 파트가 그러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보도된 것 이상으로 투자를 요구한 겁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언론에서 얘기한 얘기가 사실이 아니다, 미국의 압력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겁다라는 거든지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하고 다른 내용이 있다든지 두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대체 정부가 언제까지 숨길 건지 모르겠어요. 이것 언젠가 다 드러날 겁니다.

첫째, 제가 하나씩 하나씩 따져 볼게요.

관세 15% 일반관세 했지만 자동차하고 철강·알루미늄은 25% 관세 유지하고 있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것 언제 15%로 내려갑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아마……

○조정훈 위원 7월 31일 합의한 이후에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4월 2일 문서 제가 다 읽어 봤습니다. 7월 31일 날 행정명령 다 읽어 봤습니다. 어떤 기한적 내용도 없습니다. 언제 우리 자동차·철강 15% 일반관세 내려갑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것은 이 투자를 포함한 경제 분야의 패키지가 합의가 되면 내리기로……

○조정훈 위원 언제인지 약속 안 하셨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만약에 패키지 딜이 합의 안 되면 15% 내려가는 것도 아닐 수 있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약속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15%라고 거짓말 하세요?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아니, 누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조정훈 위원 15%로 내려갈 것 자동차 일반관세, 철강까지 다 15%로 내려갈 것 자신 하세요?

○외교부장관 조현 아니, 누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조정훈 위원 아니, 그러면 자동차 포함 철강·알루미늄·자동차 관세는 20%로 유지된니까, 아니면 15%로 내려갑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아니,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미국이 부과할 관세가 결정된다는 것은 이미 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요? 희망 고문하시는 건 아니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희망 고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이제는 당분간 25%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외교부장관 조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협상이……

○조정훈 위원 제가 지금 계속 질의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로 미국산 자동차하고 농산물시장 완전 개방,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그걸 다 읽어 보셨을 텐데 지금 읽어 보면, 영어를 잘하시니까 ‘풀 앤드 컴플리트 트레이드 딜(Full and Complete Trade Deal)’을 사인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컴플리틀리 오픈 투 트레이드(completely OPEN TO TRADE)’ 하면서 농산물, ‘애그리컬처 프로덕트(Agriculture product)’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영어로 해석하면 이것은 농산물시장의 완전 개방을 의미할 수도 있

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말씀은 협상하는 과정에서 소고기하고 쌀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 이 말씀이었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트럼프가 잘못 쓴 거네요?

○외교부장관 조현 아니지요. 저희가 여러 가지……

○조정훈 위원 그러면 저것하고 장관님 말씀하고 어떻게 이것을……

○외교부장관 조현 아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것은 농림 분야에서 여러 가지 시장 개방을 위한 조치, 예를 들어서 트러블 데스크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미국 농산물이 지금 체제에서 들어오는 데 문제가 되는 것을 풀어 주겠다 해서 그걸로 그 분야는 합의가 된 것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그 풀어 주는 과정에서 쌀과 소고기는 절대 없을 것이다?

○외교부장관 조현 요구 자체가 없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위 패키지 딜에도 내용은 없다?

○외교부장관 조현 없습니다.

○조정훈 위원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조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기록에 남을 테니까 앞으로 패키지 딜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중의 또 하나가 LNG 등 에너지 제품 1000억 달러, 약 140조 원 수입하는 겁니다. 이걸 맞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가격에 대한 협상도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없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것 얼마에 사 올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지금 알래스카산 LNG는 한국뿐이 아니고 한국, 일본, 여러 LNG를 수입하는 나라들이 투자부터 해 가지고 개발을 해서 수입을 해 오는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말하자면 예측을 해 가지고 1000억 달러 정도로 얘기를 한 것이……

○조정훈 위원 잠정적 합의다 이런 말씀……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몇 마디 말을 좀 심하게 했다면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데 저는, 외교무대에 오래 계셨고 저도 국제 무대에 오래 있었지만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갖고 성공적인 정상회담이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대화를 시작했고 이 협상이 어디로 갈지 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패키지 딜이라고 하시면서 아무 내용도 말씀하지 않는데, 저는 솔직히 7월 30일 합의했다고 발표한 이후에 우리 대통령이 가서 도대체 어떤 조건을 더 좋게 만들었는지 그 내용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비행기 100조 이상 산 것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돈 준 거지요. LNG 1000억 달러 수입하겠다. 이것도 돈을 쓰겠다는 겁니다. 3500달러 투자하겠다. 그중에 5% 미만 출자하고 나머지는 보증하겠지만 결국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대가가 뭘까요? 저는 솔직히 이거는 장관님 탓이 아닌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국제사회에 갖고 있었던 소위 친중·반미에 대한 이미지 개선하는 데 쓴 비용값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았으면 지불하지 않았어도 될 그 비용,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좋은 사진 한 장 찍기 위해서 정말 좋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수백 수천억이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패키지 딜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돈과 매너를 보니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내려올 것 같지 않고 철강과 알루미늄 같은 특정 관세가 더 내려올 것 같지도 않네요.

저는 앞으로 한미 관계를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좀 더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전국에 뿌린 플래카드가 국익 중심의 외교라고 했습니다. 자, 어느 정부가, 어느 과거의 정부가 국익 중심의 외교를 안 한 적이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 정부가 정말 국익 중심 외교를 안 했다고 보십니까, 장관님?

○외교부장관 조현 예.

○조정훈 위원 아, 전 정부는 국익 중심 외교를 안 했다고요?

그러면 매국 중심의 외교 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정권 중심의 외교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위원 정권 중심의 외교를 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조정훈 위원 정권 중심의 외교이기 때문에 국익을 훼손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조정훈 위원 정말로 위험한 생각 하십니다. 장관님은 외부에서 들어왔을지 몰라도 외교부에 있는 99%의 공무원들은 정권을 연장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외교부 장관 외교부 직원 대부분은 정권 중심을 위해서 일하느라고 매국을 한 겁니까? 어떻게 후배들을 그렇게 매도할 수가 있습니까? 다 좋은 뜻으로 국익을 위해서 외교하지요, 국내에서는 싸워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조정훈 위원 제가 이것 보겠습니다, 정말로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 외교를 통해서 도대체 관세를 몇 %나 떨어뜨리는지. 이게 아니면 저는 이재명 정부가 매국 중심 외교를 한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정말 위험한 발언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외교부장관 조현 제가 한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요, 일본이 우리와 똑같이 가서 똑같은 비슷한 패키지를 받고 아직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조정훈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본 정부보다는 잘한 겁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시바 총리가……

○**조정훈 위원** 좀 솔직해지십시오, 장관님.

일본 가서 그동안 민주당이 외쳤던 현안 한마디도 못 했지요, 한미 관계 잘하기 위해서? 미국 가서 좋은 사진 찍느라고 중요한 것, 민감한 것, 북한의 비핵화 합의한 것, 민감한 기회 다 놓쳐 놓고 그거를 성공이라고 부르고 국익 중심 외교로 부르고 전 정부의 외교를 정권 중심 외교라 하겠다고요? 과하십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위원님의 말씀도 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 중원의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 성남 중원구 돌봄정치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외교부장관님, 대통령께서 한일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들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사실 든든했습니다. 어떻게 ‘바이든-날리면’, 갖다 퍼 주는 외교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할 말이 있으면 당당하게 하게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혹시 관세협상 관련해서 미처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지금 정말 열심히 국익을 위해서 관련된 모든 부처가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EU, 일본, 한국……

예를 들어서 인도와 같은 나라에 대해서도 50% 관세를 매겼습니다.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 내적인 원인에 따라서 이러한 다소 무리한 요구를 동맹국들이나 우방국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째서 이재명 정부의 탓입니까? 저는 주어진 여건에서 이재명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만들어 낸 것이 이번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진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가 또 공무원들 모든 분들이 국익과 국격을 세우는 데 최선의 역할을 다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님, 이태원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박홍준 소방관과 남동혁 소방관이 트라우마를 겪다 최근 사망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수진 위원** 참사 후 행안부·복지부·소방청이 현장 대응 인력에 대한 심리 지원에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두 소방관의 희생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면 희생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너무나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소방청 외에 행안부와 보건복지부·국가트라우마센터가 고 박홍준 소방관과 남동혁 소방관을 지원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자료에 의하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25%가 6개월 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현장 대응 인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장관님, 행안부·소방청·보건복지부가 함께 협력해서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부터 지원 인력 확보까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두 분 소방관의 죽음을 보면서 많은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됐습니다.

소방청이 중심이 돼서 소방관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 왔는데요. 외상후증후군에 대해 최대한 많은 상담도 했다고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치료가 필요한 대원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원인도 찾아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치료가 필요한 대원들에 대해서 지금은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잘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님 계신가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이수진 위원 처장님, 고 남동혁 소방관이 지난 2월 참사 트라우마로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는데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불승인했습니다.

고 남동혁 소방관은 2022년 심리상담을 받은 후에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회에 걸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 소견서에는 이태원 출동 이후 급격히 사람에 대한 기피와 실망감, 인생에 대한 회의감 등을 느끼며 생활했다라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의회는 남동혁 소방관의 절실했던 요청을 뿌리쳤습니다.

처장님, 본 위원이 인사혁신처에 남동혁 소방관에 대해 재해보상심의회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런데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것이지 국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 규정한 법률이 아닙니다. 국회의 자료 요구권은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국회증언감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이 이태원 참사 피해를 축소하기 위해 남동혁 소방관의 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장님!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이수진 위원 인사혁신처가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위를 즉시 파악해서서 남동혁 소방관에 대한 재해보상심의회 자료와 함께 의원실에 조속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윤호중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수진 위원 리박스쿨 협력단체가 서울시 청소년 성교육까지 장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넥스트클럽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달 29일 서울시 청소년문화센터 위탁운영에 지원했습니다. 넥스트클럽의 대표 남승제 주가사랑하는교회 목사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와 함께 23년 늘봄학교 정책 지지단체인 함께행복교육봉사단의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시는 이 문제에 대한 기사가 난 후에야 사실을 파악하고서도 리박스쿨과 연관이 있다 하더라도 심사에서 배제할 만큼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장관님, 아동·청소년에게 우익 사상을 주입하고 있는 리박스쿨 문제가 전국적으로 문제인데 서울시의 이런 안일한 태도가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향 아닙니까? 이 넥스트클럽이라는 단체는 23년 대전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이어 세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기관으로 선정됐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종교단체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소수자를 혐오하고 학생인권법에 반대하는 편향적인 단체입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하지 않았더라면 서울시의 청소년성문화센터마저 리박스쿨 관련 단체에 넘겨줄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장관님, 이 문제 심각하게 보시고 지자체 공모사업 전수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최은옥 직무대행님!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이수진 위원** 2023년 7월 10일 김승희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의 초등학생 딸이 2학년 아이를 화장실 변기에 앉혀 놓고 리코더 등으로 머리를 마구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이 폭행이 아이들 사이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개입 사건으로 보입니다. 7월 20일 김건희가 오후 4시 17분에 장상윤 당시 교육부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8분 48초 동안 통화를 했고 김건희와 김 전 비서관은 7월부터 9월까지 모두 열세 차례 통화를 했는데 아홉 번의 통화가 학폭위 직전 한 달 사이에 집중돼 있었고 통화 시간은 약 30분이라고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김승희 전 비서관의 딸이 받은 점수가 15점인데 이 15점은 학급교체 처분입니다. 그런데 강제전학은 16점이더라고요. 딱 1점이 부족한 그런 점수였습니다.

김승희 전 비서관의 딸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김건희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심 들지 않으십니까? 김승희 전 비서관에게 혹시 관련 내용 확인한 적 있으십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이수진 위원** 직무대행님, 김건희라는 선출된 권력도 아닌 자가 전횡을 휘두른 그런 정황이 보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실, 김승희 전 비서관 그리고 교육부 장상윤 전 차관에 대해서 조사와 고발, 후속 조치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알아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이수진 위원** 그리고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서 주차면이 50면 이상인 교육연구시설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이수진 위원 교육연구시설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포함되어 있는데 유치원과 학교에 설치된 충전시설 현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이수진 위원 충전기 약 2000여 개 설치 추정되고 있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이수진 위원 학교 내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외부 차의 출입이 좀 더 많아질 거고 특히 전기차 화재위험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큰 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그렇습니다.

○이수진 위원 최근에 서울, 경기, 제주도에서는 의무설치 대상에 유치원과 학교는 제외하는 조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최근 법제처에서 이 조례 추진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더라고요. 그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맞습니다.

○이수진 위원 저는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친환경자동차법을 개정해서 유치원과 학교시설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안전을 우선 생각해야 되는 교육부 입장에서 이러한 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저희가 조례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하려는 내용을 위원님께서 법으로 상향해서 추진하시려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청장님, 방금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소방공무원 심리상담을 현재 돕고는 있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그런데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 한 4만 8000건이었는데 4년 지난 다음에 7만 9000건 정도여서 3만 1000건 정도가 증가를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증가한 거 아닙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이렇게 아주 급작스럽게 증가한 사유가 뭐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일단은 저희들이 2012년부터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소방청에서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개인 신분이 드러나는 것, 관련 정보가 드러나는 것 이런 데 대해서 좀 우려들이 많았는데 가면 갈수록 정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또 대형재난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참가한, 활동한 소방대원들이 많기 때문에 상담 건수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위원장 한병도 상담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지금 현재 전국에 128명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전국에 소방관서가 268개잖아요.

○소방청장 허석곤 소방관서는 242개소고 소방본부 포함하면 260개소 그리고 소방청 하면 한 268명 정도가 그렇게 배치가 되면……

○위원장 한병도 그러니까 거의 두 곳 중에 한 곳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잖아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그래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소방관들이 되레 현장 트라우마로, 이렇게 우울증으로 자신의 생명을 못 지키고 수시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최근에 반복되고 있으니까, 또 아마 이것도 예산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으니까 기재부2차관님,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각별히 신경 쓰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한병도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의 존경하는 이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 위원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 고장 천안을 국회의원 이재관입니다.

권오을 보훈부장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형석 관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독립기념관의 설립 과정, 취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민 성금과 그 다음에 역사 자료를 모아서 건립했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에 의해서 독립운동의 어떤 상징 공간입니다. 국민들께서 자녀들과 함께, 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독립기념관법 제1조에 보면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독립기념관의 설립 목적이 잘 돼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보존·조사·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족정신을 북돋으며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립기념관장은 이러한 설립 취지를 구현할 책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당연합니다.

○이재관 위원 그런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작년 8월 8일 취임 첫날 취임 일성이 뭔지 아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말씀 좀……

○이재관 위원 친일인명사전에 잘못 기재된 기술로 인해서 억울하게 친일로 매도되는 사람들이 있다, 친일파들의 명예회복을 제일성으로 했습니다.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아주 부적절합니다.

○이재관 위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지금 현재 방치돼 있는 독립 투쟁의 사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귀환하지 못한 독립 투쟁에 몸담았던 열사들의 영혼들이 지금 현재 떠돌고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산적합니다. 그런 일들을 놔두고 지금 현재 친일파 명예회복을 첫 일성으로 내걸었습니다.

장관님, 독립기념관은 보훈부 산하 공공기관 아닙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맞습니다.

○이재관 위원 관리 감독 권한 있지 않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독립기념관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감독할 책임, 장관은 있지 않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맞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간의 김형석 관장의 행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독립기념관은 매년 광복절 경축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8월 8일 취임을 하고 이튿날—8월 9일 날—돌연 그 광복절 행사를 취소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임 관장이었던 한시준 관장께서 이미 그 행사는 기획을 하고 또 예산의 50%를 집행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그 경축 행사에 초청해야 될 명단, 이미 다 초청장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37년 만에 처음으로 그것을 취소를 합니다. 취소한 이유가 정부 행사에 초청이 됐다는 명분입니다.

여태까지 독립기념관장은 정부 행사에 초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 그 한 해만 빼 놓고 독립기념관장은 정부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독립기념관에서의 광복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이 어떤 해냐? 2019년에 바로 광복절 행사를 독립기념관에서 했기 때문에 그 해를 예외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독립기념관장은 정부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광복절 행사를 진행했었지요.

그런데 돌연 작년에 그것을 취소를 하고 광복절 행사에 참여를 안 한 거지요. 독립기념관을 비운 거지요. 나중에 관장 본인이 취소에 관한 이유를 맵니다. 자기는 몰랐다고 합니다. 이거 비겁하기 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행사를 실무자들의 협의에 의해서 누락된 착오였다고 변명을 하는데 과연 그게 납득이 됩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기본적으로 독립기념관장은 취임 때부터 이번 8·15 행사 때까지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언행, 행동은 참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관 위원 또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올 광복절 80주년 경축사에 또 망언이 등장합니다. ‘광복은 연합국 승리로 얻은 선물이다’, 다 기억들 하실 겁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독립유공자 후손, 독립운동단체, 시민단체들은 독립기념관장실 앞에서 사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천안의 세 명의 국회의원들이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은 고령의 독립유공자 후손들께서 피약실에서 시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독립기념관 측에 얘기를 한 것은 이분들한테 ‘평화적인 시위를 할 테니 편의는 봐 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독립기념관장은 현장에 없었습니다.

3일 후 김형석 관장이 직원들에게 안내문을 보냅니다. 바로 저 내용입니다. 내용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합세해서 장기 농성을 벌일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또 ‘지역 국회의원

들이 독립기념관의 존재 가치를 부정한다’.

과연 독립 후손 또 지역 국회의원들이 독립기념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김형석 관장이 부정하는 것입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그날 안 그래도 현장에서 의원님들로부터 전화를 직접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감독기관인 보훈부장관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간 후 조치를 취했지만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독립기념관의 행보가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참 부적절하구나 이렇게 해서……

○이재관 위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립기념관이 김형석 관장 개인의 기념관인지 의심이 드는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로 24년 8월 23일·24일 양일간, 컨벤션홀이 있습니다. 군대 동기들, 거기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용료는 내야 됩니다. 사용료 낸 근거도 없고 사용 현황도 기록이 없습니다. 이거는 직권남용 아니겠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보고를 받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또 올 5월 22일입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유물 원본을 보장하는 수장고가 있습니다. 그 수장고를 출입을 하려고 그러면, 독립기념관 자료수집 및 관리규정에 따르면 담당 직원 외에는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공무상으로 들어갈 때는 사전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담당 직원과 함께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러한 절차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니다. 출입대장에 개인 정보는 없습니다. 출입대장에 출입했다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청서는 없습니다. 이것은 관장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월권에 의해서, 직권남용에 의해서 그 절차가 이루어졌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지금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혹시 지금까지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광복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훈부는, 광복회의 감사 청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감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재관 위원 혹시 경고라도 하신 적이 있을까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했습니다.

○이재관 위원 어떻게 하셨나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독립기념관장에게 서류로 경고 조치를 취했구요.

○이재관 위원 답변이 있었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답변 아직 없습니다.

○이재관 위원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일련의 사안으로 보면 충분하게 해임 요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해임의 절차가 이사회의 해임 건의를 거치는 거라든지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서 하는 그러한 절차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아까 독립기념관의 설립 목적이라든지 그 뜻도 맞지도 않는 것이고 또 여기서 많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뉴라이트의 역사인식에 대한 강변이라든지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잃어 가는 그런 행보들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하 공공기관의 중립성 그리고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북 경산의 존경하는 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연 위원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외교부장관님, 장관님께서는 이재명 정부를 대표하는 분이시고 국무위원이십니다. 국회의원은 현장의 목소리 또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전의 관세 문제도 사실 현장에서는 매우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15%로 이렇게 협상은 마무리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명문화 단계에서 도대체 이게 잘 마무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 민생 현장에 가 보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당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방금 전 그 태도는 과했다, 이런 발언은 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발언들은 좀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유념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장관님, 다음 달에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조지연 위원 저는 이게 경제협력의 세계적인 협력은 물론이고 K-콘텐츠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성이라든지 이런 걸 알리는 기회의 장으로도 매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외교 성과로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국익에는 여야가 따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조지연 위원 총리께서도 경주 현장을 다녀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장관님께서도 다녀와 보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조지연 위원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지금 일부 건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런데 이게 공사 기간이 매우 짧고 하자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급 외교무대인 만큼 어떤 숙박시설이라든지 대회, 회의시설이라든지 이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수적인데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이 시설에 대한, 모든 시설에 대한 정밀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리고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조지연 위원 저는 정부가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경북과 경주에서 올해 초에 4개 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이 돼서야 교부가 결정이 됐고 신청한 250억 가운데 얼마가 지금 교부 결정됐는지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 기억으로는 75억이 교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저는 이것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작년까지 신청이 돼서 교부된 금액이 200억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조지연 위원 그런데 이게 신청한…… 죄송합니다만 신청한 이 내역들을 보면 대부분 정상회의장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다 그날 행사에 필요한 요소, 제반 되는 것들에 대한 특별교부세 신청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정부의 정말 과감한 지원 없이는, 지역에만 맡겨 놓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역에 맡겨 놓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경북도와 경주시와 그 소요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한 후에 조정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리고 좀 더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아마 부담을 느껴서 솔직한 표현을 못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경북과 그리고 경주시와 충분히 협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리고 결국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대가 외교무대인데 모든 문화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교부에서 다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체부에서 물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데 최종 컨트롤타워는 외교부로……

○외교부장관 조현 국무총리가 준비위원장으로 돼 있고요. 실무적인 것은 저희 외교부에서 전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지금 국가무형유산이라든지 경북에 또 지정된 무형문화유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충분히 이 무대에 설 수 있게끔 이 계기에 지역의 어떤 문화유산이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지금 아마 23개 공연이 섭외 중으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많은 공연들이 무대에 설 수 있도록 꼭 좀 배려해 주십시오, 장관님.

○외교부장관 조현 예, 이미 경북도와 경주시와 함께 그런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조지연 위원 현재 다수의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발의된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이 한 스무 건이 넘습니다. 저는 지난해에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새 정부가 들어

왔으니까요.

저는 우리 군경에 의한 희생이라든지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이라든지, 그러니까 가해 주체와 상관없이 그 희생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그 희생의 출발점은 국가가 합당한 보상을 해 주는 것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진화위에서 진실규명의 결정을 받고도 개별 소송을 통해서 사실 배·보상금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당의 서른두 분의 의원님과 뜻을 모아서 최대한 빠르게 자체적으로 보상심의위를 구성하도록 해서 보상이…… 이런 소송을 통해서 사회적 비용을 들일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 안 그래도 아픔이 있는 이분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보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고 지금 소위에서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경에 의한 희생은 2023년도 기준에 소송을 통해서 한 7500억 정도 이렇게 국가배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걸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도 진실규명을 받고도 소송을 해도 사실은 거의 승소 가능성이 없고 보상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낙담하고 소송 절차까지는 잘 안 가세요, 이분들이. 그래서 저는 국무총리 소속의 보상심의위를 설치하고 개별 소송 절차 없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낸 것인데 장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6·25 전쟁 기간 중에 군경에 의해서 민간인 학살을 당해 가지고 아직도 광산 밑에 그 유해가 많이 묻혀 있어 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발굴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곳도 있고 또 무장공비가 내려와 가지고 마을의 108채의 집을 다 태우고 거기 계신 청장년층을 다 죽인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게 한 동네에 같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어떤 희생이 더 값지고 어떤 희생이 덜 값지고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희생됐느냐의 그 꼬리표에 따라서 보상의 기준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조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그 가해의 주체의 문제를 막론하고 국가가 그분의 어떤 정상적인 생활이, 그 가족들이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는 면에 대해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지연 위원 보훈부장관님, 시간이 지금 얼마 없는데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5·18 유공자는 배우자와 유가족이 의료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조지연 위원 그런데 참전유공자 본인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볼 때 본인 부담액 90% 감면받고 있고 배우자와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일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가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과 예우를 해야 된다고 한 그 발언의 취지에는, 여기에 참전유공자는 예외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조지연 위원 이 배우자, 6·25 참전유공자분들이 대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 아흔이 넘고 매우 고령입니다. 그 배우자들도 당연히 비슷한 고령이시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도 저는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저희 보훈부에서는 보훈의료체계의 범위 그다음에 그 지원을 여기에 대해서 더 확대하고 더 높여야 된다, 국가보훈 5개년 계획 안에 그 내용을 넣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지연 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 의원실에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알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행안부장관님 그리고 법무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조금 편하게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올해 지방자치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지방자치제가 30년 동안이나 시행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고 싶은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통해서 장관님의 견해도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전국에 몇 곳이나 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89곳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맞습니다. 전국 시군구 228개 중에서 약 57%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제4조 항목에 특히 관심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조항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조항은 현재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관대립형을 기관통합형 혹은 권한분산형 등 다양한 형태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소규모 농어촌지역에서는 단체장과 의회가 서로 구분돼서 기관대립형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의장이 단체장을 겸임하는 기관통합형으로 전환하고 그래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것도 한번 해 봄 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구가 2만 이하 혹은 3만 이하의 작은 군에서는 매 선거 때마다 지극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관심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 실제로 저 조항이 현실에 적용돼 본 적이 없다는 것도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임미애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특별자치단체에 대해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그 역시도 아직 기관대립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혹시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준비하고 있거나 하는 내용들이 있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재명 정부가 시작된 이후에 국정과제로 기관 다양성을 실현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의 하나로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5극 3특 중에 3특 지역에 대한 특례를 통해서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구상을 하고 있고 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5극 3특을 많이 얘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지방자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군 지역에서의 기관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대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5극 3특이 주는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효과라는 것은 현장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체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군이 인구 2만이 안 되는 군 지역과 인구 100만이 넘는 시가 같은 형태의 기관으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는 법까지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 놓은 상황에서 후속 조치가 아무 것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좀 지적을 한다면 저는 행안부에서 이거는 한번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전면적으로 후속조치들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지방자치법 4조의 2항은 이렇게 다양한 기관 구성 방식을, 형태를 선택할 때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임미애 위원** 그런데요 지역주민들이 저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임미애 위원** 알지를 못한다는 얘기는 행안부의 역할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행안부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알리고 이렇게 새로운 기관 구성의 형태를 우리가 취하겠다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할 때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도입을 해서 새로운 방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은 개정했지만 실효성이 없는 공염불에 불과한 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안부는 반드시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들을 좀 취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임미애 위원 저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이야기를 법무부장관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요.

2025년 7월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273만 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임미애 위원 전체 인구의 5.2%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등록 체류자도 꾸준히 증가했구요. 그래서 22년 3월 기준으로 39만 명 수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등록 체류 자격이 대물림된다는 겁니다.

지난해 7월 달에 출생통보제가 시행되었는데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이 출생신고 대상 을 국민으로만 한정하고 있어서 부모가 미등록 체류자이거나 혹은 출생 직후 체류 자격 을 얻지 못한 외국인 아동은 출생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2년 사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4025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법무부 조사로는 5183명이라고 합니다. 인권위 추산으로는 2만 명에서 2만 5000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확인된 숫자에 불과하고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를 미등록 체류아동으로 저희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실제로 지금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요, 2018년도에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법무부 역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2023~2027년의 계획을 보면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정책 방향을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의 출생 신고를 의무화하고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라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까지 제시했는데 이게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 논의가 국회에서도 이루어졌고 법무부에서도 정책과제로까지 설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동감입니다.

○임미애 위원 혹시 법무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후 추진계획이 있으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일단 미등록 외국인, 그러니까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해 갖고서 체류자격 부여 구제대책이 원래 올해 3월에 종료 예정이었는데 이것을 한 3년 더 연장해 갖고서 일단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임미애 위원 예, 연장했지요? 그 연장하는 조치로만은 안 되고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 제도적으로, 입법적으로 좀 뒷받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시흥, 이게 워낙 급박한 문제다 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 다시 말하면 출입국관리법 제84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출입국관리소에 알려야 한

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공무원이 이것을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실대로 ‘이 사람이 불법체류자입니다’라고 신고를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는 이유로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 법무부에서 조치 취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22대 국회에서 법이 총 4개, 5개가 올라와서 계류 중인데요. 이 법안이 아마 조만간 상임위에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떤 입장이신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지방소멸 또 인구소멸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더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을 취해야 된다 그리고 외국인에게도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게 제도 정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지금 말씀하신 불법체류자분들이 낳은 미등록 아동들의 등록에 관련해서도 적극적 입장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미애 위원** 이재명 정부에서는 좀 다른 정책을, 그리고 이것이 조속한 시간 내에 법제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휴식 정회 없이 계속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회의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잠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갑의 존경하는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위원**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 노종면입니다.

외교부장관님하고 문체부장관님, 법무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현 장관님, 대통령의 해외순방 예산은 한 회당 한 20억 정도씩 편성을 하나 봐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노종면 위원** 올해도 11회 가는 것으로 해서 200억 좀 넘게 편성이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모자라면 예비비를 끌어다 쓰기도 하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노종면 위원**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럴 것이고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노종면 위원**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해외순방과 관련된 예비비 지출…… 정상외교와 관련된 예비비 지출이 500억이 넘고요, 이 가운데 해외순방과 관련된 것은 414억이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보고만 들었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 총액에 대한 내용은 이미 지난해 5월에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졌습니다만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당시 정부는 ‘물가상승, 역대 정부 마 찬가지였다’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를 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덮을 수 있는 것인지 제대로 된 평가 그리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몇 가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집권 첫해인 2022년 해외순방 본예산이 163억 원 책정돼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1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순방에 썼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는 약 130억 원 정도가 남겨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최소 130억 원은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22년에 총 세 번의 해외순방을 가는데 넘겨받은 130억 원 다 썼습니다.

그리고 PPT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이 연출된 해외순방, 2022년 11월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등을 순방한 저 해외순방에 이미 130억 다 쓰고도 모자라서 63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해 갑니다. 그 가운데 54억 원을 실제로 썼습니다. 본예산 130억 가운데 쓰고 남은 것이 일부 있었을 테니까 저 한 번의 해외순방에 60억 원 이상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세 번 정상외교를 해외에서 했고요, 모두 184억 원을 썼습니다. 회당 60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예비비 끌어다 쓰는 맛을 봤기 때문인지 2023년 해외순방 예산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본예산이 198억 편성돼 있었어요, 열 번 해외순방 가는 비용으로. 그런데 예비비를 본예산보다도 더 많이 끌어다 썼습니다. 총 285억 원을 끌어다 썼습니다. 쓴 비용만 저래요. 그리고 문체부에서 끌어다 쓴 예비비도 66억 원입니다. 합계 무려 549억 원의 해외순방 예산을 써 댔습니다. 해외순방 1회당 42억 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보통 정상회담 예산이 20억 원 정도씩 책정이 됩니다. 올해는 평균 21억 원이 책정돼 있었어요.

24년도 상황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저런 해외순방 문제가 논란으로 불거지고 또 총선에서도 참패하고 또 명태균 게이트도 터지고 아마 해외에 나갈 맛이 안 났던 모양인지 해외순방 5회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가기는 다섯 번 갔는데 책정돼 있던 열한 번, 11회 치 본예산 218억 원을 다 썼어요. 이것을 다 쓰니까 예비비 끌어오기는 그래서 안 갔던 모양입니다.

종합을 해 보면요, PPT 다시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3년의 해외순방,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2배를 썼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회당 약 23억 원의 해외순방 예산을 썼고요, 윤석열 정부는 예비비를 끌어다 쓰는 방식으로 46억 원을 썼습니다. 평균치입니다, 1회 평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에는 회당 60억 원 이상씩을 썼습니다.

기재부도 반성해야 됩니다. 기재부 심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 예비비를 끌어다 쓸 수 없습니다. 예비비의 목적에 대해서, 특수성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 모를 리 없을 테고요.

윤석열 정권 3년간의 여러 예비비 오용 사례 가운데 해외순방 특히 두드러집니다. 외교부에서는 세부 지출내역, 증빙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께서 직접 챙겨 주십시오, 재발되지 않도록.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최취영 장관님, PPT 먼저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작년 5월 당시 대통령 윤석열이 한 발언입니다. 기자들 만나는 공개 자리에서 저런 말을 했어요.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뭔가를 세 자리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언론인 연수사업인 것 같습니다.

○노종면 위원 예, 맞습니다. 언론진흥재단에서 매년 10명 정도씩 죽 보내 오던 해외연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100명 이상, 세 자리 이걸 해 보자라는 제안이었어요. 기자들 만나서 음식 만들어 주고 그러던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저 발언이 실행됩니다. 실제로 올해, 거기서 얘기하는 내년은 2025년도 올해입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매년 10명씩 보내던 장기 연수, 1년 치 장기 연수를 올해는 벌써 21명 선정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없었던 중기 연수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3명을 보냈어요. 저것도 10명 이상 보내려고 했는데 지원자가 적어서 그나마 3명 보내고 말았습니다. 단기 연수는 지금 3회 차 공모가 진행 중인데 이미 72명이 선정됐고요. 지금 3회 차 공모도 35명 모집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 한마디에 국가예산이 기자들 해외 연수 보내 드리는 데 쓰였습니다. 이게 방통위, 방심위 그리고 검찰까지 동원해서 언론을 쥐 잡듯 하던 그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라는 자가 기자들에게 이런 선심성 정책을 약속했고 실행했습니다. 당근이지요, 미끼일 수도 있고. 이런 당근을 덤석 집어 든 언론에 대한, 언론인에 대한 평가는 국민께 맡기기로 하고요.

국가예산, 언론진흥재단 예산이 이렇게 쓰여도 되는 것인지 장관께 여쭙어보겠습니다.

국가예산으로 언론인 해외 연수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취지와 목적이 명확하다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데요, 이번 케이스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증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종면 위원 예, 확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선발 그리고 적절한 규모가 전제되어야 그래야만 국민께서 이해하실 수 있고 납득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선발제도 점검해 주시고요. 적정 규모에 대한 정부 입장도 정리해서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알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정성호 장관님,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여쭙어보겠습니다.

지난해 과방위가 국회에 불출석한 YTN 관련 증인 6명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해외도피가 의심되고 심지어는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무단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대검에 사건이 접수된 것은 올해 1월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고발이 이루어졌고요, 올해

1월 대검이 접수했는데 지금 벌써 8개월, 9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조사된 횟수를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정권에서 YTN을 인수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해외 도피로 의심되는데 조사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사퇴한 김백 YTN 사장, 배석규 전 YTN 사장—지금 현재 유진이엔티 사외이사입니다—등등 또 YTN 내부 인사들까지 형식적인 1회 소환에 그쳤고 지금 송치·불송치, 대부분 불송치이거나 수사 중이에요. 송치 1명 됐습니다, 최근에.

다음 PPT 보시면요.

우리 법은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되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합니다. 국회증감법에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그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위법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 정부 출범하고도 이미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의 위법 상태를 조속히 종료시켜 주시고 관련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이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1월에 대검에 고발됐거든요. 대검에서는 바로 받자마자 서울남부지검으로 전체 이첩한 다음에 남부지검은 해당 피고발인들의 주소지 검찰청으로 또 이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검찰청이 또 경찰로 전부 다 이송을 해 갖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회증감법에 의하게 되면 검찰에 고발하게 돼 있지만, 법률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송달이라든가 이런 기초조사를 위해 경찰에 넘긴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진행이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법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관심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위원님, 사실관계 하나만 제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종면 위원 예.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까 언론인재단 언론인 연수하고 관련해서는요 성과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국가예산 지원사업은 아니고 언론재단 자체의 사업입니다.

○노종면 위원 언론재단이 사용하는 비용은 국가가 허락해 준 사업을 해서 얻는 수익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니, 이 사업……

○노종면 위원 광고 집행 수수료 10%를 받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정부가 직접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부분은 약간 차이가……

○노종면 위원 공적자금이라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약간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위원 예, 국가 예산인지 여부에 대한 그런 규정에는 지금 말씀 이해가 되고요. 공적인 금액, 자금이라는 데는 동의하시는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공적인 자금의 범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판단할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노종면 위원 공적자금이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것을 가지고 공적자금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정부 예산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게 다 공적자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면 언론진흥재단이 사용하는 예산은 민간자금인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거기에는 뭐……

○노종면 위원 저는 말싸움하자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언론진흥재단은 언론에, 신문·방송에 들어가는 광고 대행해 주고 수수료 10%를 받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노종면 위원 국가가 그 사업을 하도록 해 줘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것을 다 국가 예산에서 그 언론재단 사업을 100% 다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음을 좀 인정해 주십시오.

○노종면 위원 물론 그게 국가에서 편성하는 예산이 아니라는 건 이해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게 공적인 성격이 아니라는 데 그 부분에서 동의를 못 받으니까 제가 좀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니, 공적인 성격……

○노종면 위원 그러면 언론을 지원하는, 언론인들의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그 돈의 성격은 뭘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것은 언론재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는 국가 관련된 사업도 있을 거고요. 또 국가 관련 없는 사업도 있을 거고요. 그게 직접·간접적으로 100% 정부 관련된 돈이다,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게 어떤 성격인지 파악해서 의원실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울의 존경하는 국민의힘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국방부장관입니다.

○한기호 위원 대장들 인사가 발표됐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번 인사의 특징은 대장 7명을 모두 전역 조치하고 중장을 동시에 7명을 진급시켜서 보직 주는 것으로 된 것이 아마 특징일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법에 의해서 임기가 규정된 직책이 있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어느 직책이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육군총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기호 위원 합참의장, 각군 총장 이렇게 4명에 대해서는 법으로 임기가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건 뭐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준수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 법을 왜 만들었지요? 왜 임기를 2년이라고 법에다가 명시해 놨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 임기를 보장해서 여러 가지 군직에 대한 확고한 책임을 지라는 그런 미션이지 않겠습니까?

○한기호 위원 그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기를 명시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7명을 전부 다 동시에 교체해 버리는데 그러면 또다시 2년 후에는 동시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인사를 잘했냐 못 했냐가 아니고 이것이 앞으로 인사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전 정부는 그보다 더 짧은 기간에 각군 총장을 교체한 바도 많이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다음에 중장들이 또 대거 진급을 하겠지요.

중장들은 계급정년이 얼마입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중장들은 특별히 계급정년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한기호 위원 있습니다. 중장도 계급정년이어서 마음대로 5년, 6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계급정년이 미달했을 경우에는 전역을 어떻게 시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각기 기수나 그 직위에 다시 하급자가 상급자로 올라가면 동시에 전역하거나 보직을 바꿔 주면……

○한기호 위원 상위직으로 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중장인 경우도 중장의 계급정년이 있고 별 둘도 계급정년이 있습니다. 별 둘은 5년입니다. 다 계급정년이 있습니다. 계급별로 몇 년 동안을 달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채우지 않았을 경우 전역을 시키려면 실제로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금 요번 이재명 정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것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군의 인사에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한번 장관님 보십시오. 이것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엄에 의해서, 분위기도 쇄신하고 조직의 안정화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7명이 정말 계엄하고 다 연루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여러 가지 통치권 차원에서 일신과 또 새로운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일신을 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한기호 위원 장관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계엄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직위에 있던 장성들이 같이 도매금이 돼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도매금으로 되는데 대한 억울한 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군의관들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얼마나 문제가 되느냐. 과거에는 연간 약 1500명 정도가 군의관으로 나왔었는데 이제는 700명으로 다운됐습니다. 24년도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인원은 184명밖에 안 됩니다. 184명이면 군의 의료체계는 무너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군의관 문제뿐만 아니라 ROTC, 공중보건의 또 여러 가지 연구전문위원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런데 다른 데들보다도 군의관 문제는 군인들이 질병에 대한 예방부터 실제로 작전이나 또 전시에 치료받는 것까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의관들이 요구하는 게 뭔가요?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복무기간과 여러 가지 급여체계 이런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습니다. 병사는 18개월 하는데 군의관은 36개월 합니다. 그러니까 군의관으로 안 가고 병사로 가겠다는 거지요. 이것은 해결하는 대책이 없이 그냥 가면 지금 184명밖에 지원자가 없다, 무너지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닙니다만 시급하게……

○한기호 위원 그런데 이게 당장 닥치지 않습니까? 장관님 재임 중에 닥친다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시급하게 범정부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기호 위원 다음, 상수도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가 군의 보급률이 지금 몇 %나 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약 72%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지요. 72%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사실 계곡물이라든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저기에 보이는 것은, 72%라는 건 전체를 놓고 봤기 때문인데 지역으로 봤을 때는 또 심각한 곳이 있습니다. 화천 같은 경우는 3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무슨 물을 먹습니까? 상수도가 33%밖에 안 되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상수도하고 지표수 물을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체 내에서 정수를 해 가지고 물을 먹고 있는데 이것은 국방부가 그냥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먼저 우리 군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해 주고 있는 화천군을 비롯한 접경지역 지자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군과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결하고……

○**한기호 위원** 화천에 지금 상수도 보급하기 위해서는 약 10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게 12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방부가 여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저희들도 협조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화천군과 우리 한기호 위원님께서 좀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에서 서로 분담의 비율에 따라서 화천군민과 또 우리 군이 사용하고 있는 물 양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저는 협의를 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한기호 위원** 행안부장관님, 지금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이 8월 26일 날 상정됐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고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금 행안위에 계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여기에는 교육부총리님…… 대행하시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한기호 위원**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문제가 지금 실제로 행정부에서 거부를 하고 있고 또 외국인 초등학생 유학비자는 법무부에서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시행 연도를 조정하든 해 줘야지 지금 두 군데서 발목을 잡아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위원님, 국제학교 관련 문제는 전반적으로 법안 내용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 국제학교에 대해서 영리법인이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만 아주 예외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강원도……

○**한기호 위원** 아니, 특별자치도라고 한 자체가 예외지 그러면 뭐 하러 ‘특별’을 붙입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그러니까 거기만 예외고요. 내륙에서는 어느 도시에든 이게 적용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가지만 좀 수정해서 개정을 하시는 게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기호 위원** 연도를 조정하든가 해서, 지금 이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걸 알고 푸는 방법을 한번 같이 강원도하고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초등학생들 유학비자 내 주는 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 이거 얘기 들으신 거 있으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초등학생들이, 왜 이게 문제가 되냐 하면 외국인들 근로자들 들어오면서 초등학생을 데리고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학비자를 내 주자는 거지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근로 조건도 해결하고 같이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하나 또, 이걸 급하게 여쭙보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지금 균형법에 강제추행과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상관 모욕, 이 두 가지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은폐하려고 하고 실제로 여기에 대해

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문제가 생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일반 사회와 똑같이 벌금형을 넣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하여튼 법안 제출되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벌금형을 더 높여 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직 징역형만 가지고 한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공감합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것도 장관님이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을,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여수을 출신의 조계원 위원입니다.

최휘영 장관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열풍이 대단하지요. 전 세계가 ‘케데몬’,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K-컬처 300조 시대, 문화 강국의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는데요. 바로 이런 K-콘텐츠, K-컬처가 기반이 돼야겠지요. 그리고 K-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전략적 준비가 필요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화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2024년 예산을 보면 거의 금액적으로는 한 1170억 정도 삭감이 됐더라고요. K-컬처 관련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삭감되고 있는 게 바람직할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조계원 위원** 바로잡아야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조계원 위원** 2026년 예산은 어떻게, 이 관련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일단 많은 부분에서 작년 대비 올해 줄어들었던 것들은 내년에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몇 가지는 아직 미진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저희 나름 필요성들을 더 말씀을 드려서 좀 더 증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케데헌’ 하나만 하더라도, 이 ‘케데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전 세계적인 검색량이 거의 2배 이상 뛰었고요. 그리고 또 국립중앙박물관의 뮤지엄 굿즈—그걸 굿즈라고 하더라고요—그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었다고요.

그리고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보수적으로 봐도 약 3000억 원에서 최대 1조 원 내

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K-컬처, K-콘텐츠가 갖는 위력이, 산업적 효과도 큰데 그와 관련된 문화 정책이나 전략,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알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파리와 런던, 중국을 한번 방문을 해 봤는데요. 공통적인 관심사가 케이팝, K-컬처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었는데 거기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왜 한국에서는 케이팝 공연을 제대로 하지 않는가, 아레나 하나 없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한국에서 케이팝 공연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공연 관람을 위해서 갈 텐데 의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화면 한번 보십시오.

하나 있기는 합니다, 인스파이어 아레나. 1만 4463석인가요, 인천에 있는데. 원래 세계적인 케이팝 공연하는 데 필요한 관객, 객석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주로 큰, 일반적으로 톱티어 공연, 큰 공연들은 5만 석 정도는 돼야 의미가 있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최소로 톱 클래스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아레나는 2만 5000석이 기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2만 5000석 이상의 규모를 갖춘 아레나가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준비되고 있는 아레나를 보면 서울아레나 그리고 고양의 K-컬처 벨리, 여기는 2만 5000석 규모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권에만 아레나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지금 서울아레나는 짓고 있고요. 고양은 지금 중단이 돼서 다시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계원 위원 고양의 중단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조계원 위원 그러면 꼭 수도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얼마든지 좋은 최적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저희 여수엑스포 아시지요? 중소도시로는 세계에서 유일할 정도로, 중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엑스포 행사를 거뜬히 치러 냈고요. 그리고 교통입지나 이런 부분에서도 중국과도 가깝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고 또 충분한 부지도 갖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 7월, 8월 보니까 MyK FESTA in 여수, 큰 행사가 여수에서 있었고 K-메가 아일랜드 행사도, 케이팝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도 수만 명이 모여들더라고요. 그런데 한 낮에 땀별 위에 의자 깔아 놓고 공연을 합니다. 그렇게 처참한 실정입니다.

만약에 그런 곳에 아레나가 있었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어쨌든 중국의 정책으로 인해서 케이팝 공연이 잘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케이팝에 대한 어마어마한 수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한국 아레나에서 케이팝 공연이 펼쳐진다면 그러면 많은 해외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연계 관광효과, 결국 K-컬처 300조 시대를 여는 방법은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야 되지 않겠습

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을 때 많은 외국인들을 한국으로 오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공연 같은 것을 즐기게 하면 훨씬 더 산업적으로 저희가 크게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레나가 너무 적고요. 이 부분을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데……

○조계원 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위원님 말씀처럼 여수도 아주 좋은 후보지인 것 같습니다. 후보지에 놓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단순한 아레나가 아니라 지금의 관광이나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복합 아레나, 즉 컨벤션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 아레나 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그 시설을 놀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학교예술강사 사업 아시지요?

다음 PPT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몸살을 앓았었는데 결국 추경을 통해서 보완하기는 했지만 130억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2023년에는 570억대 예산으로 학교예술강사 사업이 수행되었고 이 사업들을 통해서, BTS 멤버들의 꿈 이것들이 이 학교예술강사 사업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K-컬처와 케이팝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찬밥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지금 예술강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월 60만 원을 가지고 과연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은 정말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꿈과 열정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데 언제까지 이렇게 홀대하고 천덕꾸러기 취급을 할 것입니까? 안타깝게도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해 보니까 올해 예산도……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올해 추경까지 포함해서 130억 정도가 예산이 세워졌는데 2026년 예산도 135억 수준입니다. 이걸로 어떻게 제대로 학교예술강사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2023년에 500억대였습니다.

○조계원 위원 예, 570억, 574억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저 부분이 지금 감소된 부분이거든요.

저희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지방교육재정이랑 매칭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제대로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가을, 이번 국회에서 이 부분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조계원 위원 학교예술강사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호중 장관님.

화면 부탁드립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조계원 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24시간 365일, 밤에도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잘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조계원 위원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가 다 좋은데 지문 인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조계원 위원 그런데 그 지문을 저도 해 봤는데 실패했습니다. 장관님, 혹시 사용해 보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저도 사용해 봤습니다만 이게 지문 인식을 엄격하게 해서 성공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좀 완화해 가지고 하게 될 경우에는 또 도용이라든가 이런 범죄에 이용될 소지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본다면 지문 재등록을 유도해서, 왜냐하면 자꾸 지문도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등록을 할 수 있게 해서 계속 사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계원 위원 재증명 발급 현황 화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전국적으로 5684대가 보급되어 있고 연간, 24년도 보면 3132만 1587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했더라고요. 따져 보면 하루 평균 15.5건 정도, 그러니까 15건 정도의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의 비용과 성능을 감안한다면 하루 15건은 너무나 적은 민원 처리 건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의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근 위원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서울 성북구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법무부장관님에게 한번 질의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번 7월 30일 날 대통령님께서 주주와 소비자·이해관계 중심으로 기업 활동을 전환하되 기업 활동과 관련해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들었습니다.

○김남근 위원 경제형벌을 어떻게 보면 민사 책임이나 이런 걸로 하고 기업 활동과 관련된 것들을 너무 형벌 위주로 하지 말라 이런 취지이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렇게 되니까 저희 당에서도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이걸 내일 발족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제형벌이 많게 된 이유 중에…… 다음 장을 보시면 군사독재 정권 때, 권위주의 정권 때 법을 만들면서 형벌을 관행적으로 많이 만들었던 그런 것도 원인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김남근 위원** 예를 들면 전두환 정권 때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공정거래법을 만들었는데 세계적으로 공정거래법의 불공정행위 같은 것들을 형사처벌하는 예는 없었어요. 그렇지요? 지금도 없고. 보통은 독점이나 경제력 집중 이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에 대해서만 단기 형벌 같은 걸 주고 대부분은 과징금 같은 행정벌로 다스리는데 전두환 정권 때 이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불공정행위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형벌이 만들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OECD 이런 데에 대부분 민사책임 위주로 되어 있는 거에 비하면 맞지 않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형벌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김남근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이게 사실은 강력한 규제인데 규제의 권한을 갖고 있는 관료들이 이거를 풀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측면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김남근 위원** 관료들 문제도 있지만,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소송한 지 꽤 오래되셨지요, 국회에 오신 지 오래됐으니까. 그런데 소송을 해 보면 대기업을 상대로 이기기 어렵어요. 왜 이기기 어렵냐 하면 증거를 모으기가 어려워요. 그 증거들은 다 대기업 내부에 있는데 현재 재판제도하에서 그 증거들을 소송에 현출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 하면 고소를 하는 거예요, 형벌로 조사를 해 달라고. 그러면 형사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무혐의 처리를 하더라도 수사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재판에 그거를 현출시켜 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게 돼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물론 권위주의 정권 시대 때 감옥에다만 집어넣어 놓으면 민사 문제 다 해결된다는 그런 왜곡된 인식이 많이 남아서의 문제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형사고발을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모으려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의 TF 이름도 경제형벌만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민사책임도 합리화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대통령님의 말씀도 책임을 다 없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 책임을 징역 살리는 걸로 하지 말고 민사적이거나 행정적인 것 이런 걸로 하라는 취지잖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러려면 경제형벌들을 정리할 때 그거를 많이 폐지하거나 그런다면 그 거에 맞춰서 민사책임을 잘 물을 수 있는 체계도 만들어야 되겠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김남근 위원**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증거들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대부분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무부장관 정성호**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대개 관련 증거들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고 기업이 또 법적인 능력들이 굉장히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증거들을 갖다 법원에 사전에 현출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김남근 위원** 그렇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신 것처럼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판에 가면 증거를 현출시키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또 형사적인 문제에 자꾸 의존하려는 그런 문화가 해결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형벌들을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그거와 비례해 가지고 디스커버리 제도와 같은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제재적 성격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경우는 굉장히 악의적으로 그런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사건 같은 경우들을 보게 되면 대기업들이 침해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거를 빨리 갖다가 쓰고 소송해 가지고 시간 끝면 해결된다 이렇게 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술을 탈취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또 게다가 소송을 질질 끌어요. 무모하게 질질 끌어 가지고 제때에 피해 배상을 해 주지 않고 그 소송을 장기화시켜 가지고 사실상 포기하게 만들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보통 이렇게 하면 미국 같은 데서는 레클러스(reckless), 무모하게 소송을 지연했다 그래 가지고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걸 하지요. 그래서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걸 도입한다라든가 또 집단소송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여럿이 같이 소송을 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되는데 이런 민사적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합리화하는 것과 형사, 경제형벌들을 합리화하는 것들이 같이 병행돼야지 경제형벌만 없애고 민사적인 제도 정비만 하지 않게 되면 결국 아무런 책임도 못 묻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오히려 경영자들의 또 침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임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렇지요. 재벌 봐주기다 이런 비난 여론만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김남근 위원** 그런 점에서 경제형벌을 합리화하려면 그런 디스커버리 제도라든가 집단소송제라든가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민사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같이 꼭 병행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명심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김남근 위원** 저희 TF에서도 정부하고 같이 그렇게 보조를 맞추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다음에 자사주 문제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사법고시 보실 때 자사주는 상법에 어떻게 하라고 돼 있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가 정확하게 기일이 안 나는데……

○**김남근 위원**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하라고 돼 있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소각하게 되어 있지요.

○**김남근 위원** 왜냐하면 자본충실 의무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만큼 자본이 줄어든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자사주 소각은 당연한 것이었고 사법시험에도 잘 안 나오는 너무 당연한 그런 거였는데, 이명박 정부 때 2011년도에 재계의 요구로 경영권 방어에 필요하다 그래서 자사주를 허용을 해 줬는데 자사주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한번 표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 이상 자사주를 갖고 있는 상장기업이 236개사나 되고 5% 이상 갖고 있는 상장회사가 533개나 됩니다. 대부분의 상장회사들이 자사주들을 갖고 있고 갖고 있는 양도 5%, 10%면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외국에서 자사주라고 그러면 1%, 2%도 안 갖고 있는데 5%, 10%를 갖고 있다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건 당연히 자사주 남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냐 하면 나중에 이걸 우호 세력에게 넘겨서…… 우호 세력에 넘길 때는 헐값으로 넘겨주게 되면 또 주가가 떨어져 가지고 다른 주주들은, 기존 주주들은 피해를 보게 되지요. 이런 자사주의 남용이 여러 피해를 주는 사례들도 있고.

또 국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어떤 투자로 가거나 배당으로 가서 돈이 돌아야 되는데 자사주로 묶여서 투자도 안 되고 배당도 안 되고 이러니까 경제적인 비효용들이 크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자사주를 이렇게 과도하게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지금 상법 개정안으로 자사주를 예외적으로 임원들의 스톡옵션과 같은 보상을 위해서 갖고 있거나 우리사주조합에 지원을 하거나 또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달라고 이렇게 행사할 상황이 예상이 되니까 그런 경우만 예외적으로 보유를 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는 소각하도록 하는 입법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의 사례들을 한번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모범사법에서는 자사주는 소각한 것과 같이 아예 의제를 하고 있고 또 그걸 따르는 캘리포니아주는 그렇게 하고 있지요. 동부에 있는 주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사주를 보유하게는 하겠지만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자사주를 처분하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위 충실의무 위반으로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것들을 물기 때문에 자사주를 잘 보유하려고 그러지 않고, 그래서 자사주를 보유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곧 소각한다는 의미가 돼요.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한 주당 주식의 가치는 올라가니까 배당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소위 주주환원 정책으로 하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사주를 매입한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요. 우리는 자사주를 매입한다면 주가는 떨어지지요, 나중에 주주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 혼란들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서는 시가총액을 할 때 자사주를 포함을 안 시켜요. 유통되는 게 아니니까 빼고서 하는데 우리는 자사주를 시가총액을 따질 때도 포함을 시켜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전체 시가총액의 한 6% 정도가 거품이 있다는 거예요, 자사주로서 유통도 안 되는 주식인데. 그러니까 경제적인 상황 파악하는 데도 많은 교란을 주게 되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거나 주식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과도하게 자사주를 보유하는 것들은 처분을 해야 되는, 소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번에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상법 개정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는데 다음에는 우리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주환원 정책들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요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식 중의 하나로 자사주 소각 등의 입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서 행정적 차원에서도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기업이나 경영계에서는 적대적 M&A에 대해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러나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우리 소액주주들의 권리 보호가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또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큰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잘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김남근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문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체부장관님,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전년에 비해서 8000억 증가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본 위원이 올 초 3월부터 22대 국회 최초로, 저는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제 분야에 대한 고충을 듣고 그 전망까지 미래를 내다보고 질의나 아니면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 부분을 챙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고 이에 따라서 문화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국회 본회의장 5분 발언 및 상임위 질의, 서명운동 등등을 통해서 문화 예산 확대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반년 만에 이런 성과를 얻었고 또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잘하셨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직도 부족합니다. 2025년 전체 국가 예산안에서 문체부 예산은 전체의 1.05%에 불과

했습니다. 2026년에 1.32%로 증액되었지만 여전히 부처별 예산으로는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역대 최대 R&D 예산 확대에도 문화기술 R&D 예산은 여전히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문화 예산은 문화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창작자들의 자양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창작자가 딛고 설 땅도 없고 씨앗 심을 땅도 없고 어떻게 콘텐츠라는 수확물을 만들어 낼 수가 있겠습니까?

장관님, 문화 예산 확대를 위해서 더 분투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산업의 중흥을 지금 꾀하고 있는 데 비해서 소외될 수 있는 창작 분야도 외면받지 않도록 정책을 잘 짜 주셔야겠습니다.

기초 문화예술 지원 확대는 문화 예산의 굳건한 토대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문화산업 중흥 없습니다.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장관님, 예술의전당은 국민의 문화 향유와 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예술 기관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공적인 역할이 분명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제가 상식적인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국고보조금의 재원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세금입니다.

○김재원 위원 맞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으로 편성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다시 세금을 납부한다, 이렇게 했다면 상식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재원 위원 PPT 보시겠습니다.

예술의전당은 2023년에 281억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중에 146억 원으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2024년에도 역시 167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서 그중 31억 원으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한마디로 세금을 받아서 세금을 납부한 것입니다.

예술의전당은 대관료, 임대료, 공연 수익 등 포함해서 연간 350억 원 내외의 자체 수입을 이미 거두고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데 모자라지 않겠지요.

장관님, 국고에 납부할 세금은 벌어서 충당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납부하는 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벌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위원 예, 맞습니다. 저는 돈의 사용 순서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술의전당에 부과되는 세금 성격이 재산인 토지와 건물에 부과되는 것이니만큼 실제 건물의 임대와 공연 대관 수익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업비나 기타 예산은 국고보조금을 통해서 해소하면 될 일입니다. 이래야 국가 조세제도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현재 예술의전당은 국고보조금으로 기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예술사업이나 공익사

업 예산으로는 고작 10% 정도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금을 납부하거나 시설물 유지 관리를 하는 시설유지비로 60%, 인건비의 20%가량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편하지요. 국가보조금을 세금 납부나 인건비에 사용하면 보조금 정산 시점에서 세금 납부 증명이나 인건비 지급명세서 정도로 간단하게 처리하기가 쉽겠지요.

반면에 국가보조금을 사업 예산 위주로 편성하면 사업 집행 시점부터 부처의 관리 감독과 간섭에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정산 시에도 각종 증빙, 보고 부담 이런 것들이 더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심의 그리고 결산심의도 모두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합법성 효과를 추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기관 행정편의주의로 예산과 조세의 대원칙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앞으로 예술의전당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런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납부할 세금은 벌어서 내고 부족한 사업 예산은 추가로 지원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지요. 반드시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어서 연관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세금 이슈에는 부처 탓도 있습니다. PPT 보시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 개정 당시에 문화예술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예외 규정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조항의 개정 이전까지는 분명히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 특례에 따라서 예술의전당 또한 문화예술단체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재산세가 면제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이후에 면제 범위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로 한정되면서 예술의전당이 즉시 과세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행령 개정 시점에서 문체부가 사전에 인지를 했어야 하는데 사전에 인지를 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문화예술기관은 일반 공공기관과 달리 공연장, 전시장 등 대규모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렇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서 과세를 적용할 경우에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큰 세금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장관님, 지금이라도 행안부와 협의해서 예술기관에 대한 특례 규정 마련하거나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보완조치 해 보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행안부장관님 나와 계십니다.

행안부장관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장관님과 협의해 보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덧붙여서, 앞으로는 또 다른 법령 개정이나 제도 변경 과정에서 문화예술기관 특수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를 하고요 관계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행안부장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문체부장관님, 다른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이라는 거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들어 봤습니다.

○김재원 위원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술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참여 아동의 5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PPT 보시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업은 지속사업은 아닙니다. 6년 한정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즉 6년 동안은 국고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이 되지만 7년 차 이후부터는 국고 지원 없이 지자체 자체 재원이나 후원금에 의존하는 자립형 모델로 전환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정부의 예산 지원이 끊긴 7년 차 지역 중에서는 지자체 지원 예산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주던 간식조차도, 그것부터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장관님, 본래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 주겠다라는 취지의 교육 사업이 지자체 예산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김재원 위원 문체부는 하루빨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110개 거점기관의 실태 파악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시적 국고보조 이후에 지자체로 이관된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래 이 본래의 취지는 취약계층 아동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또 기초예술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한 취지였었잖아요. 이것이 지자체의 예산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적 보완이나 국고 지원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40초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참석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고생이 많으신 국무위원들 그리고 참여해 주신 행정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위원장님, 사실관계 하나만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병도 예.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까 노종면 위원님이 질의 주신 거하고 관련해서요.

일단은 정부 예산으로 언론인 연수를 보내지 않는 건 맞고요. 그런데 언론재단이 공공기관이기도 하고 세입내역을 정확히 확인을 해 보니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광고수수료 수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재단의 자금이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맞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의 존경하는 이소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소영 위원 행정안전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도 계십니까?

○국무총리비서실장 민기 국무총리비서실장 대참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같이 들어 주십시오.

2005년 행정도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정부 세종청사 건설이 공식화됐고 그로부터 지금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세종청사가 2012년에 1단계 준공이 돼서 그해부터 중앙행정기관이 세종 이전을 시작했고요 그로부터도 1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정부 과천청사가 있는 도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원인데 지금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과천에서 일하는 동안 느낀 바가 있어서 그 점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느낀 점 중의 하나는 이겁니다. 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는 것인데 실제로 어떤 기관 이전은 합리적인 배치기준에 의하기보다 지역별 이해관계에 기반한 또는 때로는 파워게임에 가까운 양태로 결정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방사청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2012년에 과천청사 입주 부처들이 세종시로 빠져나가면서 청사에 공실이 발생하고 지역상권이 무너진다는 원성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용산에 있던 방사청을 과천으로 이전했고, 그게 2017년입니다. 1800명 규모 기관이 이전하면서 비용도 수백억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 후 대전에 있던 중기부가 세종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대전시에서 반발이 크게 생겼습니다. 중기부가 빠져나간 자리를 방사청으로 대신하겠다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 공약 이행 성격으로 2022년에 방사청이 대전 이전계획을 확정 고시하게 됩니다. 용산에서 과천으로 이전한 지 딱 5년이 지나서, 5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무렵의 기사를 한번 보면요 이게 제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다음 슬라이드……한 줄만 읽어 보겠습니다. 대전시는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기부 대신 방사청 등 다른 도움이 될 만한 부처를 받아 내기 위한 전략 수립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기사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고요.

이미 다 끝난 얘기인데, 일부 이전도 다 완료됐는데 이 얘기를 제가 꺼내는 이유는 지난 10여 년간 역대 정부의 행정기관 지방이전이 중장기계획이라거나 마스터플랜 없이 선거 때마다 꾀감 빼먹듯이 또는 땀질하듯이, 돌려막기 하듯이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려 보기 위함입니다.

최근에도 방통위가 빠진다, 법무부가 빠진다 이렇게 가끔 근거 없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제가 정부에 계획을 문의하면요 돌아오는 답변은 역대 정부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특별한 종합적 추진 계획은 없다. 그리고 기존 수도권 청사, 과천 청사나 광화문 서울청사의 활용 방안도 정확한 추진 계획은 없다’,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5년째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늦은 시간에, 자세한 내용은 서면질의로 대체를 할 텐데요. 저는 행정기관 이전 정책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이제 더 이상은 미

루지 말고, 콧감 빼먹듯이 말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이 일을 해 나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기관들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삶을 생각해 보더라도 즉흥적으로 급하게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적어도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어디에서 살고 어디에서 일하게 될지는 알 수 있어야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점에 대한 고민이나 체계적인 용역도 필요해 보이고 또 국무조정실 같은 곳이 주도해서 TF라도 만들어서 이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기 시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서면질의를 직접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이 있으시다면 짧게라도 코멘트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2차 이전 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국회의 세종 이전 내지는 세종집무실이라든가, 제2집무실 또는 세종 분원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 행안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수도권에 지금 중앙행정기관이 24개 그리고 공공기관도 한 300여 개 정도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는 기관의 특성상 수도권에 남아야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어떻게 모아서 기존 청사는, 43년 된 정부청사들을 어떻게 유지할지 또는 어떻게 개편할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참고로 공공기관 이전은 국토부가 소관입니다.

○**이소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신 이소영 간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의 존경하는 박형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오늘 먼저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이 예결위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니다. 오전에 배준영 위원님께서 세 분 중에 몇 분이라도 출석해서 답변하는 것이 국회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세 분에게 연락해 본 결과 오늘 일정이 있고 이러저러해서 출석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까? 이번 정상회담, 관세협상을 위한 정상회담이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서 국민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미를 할 때…… 미국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세 사람 다 한꺼번에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아마 제 기억에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보통 어떤 기관이든지 그 기관의 장이 자리를 비우면 당연히 다음 책임자가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마지막에 또 가셨어요. 그만큼 급박하고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급박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갔다가 돌아와서는 아무도 와서 설명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징적으로 무엇을 보여 주느냐?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신통치 않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킬 수 있고 환호받을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더라면 아마 세 분 실장님이 앞다투어 여기 나와서 얘기하려고 했을 겁니다. 세 분 다 나오지 않겠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동의를 얻을 만큼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것을 방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와서 고생하고 계시는 외교부장관님께 한말씀만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 문제, 3500억 달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 그다음에 반도체나 의약품, 추가적인 품목에서 어떻게 최대국대우를 받느냐의 문제, 자동차 관세 물론 가장 초미의 관심사였지요. 그다음에 한미 원자력협정,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체적으로 타결된 것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로 협상을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일괄 협상 타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나도 구체적인 협정을 맺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타결된 것도 있고 타결되지 않은 것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중에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은 게 뭐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확실하게 합의 단계에 이르렀던 것은 무엇보다도 앞으로 한국의,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미국이 그동안 제공해 온 확장억제를 분명히 한다는 것, 그것이 제일 확실한 것이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형수 위원 장관님, 제가 다섯 가지 얘기한 것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없었어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뭐가 지금 확실하게 타결된 거냐고 물었는데 그 얘기를 안 하시고 확장억제를 얘기하셨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여기 중에서 확실하게 자신 있게 이걸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오늘 하루 종일 얘기를 하지만 계속해서 이게 걸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관님한테도 그렇고 정부에도 그렇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미를 하고 와서, 정상회담을 하고 왔으면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가서 이것 이것 이것은 이렇게 타결했고 이걸 아직 못 했는데 계속 진행 중이다, 추후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누가 어떻게 담당해서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국민들이 더 이상 의구심도 없고 성과가 있다면 성과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장관님도 마찬가지고 또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다시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님, 오늘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셨어요. 특별재판부가 여러 가지로 지금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현행 헌법상으로 볼 때도, 특별법원은 당연히 지금 현행 헌법상으로 보면 군사법원만 특별법원으로 돼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반민특위를 할 때나 3·15 부정선거를 할 때 그때도

헌법의 부칙에다가 다른 조항을 마련했던 겁니다, 위헌성을 피해 가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지금 강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대법원의 입장임과 동시에 법원행정처장님의 입장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업** 법관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박형수 위원** 법무부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제가 여쭙보고 싶습니다.

이 특별재판부가 위헌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 우려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우선 특별법원이라고 한다면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법원을 제외하고는 위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재판부인데 지금 나온 법안이라든가 일부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이번에는 그 법원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형수 위원** 법원 안에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법관 이외에, 법원 이외에 국회에서 법관의 선임에 관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우리 헌법상 모든 국민이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법관이 아닌 분이 재판부의 구성원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천을 만약 국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법관의 자격이 있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런 분들 중에서 지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형수 위원** 그것은 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에서 정한 법관이…… 법에 의해서 정해진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그 모든 절차를 충족하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재판받을 권리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하도 민주당에서 예전에 특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사안을 다 특별검사, 특별검사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가면 법원 마음에 안 든다고 특별법원까지도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특별법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제가 경북 울진이 고향입니다. 지난주에 내려가서 우리 고향의 지인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 ‘살다가 살다가 특별법원 만든다는 얘기는 도대체 처음 들어 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은 울진에서 태어나 갖고 울진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 저는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주무부 장관으로서 확실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더라도 주무부 장관은 여당 의원들과 물밑 접촉도 해야 되고 그런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중심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여하튼 유념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아까 제가 특별재판부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때 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사법부의 독립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법부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그런 독립의 의지를 외부에 보이도록

하는 것, 의심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재판, 대법원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보석으로 석방을 했습니다. 저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석방됐다, 안됐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도 오랫동안 법조인 생활을 해 왔지만 대법원에서 보석 석방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어떻게 구속기간……

구속기간이 언제인지 행정처장님 아십니까, 구속만기가 언제인지?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석이라고 하는 것도 재판의 중요한 한 부분이고 재판 자유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지만……

○**박형수 위원** 일단 구속기간 만료가 언제인지 아시느냐고 물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3차 최종 구속만기 한 2주일을 남겨 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형수 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석방은 유무죄와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것 침소봉대할 문제지만 그런 빌미를 대법원이 줬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무죄든 유죄든 결론을 내어야 되지 그걸 어떻게 해 가지고 구속만기가 다가와서 보석 석방하고 난 다음에 불구속으로 재판하는 그런 게…… 대법원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모든 구속 사태를 대법원은 다 그렇게 처리하실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 나라 구속제도가 가진 가장 큰 맹점이, 외국의 많은 선진 사법 국가에서는 구속기간 제한이 없거나 아니면 구속연장이 임의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1심에서 2회, 2·3심에서는 3회라고 하는 구속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구속 제한될 때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심리가 조금 더 계속되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는 보석으로 석방하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박형수 위원** 심리를, 당연히 사실심이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대법원에서 무슨 사실심을 합니까? 법률심인데,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사리에 맞지 않고 법리에 맞지 않는 얘기를 법원행정처장님이 하신다면 대단히 유감입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재판 사항이라서 알지 못해서 더 이상의 답변은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관련해 가지고 양당 간사님께서 최종 협의를 하셔서 위원장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의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상 위원** 늦은 시간에 보충질의를 하게 돼서 송구합니다.

특별히 속기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주거 안정 관련해서 기재부차관님, 국토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재부차관님, 최근에 서민·청년층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공급 기반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최기상 위원** 지난달에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이 의결됐습니다. 국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해서 청년·서민용 공공주택을 3만 5000호 이상 공급하겠다.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맞습니다.

○**최기상 위원** 바람직한 방향인데요. 문제는 서울에도 부지가 충분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서울에도 일부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일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최기상 위원** 저희 금천구에 공군부대 부지 복합개발 추진 중인데요. 관련해서 알고 계시는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니요, 구체적인 지역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군사시설도 말씀드린 공급계획에 해당될 수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최기상 위원** 국방부장관님, 저희 금천에 1940년대부터 있었던 공군부대 잘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60년대 아십니까? 60년대지요?

○**최기상 위원** 2005년부터 이 부대 이전 논의가 돼서 한 20년 됐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알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래서 주민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시는데요.

2024년 7월에 이 부분이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이게 20년 정도 되니까 이른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또 ‘지연된 행정이 과연 행정이나’ 이런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여러 가지 작전성 검토와 또 지역 주민들의 상생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유관 기관과 협조해서 바로 협력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감사합니다.

그 부대가 압축형 부대로 전환하고 그 부분에 주거 단지를 조성해 해도 우리 국방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기재부차관님은 마찬가지로, 지금 LH가 우선사업 대상지 선정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이 잘 마무리되면 국방부에서 기재부에 위탁 사업 대상지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사시설도 기재부가 준비하신 데에 해당될 수 있으니 신속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서울에서 아주 살기 좋은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최기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부산 사상의 존경하는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국무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님 계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예.

○김대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요즘 계속 차관회의를 주재하시지요?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대통령이 이제 미국 순방을 마치고 오셨기 때문에 이런 후속 조치도 좀 해야 되겠지요?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미국이 자동차·철강·반도체 같은 우리의 주력산업에 높은 관세를 확실히 게, 지금 우리 외교부장관님도 절충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내년 성장률이 0.6p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는데 실장님,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지금 좀……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장단기적 대책을 갖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설팅을 한다든가 금융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소를 해 주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저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각종 산업별로 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국익에는 여야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공동성명,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도 외교부장관님에게 질의를 했지만 공동성명이 없었다는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스스로가 자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정상회담 이후에 쏟아질 이런 청구서 여기에 정교하게 대응할 준비가 있다고 하셨지요?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번 한미 정상에서 1500억 달러—우리 돈으로 209조 원입니다—이게 추가 투자 MOU가 체결됐지요?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예.

○**김대식 위원** 그리고 지난달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 달러, 우리 돈 487억입니다. 이러면 이게 우리나라 내년 1년 예산하고 거의 지금 맞먹는 건데 이 중에 건인차 역할을 했던 것이, 제가 지역구가 부산 사상입니다, 부울경에서 조선 2건, 원자력 2건, 광물 1건 이렇게 해서 이번 정상회담의 주도권 이것은 사실상 동남권 기업들이 했다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예, 인정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부산·경남·울산의 기업을 중심으로 이뤘기 때문에 정부에서…… 실장님,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울경에 특별하게 예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제가 말씀드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일부 우려가 있는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든가 또 국내에서도 투자와 생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거기에 특히 경남 거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화오션.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가셨지요, 필라델피아 조선소?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예.

○**김대식 위원** 이것의 조선 건조능력을 10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추가 인수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김대식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지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그렇지만 일단 협상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문제는 이렇게 공격적인 미국 시장 진출이 국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부울경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업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기반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자리 창출 문제도 지금 다 빠져나가게 되면, 부울경의 전체 뿌리산업인 조선산업이 흔들리게 되면 부울경에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쨌든 피해 최소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기회에 경쟁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정부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 중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우리가 개발도상국하고 이렇게 죽 올 때는 외교부에서, 실질적인 정부에서 외교활동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업외교, 민간외교 또는 우리 국회에서 의원외교 이게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는데 정부에서 외교부라든지 어떤 한 부처에 이것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조정실장님은 전체 차관…… 실질적인 장관님들은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저도 국무회의도 들어가 보고 차관회의도 들어가서 일을 해 봤지만 전체적인 국무조정실장은 중심을 잡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즘 매주 차관회의 언제 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매주 목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목요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가가 통상 문제, 관세 문제 이게 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장님이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예,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더 많은데 오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의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국무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윤호중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배준영 위원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역균형발전 챙기시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당연히……

○배준영 위원 그러면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많이 챙기셨겠네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지요.

○배준영 위원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 2차가 언제 시작되는지 아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26년까지고 27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아닙니다. 정정하자면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죄송합니다.

○배준영 위원 말씀드린 이유는 내년부터 시작하는데 아직 계획이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이게 아주 좌초될 수가 있거든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챙겨 주실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배준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옹진군이 지금 10년 사이에 인구가 7.5% 줄고 서해 5도는 15%까지 줄니다. 제일 중요한 게 행안부장관님의 인식이신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지역균형발전에는 접경지역도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배준영 위원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서해 5도도 있지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협의를 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수도권하고 개성공단, 해주를 잇는 다리인데 지금 현재 영종에서 신도까지는 이미 완공을 했고 이제 개통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신도에서 강화까지 11.4km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국도로 신청하면 기재부에서 안 해 주고 또 행안부에서도 이것을 하려고 접경지역 계획으로 잡았는데 기재부에서 안 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강화군 공약이거든요.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좀 간소화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이런 계획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1단계 신도까지는 26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고요. 2단계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조정하는 문제를, 그러니까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필요해서 기재부와 또 국토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기재부2차관님, 내용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배준영 위원 좀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다음번에……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민자로 될 것 같으면 민자로 하고요, 안 될 것 같으면 재정사업으로 하고 정 안 되면……

○배준영 위원 민자로 하면 통행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국가유산청 청장님.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나와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강화가 1232년부터 1270년까지 고려왕조의 유적지였던 건 알고 계시고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알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39년간 남한의 유일한 고려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왕릉이라든지 유적지라든지 성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체적인 고도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강화에는 아무래도 고려시대 이후의 그런 유산이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묘라든가 많은 유산이 있어서, 고도 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강화군이 조사를 통해 가지고 신청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 전문가 조사와 그리고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준영 위원 감사합니다.

필요성은 인정하시는 거고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문체부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배준영 위원** 그래서 백제, 신라, 가야, 마한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고도기 때 문에 모두 국립박물관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강화는 궁지, 성곽, 왕릉, 제단이 모두 있는데도 지붕 없는 박물관이 사실 명예로운 이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붕을 씌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박물관을 만들어야 된다. 특히 세계사적인 항쟁의 현장이자 팔만대장경 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박물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은 동감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동감하고요. 현재 강화군에서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부산 사하갑의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 부산 사하갑의 이성권 위원입니다.

아까 오후의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무부장관님, 오전에 집단수용시설인 형제복지원·선감학원에 대해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 대해서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명예가 회복되어야 되고 또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법무부 차원에서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동일한 형태의 집단수용시설이 아까 제가 표를 보여 드렸듯이 아주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이성권 위원** 마찬가지로 판결에 의해 가지고 피해자가 승소를 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그런 결정을 내리시겠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하여튼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책임이 명확해지고 난 다음부터 발생하는 문제가 배상금 문제가 있습니다. PPT를 한번 다시 보시면요, 세로 줄을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단독의 피고인이 있는 경우가 있고 대한민국과 지자체가 공동피고인이 있는 경우, 지자체 단독의 피고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따로따로, 단독피고인일 경우는 거기가 전적으로 배상금을 내면 되겠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이성권 위원** 그런데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는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분을?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칙적으로 원고가 공동피고인 각자에게 다 청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연대 책임이든지 아니면 각자 책임이든지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청구할 수가 있는데 지자체가 과연 그런 배상할 능력이 있는지는 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원고 입장에서는 국가에 청구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성권 위원**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다음 PPT를 한번 보시지요.

지자체가 그러한 배상을 할 만큼의 충분한 여력이 없다는 것은 아마 장관님도 의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건데요.

부산의 경우 하나 사례를 드려 볼게요.

지금 이게 형제복지원이 계약을 맺었을 때의 내용입니다.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87년도에 부산시와 형제복지원이 부랑인 수용시설 위탁계약을 맺었는데, 둘째 줄에 보면 나옵니다. 75년부터 매년 위탁계약을 갱신해 오고 있습니다. 그게 자료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 조달과 관련해서 밑에 동그라미로 쳐 놔지요. 위탁비용이 나오는데 당시 부담, 그러니까 부산시 부담 관련해서는 국비가 80%를 내게 돼 있고 그다음에 시비가 20%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가가 국가사무로서 이 일을 했고 지자체는 아주 일부의 금액만 부담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선출직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중앙부처의 하나의 기관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이 점이 앞으로 계속 불거질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장관님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여쭙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일단은 국가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부담한 분 20%…… 만약 지방이 20% 비용 부담을 했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였고 지방정부의 경우는 그 당시에 선출된 권력이 아니고 중앙정부 산하기관에 불과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데 기준을 세워 놓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이성권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의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 시간상 여기에서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규백 국방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입니다. 논의된 지 10년 지났고 다행히 대통령께서 타운홀 미팅에서 정부 주관으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내에 전담 TF가 지금 구성이 됐고 여기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사전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문제, 해법을 만들 6자 협의체 구성이 결정됐는데 이 6자 협의체의 실제적인 구성과 또 실제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한 번도 이루어

지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의가 열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장 관님께서 생각하시는 향후에 우리 협의체에서 논의할 일정,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금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주관으로 TF팀이 구성돼 있고 또 해당 지자체 부지자체장 중심으로 TF팀이 구성돼서 두 트랙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트랙 운영을 기반으로 해서 광주·전남·무안과 또 국방부·기재부·국토부가 6자 회담 운영을 할 예정으 로 있습니다. 이미 부단체장하고는 두세 번 정도의 회의 운영을 했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할 예정이고.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무안 지방에 대한 당근과 채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RE100 산단이랄지 여러 가지 KTX 정차 문제 이런 문제들도 지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하 고 있고, 어쨌든 옥동자를 낚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안도결 위원 국방부장관님의 확고한 문제 해결 의지를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는 한번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안도결 위원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두 가지의 쟁점 아니겠습니까? 주민의 수용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구에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만 기부 대 양여 사업 모델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또 굉장히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역량이 필요 해서 이를 지자체가 주도해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 상당히 좀 회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는 그러한 형태의 사업 모델에 대한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그 답변을 제가 여기서 듣기 보다는 서면으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도결 위원 그리고 임기근 차관께 여쭙게요.

민관협력전대차관 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안도결 위원 이게 굉장히 빠르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네 가지 문제가 있어요.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사업이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중단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시작됐다.

그리고 사업을 하려면 현지에 대한 수요 파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별 사업 타당성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사전 작업 없이 대규모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절차상으로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이걸 건너뛰었어요. 그리고 또 더 문제는 문제가 되니까 이번 추경에서 다 그 사업을 걷어 냈어요. 이거야말로 정치적으로 편성됐다는 것 을 방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검토해서 가 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과정에서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리며, 특히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 주신 이소영 간사님, 박형수 간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소위원회 심사 활동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정부 측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나흘간에 걸쳐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여러 고견을 향후 정책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소위원회 심사에도 성실히 임하시어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대식·김종양·이성권·배준영·김위상·조계원·윤후덕·안도걸·허성무·박형수·이소영 위원님께서 회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해 감사원장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나흘 동안 늦은 시간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고한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직원들께도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의 상임위와 예결위 의정활동을 빈틈없이 보좌하시느라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우리 보좌진 여러분, 경위 여러분들과 속기사분들, 국회방송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위원회 회의를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전체 회의는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3분 산회)

○출석 위원(48인)

고민정	곽상언	김기웅	김남근	김대식	김상욱	김성희	김승원	김용만	김위상
김 윤	김재원	김종양	김한규	노종면	박민규	박형수	박희승	배준영	서범수
서왕진	송기현	안도걸	유영하	윤후덕	이강일	이병진	이성권	이소영	이수진
이재관	이종배	임미애	임종득	전종덕	정점식	정진욱	조계원	조배숙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천하람	최기상	한기호	한병도	허성무	황정아		

○청가 위원(1인)

차지호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전문위원 정대영

입법심의관 이동훈

입법심의관 최철민

○국회측 참석자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박태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대통령비서실

홍보소통수석비서관 이규연

사회수석비서관 문진영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하정우

대통령경호처

정책관 박관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장 방용승

감사원

원장 최재해

국무조정실

실장 윤창렬

국무1차장 김영수

국무2차장 김용수

국무총리비서실

실장 민기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임기근

교육부

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외교부

장관 조현

통일부

장관 정동영

차관 김남중

법무부

장관 정성호

국방부

장관 안규백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차관 김민재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여성가족부

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기획조정실장 김기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오동운

인사혁신처

처장 최동석

차장 박용수

법제처

처장 조원철

재외동포청

청장 이상덕

병무청

청장 홍소영

방위사업청

청장 석종건

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기획조정관 도준수

소방청

청장 허석곤

차장 이영팔

국가유산청

청장 허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고학수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김태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박선영

사무처장 송상교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송기춘

사무처장 박진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

○헌법재판소측 참석자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차장 김용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허철훈

사무차장 강동완

【보고사항】

○예비심사보고서 송부

2024회계연도 결산

(2025. 5. 3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35)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5. 5. 3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36)

이상 2건 8월 27일 소관 상임위원회(정무), 8월 28일 소관 상임위원회(교육·보건복지)의 예비
심사보고서가 각각 송부됨

○의견서 송부

8월 27일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의 2024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한 의견서가 송부됨